

2019 한국평화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

한반도 통일과 평화체제

| 일시 | 2019년 9월 6일(금) 14:00~1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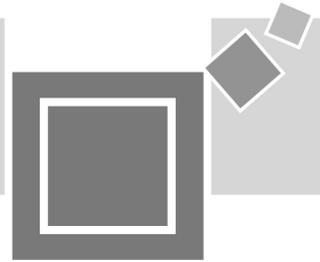
| 장소 | 선문대학교 국제회의실 (본관 606호)

| 주최 | 한국평화종교학회

| 주관 | 선문대학교 선학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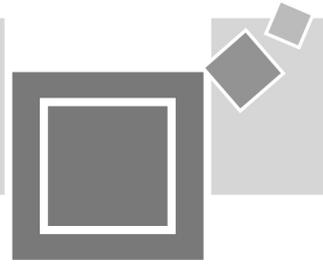
| 후원 | 세계평화교수협의회

프로그램 일정표



일 시	행사내용
13:30-14:00	▶ 접수 및 등록
14:00-15:00	▶ 개회식 및 기조강연 ▶ 사회 : 주재완 (선문대학교) • 개회선언 • 학회장 인사 : 김항제 (한국평화종교학회 회장) • 환영사 : 황선조 (선문대학교 총장) • 기조강연 : 신율 (명지대학교), 통일을 위한 권력구조
15:20-16:30	▶ 분과발표 1 _ 종교분과 ▶ 좌장 : 이찬수 (서울대학교) • 발표 : 1. 임형진 (경희대학교), 천도교의 통일운동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 2. 강화명 (선문대학교), 공생주의로 본 남북의 경제체제 통합 방향 • 토론 : 이재봉 (원광대학교), 남광규 (고려대학교)
16:50-18:00	▶ 분과발표 2 _ 평화분과 ▶ 좌장 : 강석승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 발표 : 1. 오기성 (경인교육대학교), 통일한국에서의 사회통합 연구 2.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 토론 :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한혜진 (동아대학교)
18:00-18:30	▶ 종합토론 및 폐회 ▶ 좌장 : 이재일 (한국평화종교학회 부회장)

목 차



■ 기초강연	1
• 기초강연	3
_ 신 울 (명지대학교), 통일을 위한 권력구조	
■ 분과발표 1 _ 종교분과	17
• 발표	19
_ 임형진 (경희대학교), 천도교의 통일운동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	
_ 강화명 (선문대학교), 공생주의로 본 남북의 경제체제 통합 방향	
• 토론	63
_ 이재봉 (원광대학교), 남광규 (고려대학교)	
■ 분과발표 2 _ 평화분과	69
• 발표	71
_ 오기성 (경인교육대학교), 통일한국에서의 사회통합 연구	
_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 토론	121
_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한혜진 (동아대학교)	

기조강연

기조강연 신 울(명지대학교)
통일을 위한 권력구조

2019 한국평화종교학회 추계학술대회

통일을 위한 권력구조

신 울(명지대학교)

목 차

- I. 통일 직후의 독일의 사회통합
- II. 경제력의 향상과 사회통합
- III.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권력구조
- IV. 결론

통일은 단순히 체제와 체제간의 시스템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이란 상이한 권력구조 하에서 수십 년간 살아왔던 사람들 간의 “이질성의 극복”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쉬운 과정이 아니다. 감성주의에 젖은 나머지 통일이 되기만 하면 남과 북의 주민들이 춤추며 반길 것이라는 감상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통일이란 감성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져야만 제대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만이 통일 이후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 역시 통일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독일이 통일에 있어 나름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통일 이후 나타나는 어려움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즉, 독일이 통일 이후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 극복했기에 우리에게 통일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일은 통일과 병행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대략 몇 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점은, 독일 국민들은 통일을 결코 낭만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통일 이전 서독 국민들의 상당수, 특히 지식인들은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통일 이후 발생하는 제반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생각하며, 통일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같은 언어, 같은 역사, 같은 문화를 누리면 당연히 하나의 국가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독일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런 사고를 가능케 했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의 65% 그리고 체코의 일부 지역과 헝가리의 일부 지역도 독일어를 사용한다. 더구나 독일은 이들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문화와 독일의 문화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과의 통일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이른바 소독일(kleines Deutschland)주의와 대독일(grosses Deutschland)주의 논쟁이 그것이다. 즉, 소독일 주의자들은 지금 현재의 독일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독일주의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들 전부를 통일해야만 진정한 통일의 완성이라는 논지를 펴고 있었다. 그런데 대독일주의자들의 주장은 극우적 사고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대독일주의는 독일의 팽창주의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독일주의가 독일의 주류를 이루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동서독이 나뉜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현상유지라는 차원에서 일종의 소독일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서독 지식인들은 통일에 소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이란 과거 독일의 극우주의, 즉 나찌즘의 부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서독 지식인들은 갖고 있었다. 이런 측면도 서독 주민들 중 상당수를 통일에 대해 소극적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그런데 이런 점이 오히려 통일의 부작용을 다각도로 축소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즉, 통일을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파악했기에 맹목적 통일 지상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통일을 잘 준비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부분은 독일의 권력구조가 바로 내각제라는 점이다. 즉,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비교적 충실하게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가졌기에 독일은 “통일 이후의 통일”을 보다 용이하게 이룰 수 있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독일은 통일 직후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갈등을 통일 독일은 어떻게 축소했을까?

I. 통일 직후의 독일의 사회통합

통일 이전만 놓고 보자면, 동독 사회는 어느 정도의 “사회 통합”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동독의 사회통합이란 사회주의 정부 혹은 국가에 의한 강압적 통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즉, 과거 사회주의 동독은, 억압적인 정부에 의한 강제적 통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이 발생한다. 강압적이고 억압적인 방식의 통합이 과연 자발적 차원의 규범이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바로 그 의문점이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강요된 사상은 내면화된 공통적 가치나 규범과 같은 수준에서 볼 수가 없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만일 동독 사회주의 정권이 강요한 이념이 동독 주민들의 가치나 규범을 내면화 시킬 수 있었다면, 동독에는 나름의 사회적 통합이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동독 지역 주민들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이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재화의 획득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특정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를 경험했던 동독 주민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노동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런데 통일은 이들 동독 주민들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안겼다.

〈표 1〉

	서독	동독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앞으로 실업자로 전락할 것을 두려워함	9%	28%
자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현재 실업상태에 있거나, 앞으로 실업상태로 전락할 것임	10%	34%
앞서 언급한 4가지 경우중 최고한 한 가지 이상 해당됨	16%	46%

출처: Allensbach Archives, Ifd Surveys 5075, 5076, 5078 (1993)

〈표 1〉을 보면 상당수의 동독 지역 주민들은, 통일 이후, 자신들의 직업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자신이 자신의 원하는 생업을 통해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필자 주)은 동독 주민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 그 이유는 이들이 살고 있던 사회가 마르크시즘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고, 이러한 세계관은 노동에 대한 의미를 서구 시민 자본주의 사회보다 훨씬 가치 있게 평가하기 때문이다.”¹⁾

이런 주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독 주민들이 통일 이전에 생각했던 통일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통일 이전 동독 주민들에게 통일이란 곧 “윤택한 삶”의 보장을 의미했

1) Volker Ronge, 1990, “Die soziale Integration von DDR-Übersiedler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 1-2, pp. 39-47, 여기에서는 p. 43

다. 통일 이전, 동독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피폐한 이유를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찾았다. 즉, 사회주의적 계획경제 때문에 자신들의 능력이 철저히 무시됐으며, 동시에 능력 개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고, 노동을 통해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의 정치화(Politisierung der Wirtschaft)”와 “직업 경력의 정치화(Politisierung der beruflichen Karrieren)” 때문에 자신들이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경제의 정치화” 혹은 “직업 경력의 정치화”란, 동독의 집권당인 사회주의 독일 통일당(SED)의 당원이 아니면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처해있던 동독 주민들은, 통일이 되면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 즉, 통일이란 능력 위주의 사회로의 편입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²⁾. 하지만, 이러한 통일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생각은, 통일 직후부터 여지없이 무너졌다. 통일 직후 동독 주민들이 직면한 사회는 이들 동독 주민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보장하지도 못했고, 능력만큼의 보수를 받는 사회도 아니었다. 이런 바람과 현실의 격차는 곧바로 실업에 대한 공포로 이어졌다. 동독 주민들의 실업에 대한 공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았던 이들이 갖는 공포감 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이들 동독 주민들이 사회주의 하에서의 “노동의 신성함”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은 동독 주민들이 비록 강압적인 형태이긴 했지만, 사회주의 이념에 의한 가치의 내면적 통합에 어느 정도 포섭됐음을 의미한다. 즉 동독 주민들에게,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생산한 “가치의 부분적인 내면화”가 존재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종류는 다르지만 동독지역 청소년들에게도 통일이란 두려움을 가져다 준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동독 지역의 청소년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독 지역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부분적이거나 서구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동독지역에서 텔레비전이 보급돼, 흑백으로나마 서독의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됐을 때 동독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는 록 음악(Rock Music)이 유행하기 시작했다³⁾. 동독 지역의 록 음악 유행은 서구지역보다는 10년 정도 늦은 것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를 통해 동독 청소년들은 서구에 대한 동경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동경심은 동독지역 청소년들에 하나의

2) Ronge(1990), p. 45

3) Holm Felber u. Hans-Jörg Stiehler, “Rock und Pop. Die Routinen des alltäglichen Ausstiegs,” in Bernd Schorb u. Hans-Jörg Stiehler(Hrsg.), Neue Lebenswelt. –neue Medienwelt? Jugendliche aus der Ex- und Post-DDR im Transfer zu einer vereinten Medienkultur (Frankfurt am Main: Opladen, 1991), pp. 61–75. 여기에서는 p. 61 ff.

세계를 만들었다. 그 세계란 다른 아닌 “텔레비전 속의 서구사회”였다. 그러니까 동독의 집권당인 사회주의 독일 통일당(SED) 조직의 세포로서의 세계와 개인만의 세계 그리고 텔레비전 속의 세계, 이렇게 세 가지 세상 속에서 이들 동독지역 청소년들은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이들이 “경험”했던 서구사회, 이들이 “동경”했던 서구사회는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산물이 아니라, “연출된 간접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기에, 이들은 실제적인 서구사회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다양성은 다원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는데, 이들의 사고는 사회주의적 국가주의 사고였다. 이런 사고는 통일이후 이들이 정체성을 갖는데 상당한 혼란을 겪게 만들었다. 이들 동독지역 청소년들이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졌다는 것은 1992년 실시된 셸 스터디(Shell-Studie)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동독 지역 남성 청소년의 약 56%, 그리고 여성 청소년의 약 64%가 국가를 위해 모든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⁴⁾. 이런 사고는 과거 동독 정권에서 만들어진 사고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인 1989년까지 동독 대학생들이 가졌던 사고와 아주 유사하다. 동독 대학생들의 34%는 동독 사회주의 체제와 자신의 운명을 동일시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⁵⁾, 이런 사고 역시 체제중심의 국가주의 속에 자신을 매몰시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이들 동독지역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의식구조는 역설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에 의한 인위적 생활영역의 통합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부분은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II. 경제력의 향상과 사회통합

앞서 논했듯이, 통일이란 단순한 정부 기구간의 통합, 이념간의 통합 그리고 이에 기반한 체제간의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본래적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동독과의 통일을 생각하면, 통일이란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체제간의 통합, 즉, 이들 동독 주민들의 국가주의적 사고를 주입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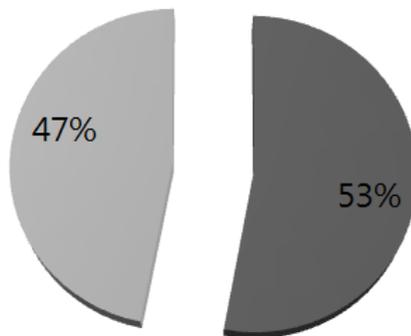
4) Shell-Studie: Jugend '92, (Fraifirt am Main: Opladen, 1992), Bd, 1, p. 265

5) Dresdener neues Nachrichten: Jugendsoziologen zeichnen Bild der letzten Sozialismusgeneration, 1992년 5월 29일

이를 통해 이들의 생활영역을 지배했던 제도와 기관들이 통일의 과정 속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이들이 아노미 현상을 겪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 동독주민들의 사고를 적응시켜 새로운 생활영역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룩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결국 통일 이전 동독에 존재했던 사회적 통합을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생활영역의 통합 즉,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특히 과거의 동독주민들의 사고체계의 형성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생활영역의 통합은 사회주의 정권에 의해 강압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의 통합은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인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통합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라는 “비인위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발적 동의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라는 “자연발생적 비인위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의는 자본주의의 규범과 가치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고, 이런 규범과 가치에 대한 동의는, 동독주민들의 새로운 생활영역의 창출과 사회에 대한 적응의 기본이 됨과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정부에 의한 체계 통합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독 주민들은 통일 이후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를 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사고를 가지게 됐을까?

〈그림 1〉 동독지역 주민들 의식(199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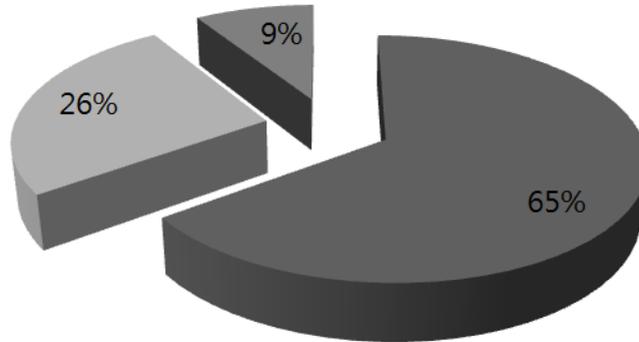
■ 자본주의를 추구해야 ■ 자본주의를 추구하지 말았어야 한다.



출처 : Institut für Demoscopie Allensbach(1993년 설문조사) Ifd Surveys 5044, 9009, 5070 (1993)

〈그림 2〉 동독지역 주민 의식(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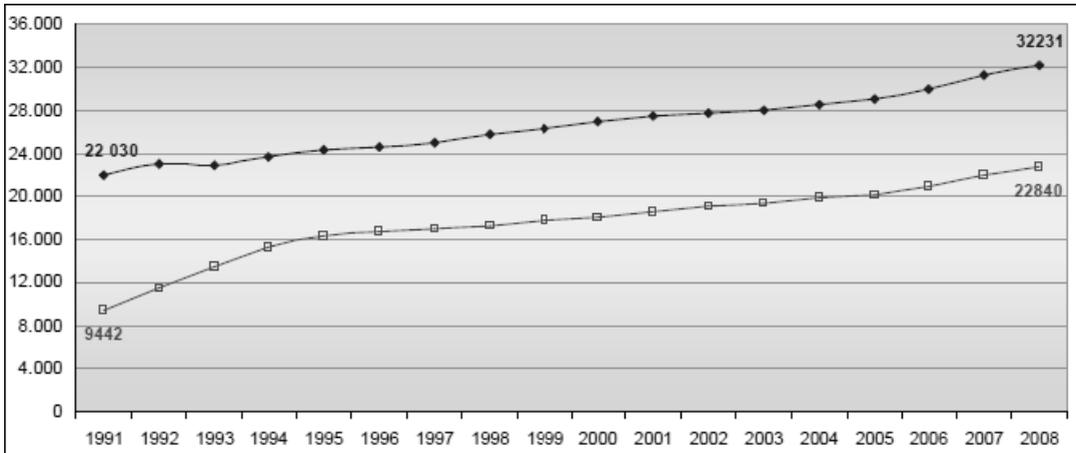
■ 자본주의화에 찬성 ■ 자본주의화에 반대 ■ 모르겠음



출처: Institut für Demoskopie Allensbach(2006년 설문조사), Klaus Schroeder,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Mauerfall – eine Wolstandsbilanz. Gutachten für die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schaft (INSM)*, (2009), p.80의 데이터를 재구성함

위의 그림에서 보여주는 사실은, 통일 직후 동독 주민들의 절반은 자본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노동 기회 박탈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자본주의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이것은 통일이 곧바로 사회적 통합을 가져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통일 초기는 단순한 체계 통합을 의미하고, 사고의 변화에 따른 생활 영역의 통합은 발생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 후 15년 이상이 지난 2006년 조사를 보면, 상황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즉, 15년 이상의 시간 속에 절반이상의 동독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자본주의의 가치체계나 규범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동시에 자본주의 정부와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동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언급하자면, 15년 이상의 시간 속에 일정 수준의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통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동독주민들 개개인의 경제 여건 향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즉, 개개인의 경제여건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이들 동독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동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통일 이후 동독 지역 주민들의 1인당 GDP는 꾸준히 성장했다.

〈그림 3〉 서독지역과 동독지역의1인당 GDP 변화추세(단위: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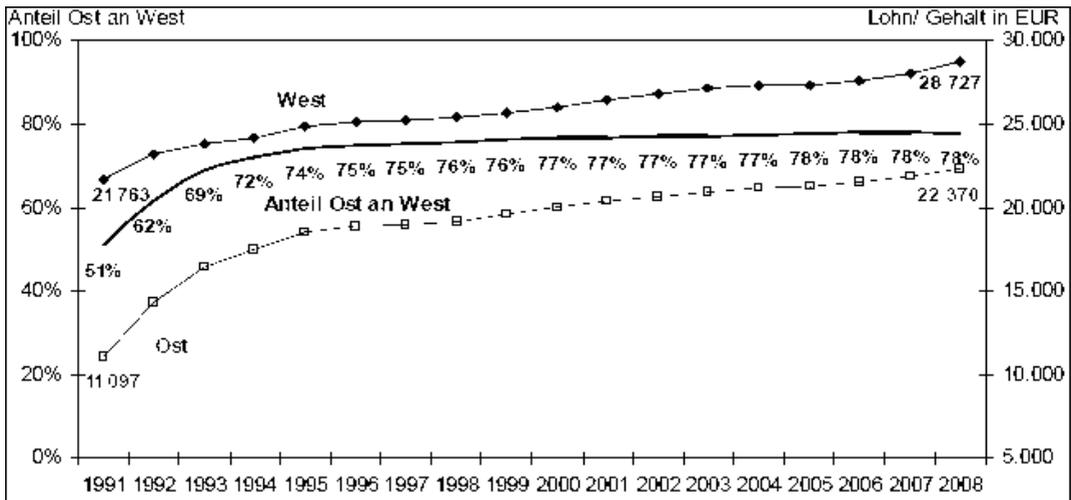
출처 : 독일통계청(Statistisches Bundesamt), Arbeitskreis VGR, Klaus Schroeder,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Mauerfall – eine Wohlstandsbilanz. Gutachten für die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schaft (INSM)*, (2009), p. 50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서독 지역과 동독지역의 1인당 GDP 차이는 분명히 있고, 또 그 격차는 꾸준히 존재하지만, 그림에도 동독지역의 1인당 GDP는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개개인의 소득의 상승은 앞서 언급한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을 보다 용이하게 했고, 그런 편입을 통한 사회통합이 어느 정도 가능케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1인당 GDP는 증가함에도 서독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임금 격차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런 임금 격차이다.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통일 직후, 동독지역 노동자들은 서독 지역의 노동자들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동독 주민들에게 “하나의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독주민들은 통일을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발휘할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임금격차는 통일 역시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⁶⁾. 결국 동독주민들의 입장에서, 과거보다 소득은 향상됐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통일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해도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동독주민들이 30% 정도나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조금씩 개선됐고, 지금도 개선되고 있다.

6) Werner Weidenfeld u. Karl-Rudolf Korte(Hrsg.), *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Bundeszentrale fuer politische Bildung, 1993), p. 769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독주민들은 2008년 기준 서독지역 대비 78%에 달하는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은, 동독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비록 서독과 차이는 있지만, 동독 주민들의 절대적 소득 수준의 향상은 〈그림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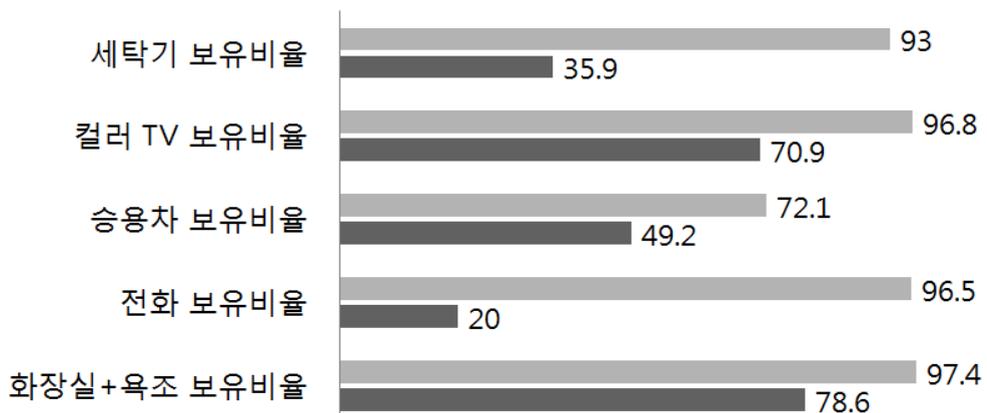
〈그림 4〉 동독지역과 서독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및 수입 비교



출처 : Arbeitskreis VGR der Länder, Klaus Schroeder,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Mauerfall – eine Wolstandsbilanz, Gutachten für die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schaft (INSM), (2009), p. 29

〈그림 5〉 동독지역 가계의 소비재 구비수준

■ 2007 ■ 1990



출처 : SOEP Monitor 1984–2007, Klaus Schroeder, Ostdeutschland, 20 Jahre nach dem Mauerfall – eine Wolstandsbilanz, Gutachten für die Initiative Neue Soziale Marktschaft (INSM), (2009), p.36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독주민들의 소득 수준의 향상과 구매력의 향상은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통일 직후부터 동독 주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었던 정치적 기회가 없었다면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III.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권력구조

독일은 집권당인 기독교 민주당(Christliche demokratische Union, 약칭 CDU), 제 1 야당인 독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약칭: SPD), 자유민주당(Freiheitliche demokratische Partei, 약칭: FDP), 녹색당(Die Grüne), 좌파 정당인 민주사회당(Partei für deutschen Sozialismus, 약칭: PDS), 그리고 극우정당인 공화주의자(Republikaner, 약칭 Rep.), 독일 인민연합(Deutsche Volksunion, 약칭 DVU), 독일 민족주의당(Nationalistische Partei Deutschlands, 약칭 NPD) 등의 정당이 존재했다.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면서 기민당(CDU), 사민당(SPD), 자민당(FDP) 3당의 정당구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런 구도는 1989년 통일 직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는 자유민주당(FDP)의 쇠퇴로부터 비롯됐다. 독일 자민당은, 보수당인 기민당이 집권하면, 기민당의 연정 파트너였고 그래서 이를 통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해왔는데, 바로 그런 자민당이 3당의 위치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민당 대신 녹색당 등이 3당의 위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민주사회당(PDS)의 등장이다. 민주사회당(PDS)은 통일 이전 동독의 집권당이었던 사회주의 독일통일당(Sozialistische Einheit Deutschland: 약칭SED)의 후신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통일 이전 동독주민들은 당시 서독주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통일을 원함과 동시에 사회주의 독일통일당(SED)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기에, SED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이 약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막상 통일이 되고 난 이후 치러진 선거의 결과를 보면, 이론 추론은 틀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 통일이후 주요 독일정당의 연방의회선거 득표율 (단위: %)

	1990년			1994년			1998년		
	서독지역	동독지역	독일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독일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독일전체
기민당/기사당	43.7	41.8	43.3	42.1	38.5	41.5	37.4	23.5	35.2
사민당	25.9	24.3	33.5	37.5	31.5	36.4	41.9	34.4	40.9
자민당	10.6	12.9	11.0	7.7	3.5	6.9	7.0	2.6	6.2
녹색당	4.7	0.1	3.8	7.9	4.3	7.3	7.3	3.6	6.7
민사당	0.3	11.1	2.4	1.0	19.8	4.4	1.3	20.3	5.1

* 상기 득표율은 정당에 대한 투표인 제2투표(Zweitstimmen)의 결과임.

자료: Emil Hübner, hrsg. *Jahrbuch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92* (München: dtv Verlag, 1991), p.215; "Appendix: 'Superwahljahr' 1994: Key Dates," Special Issue on Superwahljahr: The German Elections in 1994, *German Politics*, Vol.4, no.2 (August 1995), pp.160-164;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land(<http://www.statistik-bund.de/wahlen/ergeb98>)의 재구성. (김학성, 독일통일이후 '내적 통일'의 과정과 문제점에서 재인용)

위의 표를 보면, 민주사회당의 약진이 유난히 동독지역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된 독일 사회가 분열돼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동, 서독 간에 분열돼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경제적 차원의 불만이 다시금 사회주의독일 통일당(SED)의 부활로 이어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동독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과 소외감이 과거 정권을 그리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민주사회당이 동독 주민들의 경제적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약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동독 주민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당이란 본래 동독지역에 뿌리를 갖고 있던 정당밖에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동독주민들에게 민주사회당은 대중정당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통일 직후 동독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또 하나의 정치적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극우정당의 대두였다. 1994년 11월 11일 동독지역 삭센(Sachsen)에서는 주의회(州議會) 선거가 치러졌는데, 1990년 해당지역의 주의회 선거 때보다, 극우 정당인 공화주의자(Republikaner)가 1.3% 더 많이 득표했다. 이는 삭센 주(州)만의 특징이 아니었다. 역시 동독 지역인 튀링엔(Thüringen)의 주의원 선거 역시, 통일 이후 첫 선거인 1990년 주의회 선거 때보다 1994년 10월 16일 실시된 선거에서, 극우정당들이 0.5%더 득표했다. 이밖에도 1994년 10월 16일 실시된 동독 매켄부르크 포퓰멘(Meckenburg-Vorpommern)의 주의회 선거 결과도 마찬가지로 현상을 보였다⁷⁾. 이러한 극우정당의 대두 역시, 동독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불만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독일은 사회적 불만이 비제도적 측면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독일은 의원 내각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다.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선에서 승리한 측이 득표비율과는 상관없이 행정부 대부분을 장악하게 된다. 즉 대통령이 행정부의 장관 전부를 임명하며 국정 운영에 있어 그 방향성을 독자적으로 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내각제 하에서는 대체로 특정 정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서 영국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양당제 하에서 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 영국의 민주적 전통이 허약했다면, 영국은 독재로 흐르기 쉽다는 말이 있다. 내각제란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융합이 발생하기 쉬운데, 양당제 하에서 내각제를 실시하면 행정부를 장악한 정당이 입법부도 지배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당제 하에서는 다르다. 다당제 하에서의 내각제에서는 대부분 연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기에 최소 두 개 이상의 정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발생한다. 다수의 정당이 연립해서 정부를 구성할 경우,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수의 의견들도 제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각제 하에서의 수상의 임기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헌법적 사안은 아니어서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해 수상을 바꿀 수 있다. 이는 내각제하에서의 국민적 요구에 대한 대응성은 대통령제 보다 뛰어남을 알 수 있다.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뛰어나고, 소수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해야 하는 제도가 내각제라면, 이 권력구조 하에서 국민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해소해 줄 정당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해당 정당이 연립내각의 일원이 됐을 경우 자신들의 요구가 일정 부분 정부 노선에 반영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회적 불안은, 불만이나 소외감을 갖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부분적이거나 자신들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경우, 사회적 불안 요소는 상당부분 감소된다. 국민들이 이런 “정치적 효능감”을 가질 경우, 사회적 불안 요소가 상당부분 감소한다는 것인데, 이런 측면에서 내각제 하에서 일어나는 다수의 정당간의 연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 이후 동독주민들이 사회적 불안 요소로 등장하지 않았던 또 다른 요소로 연방제를

7) Mayers Jahresreport 1994, 161-164

들 수 있다. 독일의 연방제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철저히 분리돼 있다. 중앙정부는 외교, 국방, 사회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교육, 문화, 언론, 치안, 그리고 지역조세까지 담당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방세는, 절반만 중앙정부가 집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정부와 시(市)가 사용하도록 법에 명문화 돼있다. 그렇기에 지방재정이 중앙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용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재정이 중앙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방 정부, 즉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중앙에서 내고, 또 실제 중앙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분데스라트(Bundesrat)이다. 분데스라트는 주정부의 수반과 그 주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장관들로 구성된다. 그런데 브레멘(Bremen)과 함부르크(Hamburg) 그리고 베를린(Berlin)은 도시이면서 주(州)이기 때문에, 이들 도시의 시장과 장관들 분데스라트의 구성원이다. 각 주(州)의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라고 할 수 있는 분데스라트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선, 분데스라트는 입법 제안에 있어 최고 수준의 기관이다. 또한, 다른 통로를 거친 입법 제안들을 재정적, 정치적, 전문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제안된 법안들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Bundestag)을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권한들을 분데스라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분산이 제대로 시행된다는 것인데, 이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권력 행사와 국가 운영의 방향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바람을 중앙 정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지역 주민들의 권리 침해나 소외감을 중앙 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동독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이런 합의제적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불만이 제도에 반영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바로 이런 제도들 덕에 독일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사회통합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IV. 결 론

우리나라에서 통일은 지상의 목표이자 민족 차원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통합이라고 할 때, 지금과 같은 권력 집중 형 대통령제가 적합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은 제약적 대통령제를 유지하게 되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민감성이 부족하게 되고, 민감성이 부족하면 국민들의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상당할 것인데, 지금의 권력구조로는 이들의 이런 불만을 아우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통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다수제적 권력구조는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에 그다지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결국 부작용 적은 통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합의제적 권력구조인 내각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물론 현재 내각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매우 부정적임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가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집중해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민주주의적 전통이 취약한 국가들 대부분이 대통령제를 권력구조로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민주적 전통이 튼튼한 국가 대부분은 내각제를 권력구조로 가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예외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영국,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내각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면 통일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통일 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켜야만, 통일 이후의 사회적 비용을 축소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고, 그런 준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분과발표1

종교분과

발 표

임형진(경희대학교)

천도교의 통일운동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

강희명(선문대학교)

공생주의로 본 남북의 경제체제 통합 방향

토 론

이재봉(원광대학교)

남광규(고려대학교)

천도교의 통일운동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

임형진 (경희대학교)

목 차

- I. 서론
- II. 천도교의 통일운동
- III. 천도교의 민족통일론
- IV. 맺음 말-평화체제의 비전을 그리며

I. 서 론

지난 2018년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적 노력의 결과가 드러난 해였다. 4월 27일과 5월 26일에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 회동에 이어 9월달에는 평양에서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등 새로운 남북관계가 열렸다. 또한 북미간의 핵협상으로 인한 긴장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2019년 6월 30일에는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판문점 회동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간의 일련의 변화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청산되고 우리는 하나라는 남북공동체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리고 전 세계에는 그동안 냉전의 외로운 섬이었던 한반도가 탈냉전의 시대적 대세를 타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는 선언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세계에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과 능력을 과시한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전쟁과 대결 그리고 반목으로 이어지던 민족사를 청산하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민족문제의 해결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남북화해의 분위기는 우리 사회의 발전적인 모습이자 우리 민족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평화체제의 초석

이 될 것이 틀림없다.

최근의 남북의 평화적 분위기의 지속적인 유지와 심화 발전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종교가 개인의 구원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역사이해를 바탕으로 실존적인 문제에도 응답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종교는 민족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적극 임해주어야 한다. 특히 종교의 통일운동은 곧 우리의 민족문제와 직결된다. 민족운동과 종교는 원래 밀접한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민족운동에는 그 민족의 양심과 역량과 지혜가 총동원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운동은 종교 또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종교 또는 종교적인 것을 바탕으로 삼지 않으면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종교운동이 대부분 많은 핍박과 압제를 뚫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왔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억불숭유정책 하의 조선에서도 의병운동을 주도한 것은 언제나 탄압에 대상이었던 불교였다. 조선 말기 대탄압 속에서 근대화를 이루는데 공헌한 것은 기독교였고, 그 시절 봉건적 잔재 속에서 창도되어 민족운동을 주도한 동학 역시 종교가 출발이었다. 이 시대 역시 민족의 과제에 종교 및 종교인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통일운동에 앞장 선 수많은 종교인의 순교자적 모습은 이런 우리의 특수상황에 대처한 용기 있는 행동과 역할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통일운동이 가장 현실적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종교의 통일운동은 민족의 삶의 이상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종교의 통일운동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도 원대한 이상과 목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동학 시대를 끝내고 천도교로 개명하면서 근대적 종교로 거듭나기 시작한 천도교는 일제하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민족운동을 전개했기에 오늘의 분단 상황 극복에도 어느 중단 못지않은 열의와 행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북한지역의 최대 종교로 자리하고 있는 천도교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남북교류와 통일운동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객관적 조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학시대 이래로 천도교는 오랜 기간동안 탄압과 감시의 대상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약한 교세가 통일운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의 활성화에 제한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천도교는 통일운동에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천도교의 통일운동과 나아가 향후의 평화체제를 위한 이상적 통일국가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천도교의 통일운동

1. 해방 후 천도교청우당¹⁾의 자주적 민족통합운동

해방 후 청우당 부활전당대회는 10월 31일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지방대표 1천여 명이 참석하여 민족통일기관 결성촉진, 전재동포 구제, 실업대책, 기관지 발행 등을 결의하였다.²⁾ 남쪽에서의 청우당 재건에 이어 북쪽에서도 청우당은 부활되었다. 해방 후 이미 상당수의 교세를 자랑하던 북쪽 지역에서는 1946년 2월 8일 평양에서 천도교청우당 결성대회를 갖고 뒤이어 2월 18일 당을 재건하였다.³⁾ 이어 5월 31일 청우당 함북도당을 결성하였다.⁴⁾

해방 후 청우당의 첫 번째 정치적 활동은 미군정의 인민공화국 부인에 대한 총부의 핵심간부인 정광조의 유감표명이었다. 이것은 청우당의 인공에 대한 인정여부를 떠나 우리의 힘으로 수립한 정치단체에 대한 외세의 간섭에 반대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청우당의 이후 활동이 '자주'⁵⁾라는 점에 가장 주목하고 있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또한 천도교 중앙총부는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를 받들어 속히 강토를 회복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천도교에서는 “환국한 임시정부 영수들을 중심으로 전민족적 총력을 집중 통일하여 민족자주의 완전한 정권을 수립하도록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김구 등이 9월 3일 발표한 「임시정부당면정책」 14개조를 찬성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청우당은 “17년간 義로써 싸워온 임시정부에 대하여 최대의 경의로써 그 지지를 표명하고, 아울러 민족 통일전선을 결성함으로써 조선독립의 완성을 촉진하자는 의미로 기독교, 대종교, 불교, 천도교, 유교, 천주교의 6 종교단체가 조선독립촉성종교단체연합대회를 조직하였다”고 하였다.

1) 천도교청우당은 31혁명 이후 천도교단이 청년들 중심으로 만든 교단의 전위단체이다. 이 단체를 중심으로 천도교는 일제 강점기 노동자, 농민, 여성 그리고 어린이운동 등 7대부문운동을 전개하다가 1938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이하는 청우당으로 약칭함)

2) 위원장에 김기전, 부위원장 이응진, 총무국장 마기상, 정치국장 승관하, 조직국장 이석보, 문화국장 구중희, 특별국장 마기상 그리고 중앙위원 47인 등을 임명했다. 『자유신문』 1945. 11월 5일; 『매일신보』 1945. 11월 6일.

3) 위원장 김달현, 부위원장 박윤길·김정주, 정치위원 김달현·박윤길·김정주·전찬배·김윤걸·백세명·김도현, 상무위원 상기 7명과 김진연·한몽응·이춘배·조기주·장학병·김봉업 등이 선임되었다. 『北韓年表』, 국토통일원, 1980, 31-32쪽.

4) 『북한년표』 44쪽; 성주현, 「해방후 천도교청우당의 정치이념과 노선」, 『경기사론』 4, 5호 합본호, 2001.

5) 천도교단이 정치적 용어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자주'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에서 쓰는 자주가 단지 외세를 배격하고 남북한끼리의 협의를 우선한다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용어인데 비해 남쪽 천도교의 자주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지배를 벗어 던지며 사람과 자연사이의 착취를 종식시키며 사람과 신 사이의 복종구조를 바로 잡아 생명의 참 가치를 실현하고 밝게 드러내는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천도교중앙총부, 『신인간』 2000년 8월호, 88쪽 참조.

또한,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임시정부가 12월 28일 탁치반대국민총동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자, 청우당은 이에 동조하여 같은 날 조선민족이 아직 자주·독립할 자격이 없다는 구실로 조선을 신탁통치하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⁶⁾ 또한 조선민족이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명백히 미소 양군의 남북 주둔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탁통치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 黨은 삼천만 대중의 선두에 서서 자주적 완전독립을 戰取하기까지 결사적 항쟁을 계속하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강경한 결의문을 발표하였다.⁷⁾ 이어서 청우당은 김구 등이 주도하는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가 조직되자 위원장 김기전, 간부 정광조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⁸⁾ 또한, 청우당의 산하단체인 천도교청년회는 조선공산당이 신탁통치를 찬성한 것에 대하여, 1946년 1월 16일 조선공산당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⁹⁾

그러나 정국이 초기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우익은 비상국민회의, 좌익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결성 대립하자 청우당은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적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치적 기본노선을 이탈한 편좌 편우의 모든 경향을 양기하고 절대다수인 민중을 기초로 한 여러 집단과 양심 있는 개인들의 연결로 민족적 대동단결을 축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일제 강점기 기간동안 민족의 대동단결을 외치며 한국민족주의운동을 대표했던 청우당의 계승이었다. 또한 청우당은 민족적 분열은 미소 양군의 분할점령에 기인하였으므로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는 미소 양군의 철수는 원하지만 우선적으로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과 양국의 내정간섭의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즉 미소 군정당국이 민족통일과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 준비된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는 단체의 선정 문제로 결국 미·소간의 의견충돌¹⁰⁾로 인해 5월 8일 결렬되었다. 북한의 일사불란한 정치적 의견통일에 당황한 미군정은 남한 내에서 극우와 극좌파를 배제한 온건 좌우파인 중간세

6) 『중앙신문』 1945. 12월 30일

7) 『자유신문』, 1945. 1월 30일

8) 『서울신문』, 1946. 1월 1일. 당시 천도교인으로 이에 참여하였던 사람으로는 위원장 권동진을 위시하여 위원에 오세창·백세명·이근오·이인숙 등이 참석했다.

9) 『서울신문』, 1946. 1월 19일

10) 의견충돌의 핵심은 모스크바 결의문에 담겨있는 ‘민주주의’의 해석 다툼이었다. 즉 조선의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조선내의 민주주의적 단체와 협의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 대상이 되는 민주주의적 단체가 누구인가를 놓고 대립한 것이다. 소련은 모스크바 결의문에 동의한 단체만이 민주주의적 단체라는 주장이었고, 미국은 민주주의는 반대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결의문에 반대한 단체도 협의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력으로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의도에서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였다. 청우당은 7월 좌우합작통일촉진회를 구성하고 이 운동의 촉진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군정은 좌우합작위원회의 건의대로 46년 10월 12일 ‘조선 과도입법위원의 창설에 관한 법령’을 통과시키고 법령에 따라, 12월 7일 임명된 관선의원 45명과 선출된 민선의원 45명이 발표되었는데, 청우당에서는 이응진이 관선의원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최동오와 정광조가 각각 좌우합작위원회와 천도교를 대표하여 관선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12월 12일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개원식에 이응진은 청우당의 대표로 참석하였다.¹¹⁾

그러나 보수 기득세력으로 구성된 과도입법의원에서 청우당이 할 일은 많지 않았다. 결국 군정연장 내지는 한반도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소 양국의 의도와 이에 편승해 단독정부를 수립코자 한 매국세력을 확실히 파악한 청우당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자주적 민족통합에 의한 통일정부수립운동이었다.

1947년 10월 들어 미소공위가 임시정부 수립에 대한 진전이 없자 한국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갔다. 한국문제의 이관에 대해 극우세력들은 환영일색이었지만 민족주의 세력에게는 분단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것이었다. 10월 28일 유엔정치안전보장위원회는 한국문제를 상정 토의하고 11월 14일 신탁통치를 거치지 않는 한국독립과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를 통한 한국통일안을 결의하였다. 이에 대해 청우당은 국제적 관련성을 가진 조선 독립문제가 유엔총회에서 남북총선거로서 통일정부를 수립케 된 결의안에 대하여 절대 찬성하나 유엔 조선위원단의 사업이 여의치 못할 경우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논평하였다.¹²⁾

그러나 1948년 들어 조선위원단의 활동은 소련의 반대로 북한 입정이 거부되었다. 남북 자유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 소련측의 반대로 무산되자 청우당은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현실적 대응으로 남북한 천도교인이 남북분열을 저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3월 1일 총궐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의 단정수립을 반대하고 남북한 주민의 자유총선거를 통한 자주적 민족통합의 통일국가수립을 주장한 이 운동은 사전에 발각되어 남한에서는 성명서 발표로 끝났고 북한에서는 맹산, 양덕, 덕천, 순천, 영변 등 평안도 일부지역에서만 전개되었다.

남한의 천도교중앙총부와 청우당의 비밀지령에 의해 추진된 이 사건으로 북한에서는 평양의 김명희, 김덕린, 김일대, 승관하, 김도현 등 천도교 및 청우당 주요 인사와 1만7천여 명이 교인이 검거되어 희생되었다.¹³⁾ 당시의 통일선언문 중 통일공약 5장은 다음과 같다.

11) 『조선일보』 1946. 12월 12일.

12) 『경향신문』 1948. 1월 16일.

1.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사에 의거치 않는 어떤 정치체제 어떤 경제구조도 단호히 이를 배격한다.
2. 우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토통일과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모든 세력의 준동을 봉쇄한다.
3. 우리는 유엔의 결의를 성실히 준수하여 유엔 한국위원단 입국을 환영한다.
4. 우리는 남북통일정부가 수립되기 최후 일각까지 이 운동을 계속한다.
5. 우리는 이 운동을 비폭력·무저항주의로 일관한다.¹⁴⁾

통일공약 5장은 당시 천도교의 통일운동의 뚜렷한 기본방향과 원칙의 제시로 볼 수 있다. 이 공약은 민족자결원칙, 민주원칙, 평화원칙, 국제협력원칙 등 통일의 기본원칙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4, 5항은 기미년 3·1운동 당시의 그것과 흡사함을 보이는 데 이는 3.1혁명 이래로의 천도교단의 일관된 행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유총선거를 주장하는 ‘민주원칙’과 외세개입반대와 민족단결을 내세운 ‘자결원칙’ 그리고 비폭력의 ‘평화원칙’ 등은 천도교의 변함없는 통일원칙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남북총선거가 불가능하게 되자 김구와 김규식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요인회담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이를 받아들여 4월 14일부터 평양에서 전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 회의를 갖자고 제의하고 3월 28일 김구, 김규식 등 개인 15명과 한국독립당, 민주독립당, 민주한독당, 민중동맹, 청우당, 사회민주당, 독립노동당, 신진당, 근로인민당, 남노당, 인민공화당, 전평, 전농, 민주여성동맹, 유교연맹, 기독교동맹 등 17개 정당 단체에 초청서한을 발송하였다. 이에 청우당은 6명, 북조선청우당에서 9명이 각각 참석하여¹⁵⁾ 조선의 내외정세에 대한 정확한 규정, 국토와 민족을 분열하는 단선을 반대하는 전국적 통일방략, 정치와 민생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주통일독립을 하기 위하여 양군철폐를 촉진하는 방략 등을 논의 및 합의하였다.

그러나 분단저지를 위한 남북협상은 실패로 귀결되고 그것으로 남북한의 단독정부 수립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남한에서의 5·10선거가 끝난 뒤 북한에서는 제 2차 남북협상을 제의했지만 백범 등은 거절했다. 그러나 청우당은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한 제2차

13) 이 운동은 사전발각으로 체포된 17,000여명 중 187명이 처형되는 등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영변 등지에서 시위행렬이 30리나 되는 등 북한민중들의 가슴에 통일 의지와 민족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 사건을 천도교에서는 ‘3·1재현운동’으로 명명하고 있다. 『삼일재현운동지』 신인간사, 1969.

14) 오익제 편, 『천도교 요의』 천도교중앙총부 출판부, 1986, 211-212쪽.

15) 『조선일보』 1948. 4월 21일 및 4월 28일. 그러나 자격심사에서 4명만 통과되었다. 이외에도 천도교인으로는 최동오, 신숙이 참여하였다.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에 참석하였다.¹⁶⁾ 그것은 외세에 의한 분단을 막아보려는 청우당의 최후의 몸부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청우당의 이 같은 해방정국에서의 민전과의 연대, 미군정 정책의 비판, 좌우합작을 통한 자주적 임시정부 수립운동, 남한단독정부 수립 반대운동, 남북협상참여 등은 미군정과 이승만의 독축, 한민당 등 극우 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¹⁷⁾ 결국 청우당은 단독정부가 수립된 후인 1949년 8월 10일 육군에 의해 김병순 등 당원 30여 명은 ‘북로당과 북조선천도교 청우당의 지령을 받아 천도교 내에서 남조선 천도교의 중심세력을 분리시키고 북한 청우당의 세력을 부식시키며, 파괴·암살을 위한 지하당원’이라고 하여 검거되었다. 그리고 12월 26일 청우당은 「정당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정리·해체되었다. 이로써 해방 후 완전독립과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건설을 추구했던 청우당은 이승만 정권 하에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 일제와 해방공간을 거치면서 민족의 진로를 제시하고 그것을 위한 치열한 활동을 전개했던 청우당의 자주적 민족통일운동의 민족주의적 실천은 그로써 종말을 맞고 말았다.

2. 청우당 해체 후 천도교 통일운동

국토의 분단과 청우당의 해체는 천도교에는 이중의 고통이자 난관으로 다가왔다. 국토의 분단은 이북에 고향을 두고 있는 대다수 천도교인에게 이산의 고통을 주었으며 청우당의 해체는 천도교의 양 날개인 교(敎)와 정(政)에서 정의 영역을 무장해제 당한 것과 다름없었다. 따라서 천도교는 분단과 민족상쟁의 전쟁, 그리고 그 이후 장기적인 남북대립 최대의 피해집단이 되었다. 그러므로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민족 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의무 말고도, 분단으로 인해 약화된 교세의 회복운동이자 천도교가 추구하는 이상사회의 실현운동이라는 부가적 목적을 가진다.

청우당의 해체로 정치운동의 중심점을 잃은 천도교의 방향과 답보는 오래 지속되었다. 특히 전통적으로 반항적 정치단체라는 인식과 행동으로 인해 남북 모두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 천도

16) 『조선일보』 1948. 7월 13일.

17) 이미 청우당은 1947년 7월 15일 보성사가 김성건 등 20여 명으로부터 습격을 당해 활자를 전복하고 인쇄기에 모래가 뿌려지는 테러를 당했으며(『자유신문』 7월17일, 『중앙신문』 7월17일), 8월 11일에는 수도경찰청에서 좌익계 인사에 대한 검거령이 내리자 12일까지 민전, 전평, 전농 등 좌익계 단체 외 협동조합, 근로인민당, 청우당, 반일투쟁위원회 등의 사무실을 수색하고 3, 4백명을 검거하였다. 이때 청우당 관계자는 박우천, 김병제, 계연집 등 수명이 피검되었다.(『조선일보』 1947. 8월13일)

교에 대해 감시와 주목은 계속되어 왔었다. 그렇기에 천도교는 남북에서 점차 소외되고 정치적 참여마저도 축소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작지만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¹⁸⁾ 6·25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천도교 신자인 인민군 포로들의 종교행위와 그를 통한 이념간의 반목과 대립을 극복하고자 했던 노력도 그중의 하나이다. 극단적인 좌우대립을 극복해 보고자 한 그들의 평화적인 종교적 노력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살벌한 포로수용소에서의 작은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¹⁹⁾

그러나 1950년대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당시의 남한 분위기와 함께 일방적인 반공일변도로 경도되었다. 이는 전쟁후의 고조된 냉전분위기와도 관련있지만 천도교 내부에서도 월남 교인들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구성된 측면도 있다. 특히 1956년 아시아 반공대회에 당시 천도교 교령이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정도로 천도교는 반공운동의 최일선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57년 12월 동학회가 구성되어 청우당의 후신으로서의 역할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당시 동학회는 첫째, 인내천 원리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구현, 둘째, 동귀일체 이념에 입각한 경제체제 실현, 셋째, 사인여천 정신에 맞는 새윤리, 새도덕의 수립, 넷째, 인내천주의의 신문화창조, 다섯째, 민족의 공고한 단결과 민주우방과의 제휴하에 남북통일을 축성한다는 강령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에까지는 못하고 준비 단계에 머물고 말았다.

이 같은 천도교의 통일운동이 일시적인 변화를 맞은 것은 4·19 혁명 이후 제 2공화국시대였다. 천도교는 먼저 4·19 혁명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 운동을 민족통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자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계속해서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통일방안들을 거듭해서 발표했다.²⁰⁾ 그리고 이 같은 통일방안들을 집약할 운동단체의 결성 필요성에 따라 “동학당 결성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60년 11월 경에 구성된 회의는 취지문을 발표하고 400여 명의 준비위원과 각종 위원회를 구성했다. 취지문에서 ‘동학당’은 민주당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고 민주적 경제와 도덕적 참여정치를 주장하는 한편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론을 제시하여 남북한의 연방제나 중립화 대신 자주적인 통일과 외교노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동학당은 같은 해 12월 22일 동학당 발기대회를 주장해 본격적인 청우당의 복당과 계승을 천명하였으나 이듬해 5·16

18) 50년대 이후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박길수, “천도교 통일운동의 전개과정” 1-6, 『신인간』 1999. 12월 호에서 2000년 7월호까지 연재된 글을 참조.

19) 반공포로 석방시 천도교인 포로들은 천도교의 상징인 공을기를 앞세우고 귀환하였다. 관련된 내용은 성강현, 『6·25전쟁 시기 천도교 포로 연구』, 선인, 2017 참조바람.

20) 이 시기 천도교의 기관지인 『신인간』을 통하여 많은 진보적 통일안들이 제기되었는데 유엔 원조하의 자유 총선거를 재실시 하지는 안, 자주적 통일안, 중립화 통일안, 남북경제회의 창설안 등이 그것이다.

쿠데타의 발생으로 인해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동학당준비위원회는 국내외 정세보고를 꾸준히 발표하고 교양문집을 발행해 동학 이념을 통한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방략을 계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업적을 쌓아 가고 있었다.

동학당 해체 후 적어도 1980년대 중반까지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완전 지하화 했다. 오히려 냉전적 분위기에 편입되는, 아니 생존의 몸부림 같은 반공운동의 최일선에서 선봉역할에 충신했다고 볼 수 있다. 그나마 1968년의 “3·1학회”를 결성해 3·1정신을 통일운동의 근간으로 하자는 민족주체적 자주통일운동을 전개한 것이나, 1978년 8월 당시 춘천 교구장이었던 이도천 선도사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처 임진강변에서 남북통일을 호소하며 분신 순도한 사건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천도교만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통일운동이 서서히 부상했다. 즉, 운동의 바탕이 될 이론의 준비가 그것이고 대중운동화를 위한 소규모 운동의 전개가 그것이다. 먼저 1982년 63회를 맞는 3·1운동을 기념하면서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철야기도회와 특별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기도기간동안 아침식사를 단식하여 성미를 모아 통일운동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했다. 그리고 당시의 이론가들인 오익제, 표영삼, 임운길, 김철 등을 중심으로 천도교 통일이념을 개발하고 소개하는 작업들이 꾸준히 이어졌다. 1984년의 ‘민족통일연구회’(회장 오익제) 결성이나 1986년의 ‘민족통일대학강좌’ 등 바로 그것이다. 특히 ‘민족통일대학강좌’는 3개월을 1기로 하여 격주로 강좌를 실시하면서 통일이념의 보급에 진력했다. 매 강좌마다 학계의 권위자들을 모신 강의에는 약 2-300명의 청중이 모일 정도로 열기가 높았다. 뒤를 이어 심화학습과정으로 만들어진 동학선양회(대표 김철)에서는 2달 동안 매일 저녁 하루 3-4시간씩 심도 있는 동학 천도교의 강의가 이어져 일반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모두 장차 천도교 통일운동의 전위단체인 “동학민족통일회” 결성의 바탕이 되는 것들이었다.

3. 전위단체 동학민족통일회의 통일운동

1990년대 이후의 천도교 통일운동은 청우당 이래로 천도교 정의 영역을 담당할 ‘동학민족통일회(이하 동민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89년 제26차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천도교 전위단체 설립을 결의한 천도교는 1991년 5월 드디어 ‘동민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동민회는 그 설립 취지문과 선언문 등을 통하여 ‘인류는 같은 한 울안의 공존질서 속의 지구촌 동포이며 우리 민족 역시 남북으로 분단되어서는 안 될 한 겨레’임을 선언하고 ‘세계냉전의

종식과 변혁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남북이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대결의 장으로 남아서 분단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족자존과 지성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중략) 조국통일은 양 체제의 혼합·절충이나 흡수가 아닌 남북을 초월하고 포용하는 민족대화합에 의한 인간화의 원점에 선 민족동질성 회복의 통일문화 창출의 새로운 창조적 민족통일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통일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명시했다.²¹⁾

동민회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학사상을 기본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한다.

둘째, 사인여천의 윤리로 도덕적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셋째, 경천·경인·경물의 삼경사상을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넷째, 자유·평등·평화의 민주주의 발전을 기한다.

동민회는 “동학의 이념과 사상을 이념적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조직확장 사업, 교양사업, 남북교류협력 사업 등을 위한 세미나, 강연회 개최, 홍보용 책자 간행” 등의 사업을 하기로 하고 우선 민족통일강좌를 이은 민족정신 선양의 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학술 발표회를 주최하여 통일운동의 저변확대에 노력했으며, 천도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단극복을 위한 선언문 발표 등을 하였다. 또한 남북 천도교 실무자 회담 참석, 수차례에 걸친 방북으로 북 청우당과의 회합, 남쪽의 민화협과 통일연대 등에 참여하는 등 남북긴장완화에 나름대로 기여해 왔다. 특히 동민회가 오랜 연구와 여론 수렴, 토의 그리고 수정 끝에 만들어 낸 천도교의 통일 방안은 동민회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동학민족통일회의 공적은 북한 청우당과 직접적인 교류 파트너가 되어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친 인적, 물적 교류를 거듭해 왔다는 점이다. 동민회와 청우당이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한 것은 2005년 3월 중국 심양에서 만난 향후의 교류와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면서부터였다. 여기서 양측은 최초로 공동의 관심사항들을 논의하고 다음의 몇 가지를 합의했다.

21) 동학민족통일회, <설립취지문>(1991. 5. 11), <선언문>(1991. 5. 11)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초월하는 제3의 사상요청에 부응 ②인간화의 신문화창조에 선봉 ③남북의 평화와 통일시대를 여는 기수적 역할 ④사회정화와 자연환경정화 실천운동에 헌신 ⑤복지, 평등을 추구하는 평등주의적 신경제질서의 정의 실현 ⑥자유, 평등, 평화의 민주사회 발전을 위한 기수적 역할 ⑦민족문화운동의 전위적 역할 담당 ⑧건강한 사회, 힘있는 나라건설에 앞장 ⑨새로운 민족사회와 세계평화 건설의 개벽군 자임. 김관희, 「동학민족통일회 발전방안」, 동민회발전방향 학술대회 발표 글, 2004, 10.

첫째, 양측의 공동관심사항에 관한 건

- 동귀일체 정신에 입각해 통일운동에서 남북한 천도교인이 단합한다.
- 민족문제에 공동대처한다.(3·1절 행사장의 류관순 기념관으로의 변경 반대를 적극 찬동한다. 아울러 천도교를 무시한 3·1운동의 역사 왜곡에 공동대응하고 내년도 3·1절 행사를 남북 공동행사로 추진함을 모색한다.)
- 천도교 행사에 양측의 참여를 늘린다. 단, 금년의 천일기념일(4월 5일) 행사는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유보하고 내년 행사에는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금년도 평양에서의 남북한 합동 개천절 행사는 동학민족통일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치른다.

둘째, 북한 천도인들의 지원사업에 관한 건

- 농번기에 필요한 비닐박막 지원
- 비료 지원 요청의 건
- 기타 경험의 건

셋째, 남한지역에서 동학민족통일회가 민족운동의 중심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조의 건

- 청우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한다.
- 특히 6.15 행사에서 가급적 많은 천도교인의 방문을 희망한다.

넷째, 동민회와 청우당의 회동 정례화

다섯째, 신인간(천도교 기관지)에 북한 천도교인의 글 기고 합의

이후 동학민족통일회는 청우당과 직접 연결되는 팩스라인을 형성하고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민족문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강조해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에 대해서는 2005년 4월 5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대일 규탄 공동행사를 가져 내외의 관심을 받기도 했었다.

이 공동성명서는 남북한의 동학의 후예들이 최초로 만들어 낸 의의를 가지며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함께 찾아낼 공통분모가 있음을 확인한 선언이었다. 이후 남한 동학민족통일회와 북한 천도교청우당 명의로 공동의 동의와 합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가급적 함께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하고 공동행사도 추진하기로 확정했었다.

이러한 결의이후 양측은 공유하고 있는 역사문제와 민족문제에 관련한 부분에서부터 한 목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 7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의 시한을 정해 놓고 남북한이 함께 “보국안민 척왜창의 운동”기간을 설정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카스라테프트 밀약 100년과 을사늑약 100년을 맞은 남북 민족운동진영의 공동의 소리를 모은 것이다.

공동운동기간 선언 이후 양측은 운동기간 동안 “제2의 멸왜기도회²²⁾”를 각기 가지기로 합의했고 공동학술대회와 남북한 지역의 동학운동 성지순례와 공동조사단 파견 그리고 민족의식 고취 행사 추진들을 하기로 하였다. 비록 합의한 대로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학술대회에는 청우당에서 원고를 보내주어서 대독 발표되기도 하였다.²³⁾ 이 일을 계기로 양측은 해마다 운동기간을 설정해 남북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식과 행사를 추진해 왔다.

2006년에는 기간을 확대해 3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를 “자주평화민족대단합운동”기간으로 설정했으며 2007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을 “민족중시운동”기간으로 2008년에는 “민족자주수호대회”기간으로 정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남북의 동학 천도교인들과 민족운동 참여자들은 공동으로 3.1절 공동성명 및 공동행사 진행, 카스라테프트 밀약 규탄 남북공동성명서 발표 및 학술 강연회, 동학농민혁명기념일 행사, 개천절 행사, 을사늑약 규탄 학술대회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된 동학농민혁명 남북합동 기념식은 그동안 지역별²⁴⁾로 각기 다른 일정으로 진행되어 왔던 행사 일을 남북이 합동으로 하는 기념행사일을 잡음으로써 오랜 시비거리를 종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다. 남북이 함께 행사를 주관하는 9월 18일의 동학혁명 남북합동 기념식은 해월 최시형에 의해 내려진 총기포명령일로 2차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기도 했다. 그동안 남북은 여러 차례에 걸쳐 회의를 거듭한 결과 남한의 여러 지역을 아우르고 또 남북한 모두가 동학혁명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날로 이날을 잡은 것이다.²⁵⁾

이밖에도 2010년에만 “국치 100년 연대사”, 천도교의 환경생명운동단체인 한울살림연대 창

-
- 22) 멸왜기도는 1936년부터 3년간 천도교의 4대 교주인 춘암 박인호에 의하여 비밀리에 진행된 일제의 패망을 비는 기도 의식이었다. 당시 모든 천도교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심고를 할 때 “개같은 왜적놈을 일아간에 멸하고서 한의 원수 갚아보세”라는 기도문을 외었다. 1938년 일제에 발각됨으로 종결된 멸왜기도 사건으로 많은 천도교인들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 23) 당시 북한의 청우당 부위원장인 강철원의 “1905년과 2005년” 원고는 2005년 11월 17일 독립기념관 주최의 을사늑약 100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 24) 그동안 각 지역마다 동학혁명 기념일은 다르게 진행되었으나 금년에 비로소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을 국가기념일로 확정하여 기념식을 치른바 있다.
- 25)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의 해로 120주년 남북합동 기념식 추진을 위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당시의 경색된 정국의 영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립식에 축하 연대사 등을 보내 주었으며 남북 합동 기도회를 같은 날자와 기간을 설정해 행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양 단체는 2001년 이후로 국가적 행사가 되고 있는 6.15 남북대회와 8.15 남북대회에서는 언제나 함께 참석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타 통일운동 단체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구체적인 인적교류로는 동학민족통일회 수뇌진과 청우당의 간부들이 수차례에 걸쳐 회동을 거듭했는데 주로 개성, 금강산, 평양 등지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2005년 북측의 제의로 10월의 아리랑 축전 참관 명분하에 이루어진 평양 방문은 또 다른 남북교류의 전기가 되었다. 아리랑 축전 기간동안 동학민족통일회는 450여 명의 방북단을 보냈다. 3차례로 나누어 방북한 동학민족통일회 측은 평양의 청우당사 방문은 물론 남북 천도교인의 합동 시일식 봉행, 류미영 위원장 면담, 단군릉 등 민족성지 참관을 통한 한민족 동질성 회복 추구, 학술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공통분모 모색, 다양한 형태의 경제 교류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이 기간을 이용해 청우당은 동학민족통일회와의 합의한 대로 독립유공자 유가족협의회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성묘를 추진하여 일부 인사들이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능의 선조들 묘역을 참배할 수 있게 주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래로는 이명박 정권 하의 천안함 사태 이후 내려진 5.24조치로 그동안의 교류협력은 끊어진 채로 간간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을 뿐이다. 2014년의 평양 개천절 행사 참석과 몇 차례 이어진 개성에서의 회담 등이 그것이며 지금까지는 향후의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그동안의 교류협력을 통해 천도교는 첫째, 남북공동의 의식 회복 둘째, 지속적인 교류협력 논의 셋째, 동학농민혁명 공동기념식 합의 넷째, 독도수호 공동성명서 작성 등 민족공동사업 다섯째, 민족운동의 주요단체로서의 위상 확보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천도교의 민족통일론

1. 천도교의 통일국가론

천도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통일국가이론은 일제하 청우당 시절 제시했던 논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청우당이 제시한 천도교의 목적은 보국안민과 포덕천하이다. 보국과 안민은

단계적 목적이 되고 포덕천하(지상천국)는 이상적 목적이 된다. 즉, 보국 이후에 안민이요, 안민 이후에 지상천국에 달하는 것이다.

보국은 민족주의의 단계로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청우당은 보고 있다. 오늘날의 보국이란 철저한 민족주의 의식을 가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그것은 세계공화에 적합하도록 진화해야 하므로 세계의식과 배치되는 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즉, 보국은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이지만 폐쇄적 민족주의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삶을 목적하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국의 다음 단계는 안민으로 민주적 정권과 민주적 생활권을 말한다. 보국이 완전독립을 말한다고 했을 때 일시의 타율에 의한 독립과 같은 것은 도리어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퇴보의 길이므로 안민의 단계는 완전독립과 항구적인 안민의 방책을 말한다. 보국을 통한 민족주의의 실현은 하나의 국가가 설립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따라서 하나의 국가와 민족이 존재하는 한 민족주의의 실현인 보국의 추구는 당연한 것이다. 보국의 실현이 이루어지면 그 독립된 국가의 발전과 보존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안민으로 실현된다. 안민은 국민의 노력으로 실현되는 경제적 기초의 성립과 자치적 치안의 유지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독립체가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 개개인의 정치적 능력함양을 위한 정치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나친 보국안민의 강조는 퇴행적 민족주의에 다름 아니다. 천도교가 추구하는 마지막 민족통일국가론은 민족주의를 뛰어 넘는 인류주의, 세계주의를 제시하니 그것이 포덕천하이다.

포덕천하(지상천국)는 통일된 민족국가가 지향해야 할 천도교의 이상이다. 청우당은 엄정함이 현실을 개척하면서도 지상천국의 위대한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적한다. 천도교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세계관은 후천개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상천국이다. 이것은 인간은 한울을 모신 존귀한 존재라는 새로운 인간관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가 그리고 우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동학의 세계는 상호경쟁이 아닌 공존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상생의 질서를 요구한다. 그것은 동학의 동귀일체이념에서 두드러지는데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제우는 동귀일체를 여러 번 강조하였다. “쇠운이 지극하면 성운이 오지마는 현숙한 모든 군자 동귀일체 하였던가”²⁶⁾ “억조창생 많은 사람 동귀일체 하는 줄을 사십평생 알았던가”²⁷⁾라고 하여 인류가 한 가족임을 밝혀 주고 있다. 그는 세상이 혼탁해진 근본원인을 중생들이 각자위심하여 불순천리(不順天理)하고 불원천명(不願天命)하는 데 있다고 통찰하고 각자위심의 중생

26) 『용담유사』 「권학가」.

57) 『용담유사』 「교훈가」.

들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으로 동귀일체하는 새로운 도법으로 무극대도를 실천하여 지상천국 건설을 주창하게 된 것이다.

동귀일체는 또한 하나의 사상으로 귀일하여 결집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천인합일, 개전일체(個全一體)의 원리에서 나왔는데, 그 주체적 의미는 인간사회는 모든 개인의 결집체요, 협동체요, 조직체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부분적 존재요, 사회는 전체적 존재로서 부분적인 개인을 무시하고는 사회의 발전을 기할 수 없고 전체인 사회를 떠나서는 개인의 생존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상호대립하고 있다. 이 둘은 서로가 장단점이 있으니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 및 능률을 기하는데 장점이 있는 반면 전체의 평등을 기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으며, 공동체주의는 전체의 평등을 기하는데 치중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창의 및 능률을 재고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주의의 장점을 흡수하고 단점을 배제하는 해결책이 동학의 동귀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지향하는 자유와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평등의 부조화를 화합시키어 쌍전으로 조화하여 이들의 대립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동귀일체이다.

천도교가 추구하는 이상국기는 이처럼 동귀일체를 바탕으로 성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신인간이다. 신인간은 후천개벽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그는 개개인의 도성덕립을 이루어야 한다. 천도교가 끊임없이 인격도야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민족자주 통일론

천도교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인 ‘민족자주 통일론’은 2002년 11월에 완성되었다.²⁸⁾ 이 방안은 북한 청우당에도 전달되고 앞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함께 하기로 한 통일론으로 이후 전개되는 남북한 교류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 민족자주통일방안은 전술한 보국안민과 포덕천하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기에 남북에 존재하는 천도교인들의 공통의 신앙과 인식을 바탕으로 있다. 따라서 남북의 천도교는 이미 상당부분이 공유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28) 이 방안은 원래 ‘민족자주 동귀일체 통일방안’으로 1999년 5월 29일 확정되었다가 필자를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들의 수차례에 걸친 윤독과 수정을 거쳐 2002년 11월 25일 “민족자주 통일방안”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29) 북한 체제의 특성상 공개적으로 남쪽 천도교의 통일방안을 수용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접수하였고 향후의 논의 과제로 삼자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남북 천도교가 같은 교리와 교사를 공유하는 한 향후에는 반드시 논의의 과제가 될 것이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남북이 공통분모를 만들기가 용이하고 할 수 있다.

동학 천도교는 지상천국의 실현을 위해 교(종교)와 정(정치)의 쌍방을 조화시키는 교정쌍전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집단이었다. 한국적 교정쌍전의 사유의 세계에서 출현이 가능했던 종교가 동학이었다.³⁰⁾ 따라서 동학 천도교는 인간 구원의 종교적 이상과 정치적 이념·사상 그리고 구체적 통치체제를 구상하고 있었다. 천도교의 통일이념은 한반도에서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구상하며 가장 오래동안 유지될 평화체제를 지향한다. 그래서 천도교는 한반도의 이상적 통일국가 수립을 위해 진력하며 그 이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천도교가 지향하는 민족통합이념은 이상적 민족주의 정치이념을 바탕 한다고 평가된다. 그것은 동학 천도교가 민족의 과제 앞에서 운동의 향도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민족 진로의 좌표까지를 제시해 주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다음은 천도교가 지향하는 통일운동을 통한 이상적 국가의 모습이다. 천도교가 추구하는 이상세계는 바로 통일된 조국이고 그 통일된 조국은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1) 민족자주의 이상적 민주국가

천도교가 지향하는 민족대통합의 정치이념은 우선 민족자주의 이상적 민주국가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국가는 민족으로 구성된 권력단체다.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것도 있고 복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도 있다. 단일민족은 혈통이 같고 역사가 같고 언어문자, 풍속습관이 같고 문화가 같고 경제적 조건이 같고 최종으로 공통숙명을 가졌다. 그러므로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공통의 숙명은 통합된 모습으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한다.

천도교의 민족주의 노선은 보국안민 차원의 1차원적 민족주의를 넘어선 포덕천하의 국제주의를 지향하는 차원 높은 민족주의이므로 이를 신민족주의라고 정의 할 수 있다. 신민족주의는 세계 각 민족이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일하데 세계공화에 기여하는 단위민족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

30) 동학·천도교의 교정조화 이념은 서양의 '정교합일주의'처럼 세속적 군주가 종교의 교주를 겸하거나 종교에 의한 지배로 상징되는 서양 중세의 경우와도 구별된다. 천도교의 교정합일 이념은 종교와 정치가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적으로(교정쌍방) 조화되는 것을 이상으로 하였다.

2) 시천주의 평등정치체제

천도교사상의 민주주의적 정치사상은 인간평등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시천주 사상이 바로 그것인데 인간은 누구나 한울님을 모신 존재이므로 인간을 이 우주의 가장 최고최령(最高最靈)의 자리에 위치한 위대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어떠한 인간이든 성실성과 존경심만을 가졌다면 모두 한울님과 같은 존재이다. 즉 誠과 敬의 2자만 지키는 인간이라면 노예든지 천민이든지 모두 군자요 성인이 되지만, 이 성과 경이 없는 양반이나 토호 같은 지배층은 참다운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재래의 문벌과 신분상의 낡은 봉건적 인간관계에 대해서 동학에서는 성·경 2자에 의해 평등하고 스스로 각성한 근대적 개인을 발견하고 있다.

3) 동귀일체의 신경제

천도교가 지향하는 민족통일국가의 경제는 동귀일체의 이념에 입각한 민주주의적 경제제도이다. 동귀일체란 모든 사람의 근본이 무형한 한울님을 깨닫고 일체의 원리로 돌아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하자는 뜻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존재는 무형한 한울님의 이치기운으로 화해 났고 한울님의 이치기운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 같이 한울님의 아들딸이며 한 동포, 한 형제, 한 생명체인 것이다. 우주는 하나의 영체요 하나의 생명체인 것이다. “경천·경인·경물의 정신과 인오동포 물오동포”의 정신으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 초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온 세상이 한 마음 한뜻 한 몸 한 가족 같이 화합하고 풍요롭게 사는 일류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인류는 자타일체 동귀일체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서로 속이고 흠치고 빼앗고 죽이며 살아왔다. 이제는 그런 생활태도는 청산해야 한다.

4) 다시 개벽의 문화주의

수운 최제우는 구도 단계에서 현실의 과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데 시점을 맞추고 있었다. “한계에 이른 현 문화 체제를 다시 개벽하자”는 것이 바로 구도의 과제였다. “다시 개벽”이란 “문화의 틀을 다시 열자”는 뜻이다. 수운의 표현대로 “개벽 후 5만년”과 “십이 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런가”라는 두 말을 연이어 보면 “개벽”했던 것을 “다시 개벽”하자는 말이다. 즉 “처음 열었던 문화를 다시 새롭게 열자”는 것으로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과, K·볼딩의 문명 전

사회→문명사회→문명 후 사회의 개념과 유사하다. 동학이 지향하려는 것은 바로 낡은 문화의 틀을 새로운 문화의 틀로 “다시 개벽”하자는 데 있다. 즉 동학 천도교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문화가 중심인 사회이자 문화가 강한 국가이다.

5) 도성덕립의 윤리국가

천도교의 통일이념은 우리 국민이 높은 윤리·도덕성을 지닌 통일국가를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이른바 도성덕립의 윤리국가가 그것이다. 도덕성을 상실한 조선에 도덕성 회복을 외치며 등장한 것이 동학 천도교이었기에 윤리·도덕성의 회복이야말로 국가기강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IV. 맺음 말-평화체제의 비전을 그리며

천도교에서 추구하는 통일된 민족국가는 종교적 차원의 비현실적인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세계에서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그것은 후천개벽의 단계를 통하여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도성덕립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인간(新人間)들의 세상, 이른바 군자공동체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천도의 실현을 현실세계에서 추구하는 동학 천도교의 민족이념은 우리 민족의 근대적 자각을 넘어선 민족의 목표인 이상적 공동체를 구상하고 그것의 완성을 위한 지난한 노력의 도정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천도교의 노력은 개인의 동귀일체가 이웃과 이웃의 동귀일체로 나아가 사회전체의 동귀일체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남과 북은 상이한 정치경제체제를 반세기 이상 유지 시키면서 그 가운데 상당부분의 이질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운명 공동체로 삶을 같이 영위해 온 역사의 눈으로 볼 때, 오늘의 이질성은 매우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고 결코 극복치 못할 수준도 아니다. 오히려 여전히 많은 부분의 공통성이 우리를 함께 살 수 있는 한민족임을 자각시키고 있다.

동학에서의 통일은 나누어진 둘을 인위적인 힘으로 하나로 통일시킨다는 것보다는 본래 하

나였던 것을 원래대로 하나로 되돌리는 뜻에서의 통일이다. 천도교가 제기하는 민족자주를 바탕으로 동귀일체 통일론은 이런 의미에서 본래의 하나를 찾아가는 과정에 역점을 두는 통일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결단코 배타성을 제거한 민족주의이고, 이기심을 배제한 공동체주의이며 조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가장 평화로운 주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천도교의 통일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천도교의 통일론은 거대 담론으로서의 통일이 아니라 평화로운 영토를 추구하는 소박한 통일론이다. 그것은 한반도가 지구상에서 가장 평화스러운 땅이 되기를 희망하는 통일론이다. 그래서 천도교는 통일보다는 평화를 더 소중히 생각한다. 평화는 3.1혁명 당시에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견지시키고자 했던 민족의 대원칙이었기에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방법론이 구동존이(求同存異)³¹⁾의 통일 접근법이다. 이미 갈라지고 분열되어 갈등의 차이가 두드러짐을 인정하지 않고는 다시 원래의 하나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이 구동존이의 첫걸음이다. 그런 다음 서로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가급적 많이 그리고 자주 찾아내어 교류의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시대 천도교가 추구해야 할 통일 접근법이자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남쪽의 동학민족통일회는 북쪽의 청우당과 획기적인 유대와 교류를 증진해 남북한의 공동분모를 만드는데 일익을 하고 있어 왔다. 남북의 동학민족통일회와 청우당은 이미 종교적 공통성을 넘어 이념적 공동의식을 바탕으로 문화적 공동체를 지향함으로써 통일운동의 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향후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점은 전적으로 동학정신을 공유한 가운데 전개되는 통일운동에서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향후로는 분명 민간부문의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천도교의 통일운동은 어느 단체 못지않게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특히 천도교는 남한 내 단일 종단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로 북한 내 연결 통로를 가지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단극복과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천도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동학이라는 민족종교의 전통을 잇고 있는 천도교는 남북교류에 있어서 어느 단체 못지않게

31) 서로 다른 점만을 강조하고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 시키기를 노력한 것이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였다면 앞으로는 그 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서로의 같은 점만을 찾아내고 그것을 확대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도출되는 실질적이고 부정적인 면들은 잠시 뒤로 돌려 두자는 것이 구동존이 통일접근법이다.

남북통합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능성 못지않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본적으로는 교세의 미약과 연결되는 대북교류 규모의 빈약함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과거 동학을 하던 선배들 역시 미약한 가운데에서도 민족운동의 중심에 섰었기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학은 그냥 천도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민족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종교로서의 가치를 담보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 참조 : 북한 천도교의 현황과 역할

천도교는 북한의 최대 종교이다.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신도 수는 1만 5천명으로 종교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양에 중앙본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전교실도 800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종교를 우리와 같은 개인의 구원 차원으로 보지 않는 북한에서의 종교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천도교 역시 북한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북한 천도교는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공식 정당을 통해 활동하는데 이 정당은 일제시대 만들어진 천도교의 전위단체로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해체되었지만 북에서는 지금까지 유지되는 단체이다. 청우당 위원장은 현재 공식으로 3년전까지 류미영 위원장(95세로 작고)이 맡고 있었으며 북한 천도교의 본부인 “조선천도교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다. 고 류미영 위원장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으로 공식적인 북한 권력서열 21위였다. 현재는 윤종호 부위원장의 뒤를 이은 이명철 부위원장과 여정선 서기장을 비롯한 23명의 천도교인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으로 임명되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

비종교국가인 북한에서 이처럼 천도교가 나름대로의 상당한 권력과 교인 등 전국적인 분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은 1894년 동학혁명 이래로 남쪽의 교인들 대부분이 대대적인 탄압을 받으면서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동학의 지도자들은 북부 지방에 포덕(선교활동)을 집중했다. 혁명의 중심지였던 남부지방보다 훨씬 탄압과 관의 감시가 적었던 북부지방은 이때부터 동학이 전파되어 일제시대와 해방 직후에는 천도교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분단되기 이전 천도교인 수가 300만을 헤아린다고 했는데 그중 80%가 북한사람들이었다. 지금도 남한 천도교인 상당수가 6.25 참화에 북한에서 내려온 월남민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작금의 북한 종교인에서 천도교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과거의 동학, 천도교 교세와 무관치 않다.

북한에서 천도교가 위세를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김일성과 천도교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16세의 김일성이 만주로 건너와서 첫 번째 입학한 학교가 화성의숙이었는데 당시 교장선생이 최동오였다. 후일 임시정부의 법무부장을 지낸 최동오는 독실한 천도교인으로 그 시절 어린 김일성에게 동학과 천도교를 가르쳤다. 비록 김일성은 천도교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민족사상으로서의 동학과 민족종교로서 천도교의 가치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틀림없

다. 과거 청우당 위원장이었던 최덕신과 류미영 등이 이와 무관치 않다.

현재 북한 천도교는 북한 내의 민족주의 활동과 관련된 사업 등에서는 전위에 나서고 있다. 일테면 단군릉을 관리하고 또 개천절 행사를 주관하는 일 등이 대표적인 천도교의 사업인데 이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북한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이다. 이 단체 역시 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위원장이 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청우당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데 북한 역사학회 등 민족관련 연구, 운동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북한 천도교는 이처럼 나름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생주의로 본 남북의 경제체제 통합 방향

강화명 (선문대학교)

목 차

- I. 들어가며
- II.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 경제
- III. 남북한의 경제체제 통합과 시장경제
- IV. 공생주의에 대한 이해
- V. 남북의 경제체제 통합 방향에 관한 제언
- VI. 나가며

I. 들어가며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회담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한·미 정상이가 함께 비무장 지대(DMZ)를 방문한 것도, 남·북·미 정상이가 판문점에서 만나고, 북·미 정상이가 남측 자유의 집에서 단독회담을 한 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 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한층 높아졌다. 전쟁과 대립으로 얼룩졌던 지난 세기를 넘어 화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이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임이 재확인되었다.

통일한국의 경제체제와 관련하여 종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구상해 나가는 과정에서 종교는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통일한국이 맞이할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예상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거나 경제체제 전환에 성공한 몇몇 나라들의 주요 요인을 화폐, 금융, 민영화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분석하여 한국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이 아님은 분명하다. 아마도

종교가 경제체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가치적인 부분일 것이다. 사랑과 정의, 연대와 나눔, 약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하는 종교적 진리를 바탕으로 통일한국의 경제가 지향해 나가야 할 근원적 가치와 기본 방향을 묻고 탐구하는 것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된다.¹⁾ 그리고 이는 남북 모두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이러한 작업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의 이상경제론인 공생주의를 중심으로 펼쳐 나가고자 한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경제체제는 크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로 양분되어 왔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사회주의 모델은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적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지닌다. 이에 과거 이 모델을 채택한 구소련 국가와 동유럽, 중국, 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모델로 전환하였다. 물론 그 변화의 과정은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역사,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소련이 공산권의 갑작스런 붕괴에 따른 급진적 경제 전환을 경험한 반면, 중국은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점진적 전환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모델을 고수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러나 공식경제의 악화와 위기 속에 점차 준시장경제가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자유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지점에서 공생주의는 과연 자본주의가 이상적인 경제모델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러한 의도에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자체가 곧바로 자본주의 체제의 윤리적 정당성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비판의식이 짙게 깔려 있다. 사회주의의 문제가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의 발휘를 억압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데 있다면, 자본주의의 문제는 시장만능주의를 바탕으로 무제한적 자본축적을 허용함으로써 이웃이 누려야 할 정당한 몫을 빼앗는데 있다.

주지하듯이 시장의 가장 큰 매력은 효율성이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자유경쟁은 모든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변화하는 경제적 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이끈다. 그 결과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져 사회 전체의 편

1) 이에 관한 좋은 실례가 바로 독일교회이다.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1년 독일교회는 '공공선과 개인이익, 미래에 대한 책임 안에서의 경제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경제에 관한 독일교회의 입장을 밝혀 백서로 발간했다. 이 백서는 독일교회연합의 공적책임위원회에서 다년간 토론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독일 공동체의 경제적 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 질문을 던지며 이를 성서의 경제관을 기초로 탐구하면서 그 방향성을 모색한 것이다. 이 백서는 출판이후 독일 사회에 경제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지역교회 뿐 아니라 경제계와 정치권에서도 백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토론이 이루어졌고,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동독에 적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조성돈, 「독일 사회시장경제와 교회의 역할」, 『신학과 실천』 41(2014).

익이 증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본주의는 실업과 빈곤, 소득불평등,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금융시장 개방, 민영화, 글로벌화로 경제는 표면적으로 성장했을지 몰라도 그 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공유되지 않아 삶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역시 약자들이다. 소득과 부, 교육, 지위 등에 있어서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들은 경쟁이 과열될수록 뒤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곧 자본에 의한 착취와 소외를 극복하여 진정한 인간평등을 구현하고자 했던 사회주의의 그 이상만큼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생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가지 선택에서 벗어나 양자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제3의 관점에서 경제 문제를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생주의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패권을 잡은 상황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이 어떠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 내지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에 이 글은 먼저 북한 경제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본 다음, 통일한국의 경제체제로 예상되는 시장경제의 특징과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후 가정연합의 공생주의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기반 하여 한반도 신경제 공동체 구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보겠다.

II.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 경제

경제체제란 소유제도와 자원 배분 방식을 포함하여 경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총체를 의미한다. 인간의 개별적, 사회적 경제활동 전체를 질서 있게 조직화하는 일련의 구조, 제도, 시스템 등이 경제체제와 관련된 논의들이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와 경제자원 배분의 조정 주체를 기준으로 크게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인정하며, 시장이라는 기구를 통해 경제자원의 배분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제 질서인 반면, 후자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국가의 계획에 따라 경제자원이 관리, 통제되는 경제 질서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생산수단에 대해서는 사적소유를 인정하

면서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경제자원의 배분을 결정해 나가는 결합 체제도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16세기 봉건제도가 타파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장경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자유 시장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기 시작했다.²⁾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규제되지 않는 시장이 공급과 가격 면에 있어서 훨씬 우월하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할수록 사회 전체의 효율성이 감소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³⁾ 그에 의하면 오직 자유로운 시장만이 분업을 통해 생산력의 배가를 가져오고, 사회 내의 보편적 풍요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기초하여 자본주의가 발달되었고 이전의 봉건주의 체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인류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순부터 경쟁과 효율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는 시장의 어두운 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1929년 전 세계를 뒤흔든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시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장과 달리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적극 주장하는 케인즈 학파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케인즈(Keynes)는 경기가 불황일 경우 시장에 의한 자연적 치유는 불가능하며, 과잉공급, 소득분배, 빈곤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총수요관리 정책을 통해 인위적으로 시장을 조정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은 개입주의적 경향을 띤 케인즈 학파의 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불황의 위기를 타계해 나갔다.

이와 달리 한편에서는 과잉공급이나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는 근본적으로 시장경제 체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경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해 사회주의(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생산과 사적 소유의 모순이라는 형태로 드러난다고 지적하였다.⁴⁾ 자본주의에서 생산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바탕으로 한 여러 경제 주체들 간의 분업과 협동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생산 수단의 소유는 소수의 자본가들에게 집중된다. 이로 인해 자본과 노동의 분열, 즉 자본가

2) 강성진·정태용,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17.

3) Adam Smith,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91), 399.

4)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이데올로기』 김대웅 옮김(서울: 두레, 2016), 114-5.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분열이 발생하고 자본의 축적이 심화될수록 소수에 의한 다수의 착취가 극화되어 다양한 경제적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고려하지 않는 자기본위의 사적소유를 폐기하고,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적극 수용하여 1922년 소련은 가장 최초로 사회주의 체제로의 경제전환을 이루었고, 이후 동구권 국가들과 중국이 잇달아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경제 초기에는 국가 주도의 중공업 중점 개발 계획에 의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197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률이 대부분 하락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체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의 누적으로 정부의 재정적자와 대외부채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⁵⁾ 사유재산의 소유 및 확대 가능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제 행위자들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을 도모할 근원적인 동기를 상실하기 마련이다. 또한 국가계획 기구의 관료주의적인 경직성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의 경제적 환경에 대한 합리적 대응력을 떨어뜨린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는 1991년 소련의 붕괴를 기점으로 급속하게 와해되었다. 동독과 소련은 사회주의(공산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 이데올로기의 폐기라는 정치적 변화와 함께 시장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이루었으며, 중국과 베트남은 정치에서는 다당제를 거부하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민간주도의 시장경제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체제전환을 이루었다.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계획의 포기과 시장의 도입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해 나간 것과 달리 북한은 경제 개혁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회피하면서 여전히 사회주의 계획경제 노선을 고수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경제는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면서 난국에 봉착하고 말았다. 특히 저개발과 경기악화로 1990년 중반부터 계획경제의 핵심인 국가 식량배급 체계가 거의 붕괴되면서 주민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졌다. 매년마다 발생하는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와 극심한 경제난이 겹쳐 수 백 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고난의 행군의 시기가 이어졌다.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으로 인한 비효율성, 중공업 부문의 편중지원으로 인한 소비재 부문과의 심각한 불균형, 자력갱생을 표방하며 대외 경제관계를 최소화하는 폐쇄적인 정책의 누적으로 북한 경제는 그 구조적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말았다.⁶⁾

이러한 극심한 경제난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변화로 이어졌다. 국가 공급망을

5) 강성진·정태용,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20.

6) 이종원, 『통일에 대비한 경제정책』 (서울: 해남, 2011), 74-5.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상업 활동으로 시장을 만들고 확대하기 시작했다. 북한 당국 또한 마땅한 공급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는 ‘장마당’, ‘암시장’, ‘돈주’의 존재를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북한은 2002년 ‘7·1조치’를 통해 시장을 사회주의 상업 유통공간의 하나로 합법화하였다. 중앙집권적 관리경제의 큰 틀 안에서 자유 시장의 원리를 일부 도입하여 계획의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경제적 실리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7·1조치’는 어디까지든 선군(先軍)정치하의 개혁조치로 그 한계가 분명하긴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국가에 종속되어있던 ‘경제’의 영역이 서서히 시장화를 통해 탈국가화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조치로 국가경제위원회가 독점하던 권한이 하부단위에 일부 위임되었고,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공장 및 기업소의 자율성 확대 및 수익에 따른 차등 분배제도가 시행되었다. 또한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물자공급시장이 인정되었으며, 임금과 물가의 인상, 보조금제도의 폐지 등 재정·금융부분에 있어서도 개혁이 단행되었다.⁷⁾

그러나 2005년 10월부터 북한은 시장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통제의 약화를 우려하여 다시금 중앙집권적 계획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개인 경작지 및 상행위 단속, 종합시장 폐쇄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11월에는 국영시장 복원을 통해 민간의 시장 활동을 통제하고자 화폐개혁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규제 지침들은 즉각적으로 수많은 상인들의 반발을 초래하였고, 이후 북한은 다시 시장을 묵인하며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다. 2012년 12월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대북제제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6년까지 북한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⁸⁾ 이러한 배후에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래로부터의 자생적인 시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국영경제의 큰 틀 안에서 시장을 인정할 뿐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한식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나왔다. 핵보유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상황에서도 시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생존의 원천이자 북한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종합시장은 총 404개로 파악되며 종사자수는 110만 명, 북한가구 수입의 70~80%가 시장에 의존하

7) 이종원, 『통일에 대비한 경제정책』, 77-8.

8) 김정일 정권 17년간 북한경제는 연평균 0.2% 성장한 반면, 김정은 정권 5년 동안 연평균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2016년까지 북한의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특히 2016년에는 3.9%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하여 북한의 대외무역이 감소되고 산업전반이 위축됨에 따라 201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5%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내영, 『북한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 이슈와 논점 1545호(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9), 2.

는 것으로 추정된다.⁹⁾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실의 북한 경제가 시장을 소멸시키고 전통적인 중앙 계획식 경제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결국 북한이 경제적 파탄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시장경제의 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있다 하겠다.

III. 남북한의 경제체제 통합과 시장경제

남북의 통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군사,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등 너무도 많은 사안과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통일이 실현되면 남북의 경제는 단일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며, 그 기본 방향은 자유 시장 경제를 북한에 정착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통일 이후 신한반도의 동질적 민족경제 구축은 북한의 계획경제를 자유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자원의 생산 및 분배에 있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¹⁰⁾ 일반적으로 경제체제 전환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토지 및 주택의 사유화, 공영기업의 민영화, 가격 및 시장기능의 자유화, 대외시장 개방화 등이 거론된다.¹¹⁾ 통일한국의 경제정책도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화폐, 일자리, 민영화, 인구이동, 법적 개혁의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에 따른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 연구들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

신한반도의 경제 질서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체제로 나아가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유와 계획을 주장했던 사회주의, 그리고 국유라는 큰 틀에서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했던 시장사회주의 모두 실패했다는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적소유와 시장의 조정 매커니즘을 동시에 인정하는 시장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지속가능한 체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¹²⁾ 그러나 한편으로 자본주의 또한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결함이

9) 김효정, “통일연구원 북한 전역서 시장 404개 운영·110만 명 종사,” 『데일리한국』, 2016.12.9.

10) 이종원, 『통일에 대비한 경제정책』, 150.

11) 강성진·정태용,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45.

12) 김병연, 「비교경제체제론의 최근 동향」, 『경제논집』 52(2013), 263.

있는 경제 질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지난 30여 년간 세계 경제 질서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는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 거대한 탐욕과 투기의 각축장으로 변모하여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상해 나갈 때 있어서 시장 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작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즉 남북한 모두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제도적 형태의 시장경제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 갈파한 것처럼,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떠받드는 두 기둥은 사적 소유제도와 자발적인 교환경제 제도이다. 자본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유권과 자유로운 시장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여기에 담겨 있다. 먼저 자본주의는 경제 주체들의 자기 이익이라는 개인주의적 원리에 근거한다. 개인이 자유로운 영리 활동을 통해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적극 허용하는 체제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인간은 합리적 이익추구의 동기를 가진 이기적 존재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될 때, 보다 나은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훨씬 더 창조적이 된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 개개인은 자본의 가치증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신의 역량과 창의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자 노력한다. 만약 자기의 노동과 노력으로 얻은 과실을 사유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그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킬 유인도 없어진다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논리이다. 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국영기업이나 협동농장이 야기한 폐해만 봐도 명확하다. 인간의 이윤추구의 동기는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인다. 자연스럽게 더 많은 자본의 축적을 목표로 구성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이로 인해 희소한 자원을 더욱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성이 높아진다. 자본획득을 위해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면서 자본주의는 생산의 진보를 이루어내고 이는 과학의 발달로 이어져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러한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시장이다.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돈을 투자하여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은 필수적이다. 한 마디로 시장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체제가 바로 자본주의이다. 시장은 개개인의 경제 행위들을 규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훌륭한 매커니즘이다. 무슨 물건을 어떠한 가격에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하는지는 모두 시장의 가격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가격구조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요자들과 생산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또한 시장은

나태하고 무능한 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땀 흘려 열심히 노력한 이들에게는 보상을 해준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본주의자들은 시장을 구속하는 장애물들이 가급적 제거될 것을 요구한다. 각종 규제를 없애고, 경계를 걷어내어 자본과 노동,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때 개인의 이익과 사회적 부도 증대될 수 있다고 본다.

자유로운 시장의 경제논리가 인간의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고취하여 사회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의 자유와 창조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인권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분명 자본주의의 장점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과도한 이윤추구, 약육강식의 지나친 경쟁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비인간적 삶,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이다. 페터 울리히(Peter Ulrich)는 시장 경제의 가장 큰 비극은 이윤획득을 위해 요구되는 경제 주체들 간의 비인간적인 경쟁을 객관적인 ‘물적 강제’로 간주한다는 사실에 있다고 보았다.¹³⁾ 즉 자본주의는 더 많은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경쟁을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인다. 따라서 하청업체를 압박하여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노동을 유연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 결과 인간의 신성한 노동이 자본의 논리에 잠식되어 수많은 비정규직, 실업자를 양산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은 노동자들에게는 더 많은 사람의 몫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현장의 잔혹성이 심화된다.¹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냉혹한 경쟁을 통해 창출한 이윤의 대부분이 전체가 아닌 거대자본을 가진 소수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에 있다. 경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완전한 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한다고 강조하지만, 신자유주의가 지배해 온 현실 경제에서의 결과는 이와 다르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과 위치에서 경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자본과 힘에 있어서 월등한 서구의 기업들은 규율되지 않은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열될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고, 결국 가장 힘 있는 기업이 모든 것을 독식하게 된다. 이러한 글로벌 독점기업이 탄생하면 더 이상의 공정한 경쟁은 없어지며, 그 결과는 소득의 불평등과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나타난다. 각종 경제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하는 동안 부의 편중과 경제력 집중이 심해져 공공의 이익은 줄어들었고,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¹⁵⁾

13) 페터 울리히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윤리』, 이학배 옮김(서울: 바이북스, 2010), 38-40.

14) 김명용 외, 『하나님의 경제Ⅱ』(서울: 킹덤북스, 2014), 39.

15) 크레디트스위스의 ‘글로벌 부(富)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인구 중 상위 1%의 자산은

통일한국의 경제 미래를 가늠해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장 경제는 과연 어떠한 의미의 경제 인가를 재차 물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시장 경제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면서도 사회주의가 추구했던 평등의 이상만큼은 잃어버리지 않는 새로운 경제윤리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남북의 통합이후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주민들을 포용하면서 함께 공동체적 삶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의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조화시켜 나가려는 작업이 필요하다. 경쟁과 성장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물질 강제의 논리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보다 인간적인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IV. 공생주의에 대한 이해

1. 공동소유와 적정소유

다른 여타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가정연합) 역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오롯이 구현된 자유와 평화, 행복의 이상 사회를 지향한다. 그 이상 사회는 인류의 부모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 서로를 보다 위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애적(愛的)인간들이 모여 이룬 사회로, 구체적으로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주의 사회로 표현된다. 여기서 공생주의는 이상사회의 경제적 측면, 특히 소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공생주의에 대해 밝히고 있는 『통일사상요강』의 일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론의 허구성을 밝히는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마르크스가 사적소유의 지양을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으로 삼은 만큼¹⁶⁾, 먼저 소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일사상이 갖는 문제의식이다.

공생주의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소유에 있어서 사랑의 문제를 등한시 한 것이 가장 큰 오류라고 지적한다.¹⁷⁾ 모든 인간과 만물은 성상(性相)과 형상(形狀)의 이성성상(二性性相)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닮아 정신과 물질, 마음과 몸, 영인체와 육신의 이중구조로 창조되었

전 세계 자산의 50.1%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1년의 45.5%에 비해 약 5% 증가한 수치로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선목, “세계상위 1% 부자, 글로벌 부 ‘절반’ 소유,” 『조선비즈』, 2017.11.15.

16) 마르크스·엔겔스, 『공산당 선언』, 서석연 옮김(서울: 범우사, 1997), 57.

17)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4), 761.

다. 그러므로 소유 역시 단순히 물질적 소유의 관점에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정신, 특히 상대를 한 없이 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사랑과의 깊은 연관성 속에서 탐구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유를 바라 볼 때 이상적인 소유는 공동소유와 적정소유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 여기서 공동소유는 ‘하나님과 나’, ‘전체와 나’, ‘이웃과 나’의 소유를 가리키며, 적정소유란 자신의 본연의 ‘양심’에 따라 정해지는 ‘적정량’을 가지는 사적소유를 뜻한다.¹⁸⁾ 공생주의의 소유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요청된다.

통일사상에 의하면 하나님은 심정(心情)의 본체로 한없이 사랑함으로써 기쁨을 얻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랑은 주체와 대상이라는 둘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경험이므로 사랑하고 싶은 욕망은 곧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갖고자 하는 강력한 욕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에 창조이전 홀로 존재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체대상을 갖기를 필연적으로 갈구했고, 이것이 창조의 동기이자 목적이 되어 그 대상으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였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신상(神相)과 신성(神性)을 닮아난 직계 자녀로서 신인애일체(神人愛一體)의 이상을 이루어나가야 할 중심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과 인간이 심정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 되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동참권, 동위권, 상속권을 부여받게 된다.¹⁹⁾ 참사랑의 본질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것을 무한히 투입하면서도 또 투입하고자 하는 위타성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의 수수관계를 맺은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자리에서, 피조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재화와 만물은 하나님과 인간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과 전체, 나와 이웃이 함께 심정적으로 만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생주의가 공동소유를 주장한다고 해서 사적소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동소유가 보다 주체적이고, 우선시되는 큰 틀 안에서 개인의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웃, 내가 모든 것을 공유하는 상태에서 사적 소유권이 성립되는 근원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공생주의는 개인소유가 요청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밝히고 있다.²⁰⁾ 첫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원개별상(原個別相)을 닮아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개성과 특성, 창조성을 지닌 개성진리체라는 사실이다. 인간이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자유롭게 발휘해 나가

18)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762, 765.

1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285.

20)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765-6.

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개인 소유물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심정을 동기로 하여 창조된 인간에게는 사랑하고자 하는 자유가 주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적소유가 필요하다. 이렇듯 공생주의는 사적소유의 정당한 근거를 하나님의 고유한 기쁨의 원천인 인간 개개인의 자유로운 개성의 실현과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찾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생주의의 사적소유가 자본주의가 주장하는 사적소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에 지배적으로 통용되는 소유권의 개념을 가장 잘 대변한 이는 다름 아닌 로크(Jone Locke)이다. 그는 인간의 사적소유권을 타인이 침범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리로 천명하며, 그 근거를 ‘노동’에서 찾았다.²¹⁾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은 땅을 인류의 공유물로 주었으나 이 공유물에 개인의 노동이 첨가되어 자연이 이룩해 놓은 그 이상을 얻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소유물로 전환된다. 인간의 신체가 자신의 것인 한 그 노동은 당연히 그의 것이며, 그 노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생산물 역시 개인의 것이 된다. 물론 로크는 소유물이 삶에 이득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허용되며, 나의 노동으로 인해 타인의 소유물이 감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지만²²⁾, 이러한 소유의 제한은 화폐가 도입됨으로써 해체되고 만다. 결국 로크가 주장한 사적소유권 개념은 개인이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고, 나아가 자유주의 시장경제와 결합하여 무한한 자본의 축적과 부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작용했다.

이와 달리 공생주의에서 개인의 소유는 전체를 위하고자 하는 전체목적과 개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체목적 간의 조화로운 수수적 토대 위에 성립된다.²³⁾ 하나님과 인간이 피조세계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재화는 개성의 실현을 위해,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 일정부분 사적소유로 전환될 수 있다. 이처럼 어떤 것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고자 하는 사적소유는 하나님이 세운 보편적 법칙, 곧 사랑에 기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생주의의 개인소유는 타인을 배

21)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문지영 옮김(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6), 35.

22) 존 로크, 『통치론』, 37-8.

23) 이를 문선명 선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인간이 이룩하는 이상세계에 있어서 전체목적과 개체목적은 자연스럽게 조화됩니다. 인간은 욕망도 있고 사랑의 자율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 개체목적의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한정한 개인소유 또는 전체 목적을 해치는 개체 목적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완성한 인간은 스스로의 양심과 본성에 의하여 자기분수에 맞는 소유량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참사랑에 의한 만물의 참주인의 인격 되는 이상적인 인간의 경제활동은 사랑과 감사를 제반으로 하기 때문에 과욕과 부정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전체목적에 배치되는 지역이나 국가 이익이 강조될 수 없으며 또한 경제활동의 목표가 이윤 추구가 아닌 전체 복지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27권 (서울: 성화출판사, 1999), 76.

제한 자기본위의 독점적 소유가 아니라 공적인 토대 위에서 성립되는 사랑의 소유이다. 따라서 공생주의에서 개인이 갖는 소유권은 무제한적인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가 아니며, 참사랑의식을 공유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전체의 공동소유에 근거한, 그래서 그 제약을 기본적으로 받는 소유권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공생주의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화의 양과 질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며, 소유의 한도는 개인의 맑은 양심에 따라 정해진다고 밝히고 있다.²⁴⁾ 먼저 각 개인은 격위(格位)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유에 있어서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 없다고 보며 어느 정도의 차등을 인정한다. 이때 일반적으로 보다 주체적인 격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소유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소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그 한계가 명확히 정해진다. 즉 개인은 본연의 양심이 정하는 만큼의 양을 물질로 환산하여 적정하게 소유하게 된다. 이때 사적소유의 정도를 정하는 양심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내면적 도덕률에 기초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체를 고려하는 공동소유를 우선적으로 지향하기 때문에 보편적 준칙으로서의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다.²⁵⁾ 이에 통일사상은 개개인의 양심이 사적소유를 제한하는 공평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 창조성의 발휘와 만인의 복지

통일사상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창조본성(創造本性)으로 욕망이 주어져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자녀인 인간과 사랑으로 일체를 이루어 영원한 기쁨을 얻는데 있다. 그런데 만약 인간에게 욕망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 이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나 충동을 갖기 힘들다. 이에 하나님은 창조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인간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 어떤 것을 바라는 욕망을 본성으로 부여하였다. 이 욕망에 의하여 인간은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참사랑 이상의 완성으로 삼고, 하나님과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애적(愛的) 존재로 성숙되고자 하는 삶의 지향성을 갖게 된다.

인간의 욕망에는 정상적인 욕망과 형상적인 욕망이 있으며, 이 둘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 정상적인 욕망은 마음(생심)의 욕망으로, 진(眞)·선(善)·미(美) 등의 가치생활을

24)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767.

25) 황진수, 「천일국 공생공영공의주의 국가론에 관한 연구」, 『통일사상연구』 15(2018), 11.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욕망을 가리키며, 형상적인 욕망은 몸(육심)의 욕망으로 의·식·주와 성(性)의 생활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말한다.²⁶⁾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욕망이 모두 하나님의 심정을 터로 하여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곧 상대에게 무한히 온정을 베풀고자 하는 사랑을 기반으로 진실 되고 선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나은 물질적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망이 추동되고 발현된다. 인간은 빈곤과 물질적 궁핍을 극복하고 발전된 의식주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자 하는 형상적인 욕망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이 욕망에 의하여 생활에 유용한 재화를 생산하고 교환하며 소비하는 일련의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 통일사상은 인간의 경제적 행위를 하나님의 제3축복인 만물주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피조세계의 참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으로 만물을 책임 있게 주관해 나가기 위해서는 형상적인 욕망 뿐 아니라 자연의 물질을 잘 다루어 사회적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요구된다. 이를 통일사상은 하나님의 창조성(創造性)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창조성은 ‘심정을 바탕으로 대상(신생체)을 만드는 능력’으로, 구체적으로 내적 및 외적 발전적 사위기대의 연속적인 형성능력으로 정의된다.²⁷⁾ 하나님의 우주창조는 이러한 창조성의 발휘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하나님의 본성상 안에 있는 내적성상과 내적형상이 목적을 중심으로 조화롭게 수수작용하여 창조의 청사진인 로고스(logos)가 형성되었고, 이 로고스를 설계도로 본형상인 질료를 투입하여 모든 신생체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 또한 창조성을 천부적인 능력으로 갖고 있으며, 인간에게 있어서도 창조성은 아이디어 내지 설계도를 형성하는 구상의 능력과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기계와 원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새로운 신생체를 만드는 창작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²⁸⁾ 인간은 사랑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물을 다루는 창조성을 자유롭게 개발, 발휘하여 생산의 증대와 보다 윤택한 생활의 조건을 이루어 나간다. 경제 발전의 원동력은 심정에 기반 한 형상적 욕망과 인간의 창조성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이의 자유로운 발휘를 통해 과학기술을 발달시켜 이상적인 사회 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인 것처럼 인간 또한 환경을 사랑으로 창조해 나가는 존재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이란 이러한 창조성, 곧 창조의 능력이 협동이라는 사회적 매커니즘을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자본가,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 등 각각의 경제 주체

26)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300.

27)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74.

28)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250.

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특유한 창조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호 수수작용(授受作用)²⁹⁾하면서 생산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³⁰⁾ 그 어떤 창조성도 단독으로 존재해서는 생산이윤을 산출하지 못한다. 생산은 주체인 인간과 만물, 기계 등의 생산요소간의 수수작용, 인간 사이의 원만한 수수작용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즉 공통목적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협력의 토대가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인간의 천부적 능력인 창조성이 발현되어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생주의는 구성원들 간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생산의 이득이 결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³¹⁾ 이를 바꾸어 말하면 경제 활동의 결과가 사회적 공공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생산의 잉여는 수많은 생산주체와 생산요소들 간의 원만한 수수작용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므로 모든 이들의 번영과 복지를 위해 쓰여야 마땅하다. 공생주의는 경제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과도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인간의 복지증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다고 밝힌다.

V. 남북의 경제체제 통합 방향에 관한 제언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는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 경제 주체인 개개인들의 자유 실현, 사적이익의 추구, 개인의 책임과 행복을 핵심원리로 삼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제 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반면 사회주의적 계획경제는 집단의 이익, 전체의 복리, 평등과 연대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생산수단의 국가적 점유를 통해 진정한 인간평등을 이루어 나가는 경제를 실

29) 여기서 수수작용이란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해 상대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아,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과 번식과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풀이하면 주체와 대상의 자리에 있는 두 개체가 조화롭고 원만한 상호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의 정체성 유지는 물론 변화와 발전에 필요한 동력을 얻는 것을 수수작용이라고 한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12), 30.

30) 이상현, 『새 공산주의 비판』 (서울: 성화출판사, 2017), 104.

31) 이를 위하여 공생주의는 가정윤리에 기반을 둔 기업윤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의 생산은 여러 경제 주체들, 그리고 생산요소가 지닌 창조력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면서 복합적으로 수수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므로 생산을 통해 창출된 이윤은 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하고도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타락한 현실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들에 의해 이윤이 독점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윤리를 토대로 기업윤리가 재정립되어야 한다. 본연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것을 빼앗지 않으며, 가정의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며 협력해 나간다. 이와 같이 기업 내에서도 자본가와 노동자가 인류를 한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토대로 서로 가족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이러한 이윤의 독점현상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현, 『공산주의의 종언』 (서울: 도서출판 일년, 1987), 284.

현하고자 한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자기의 성장을 도모하는 개체목적과 전체의 발전을 지향하는 전체목적은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인주의적 원리나 사회적 원리 모두 그 자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 두 이념이 서로를 자리를 빼앗아 자기를 절대화할 때 나타난다. 개인주의적 원리가 사회적 원리를 배제하고 자기만을 진리로 주장할 때, 반대로 사회적 원리가 개인주의적 원리를 철저히 거부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가장 인간적인 경제는 두 원리를 균형 있게 조화시켜 나갈 때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공생주의는 비록 이상적인 경제 체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공동소유와 적정소유, 개인의 창조성과 만인의 복지사이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상에 있어서 하나의 윤리적인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지금까지 논의한 공생주의를 기반으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형성에 관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이후 한반도의 경제는 큰 틀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되 시장이 야기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정해 나감으로써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본다.³²⁾ 체제단일화의 관점에서 볼 때 통일한국의 경제는 그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유재산제도와 중앙관리경제를 기초로 하는 사회주의 체제는 국가적 통제 안에 이루어지는 균등 분배를 강조하여 생산과 소득창출의 동기가 되는 개인의 자유의지와 창조성을 억제하였고, 이는 결국 비효율성을 낳아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은 시장경제로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이는 곧 정부의 통제 하에 있던 경제적 기능이 서서히 민간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논한 것처럼 인간은 고유한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정을 토대로 이를 자유롭게 발휘하여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문명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할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지음을 받았다. 평화로운 환경창조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제3축복은 인간의 창조성을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창조성이 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지배층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경제는 인간의 형상적 욕망과 창조성의 발휘를 허용하고 지원하는 제도라는

32) 1990년대 동구권 체제전환 국가들은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기반하여 정해진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정책을 적극 도입하였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를 골자로 하는 미국식 시장경제 정책을 의미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시장 민능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고, 이에 따라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체제전환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강성진·정태용,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274.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국가가 분배의 평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회주의 체제 보다는 개인의 천부적 인권과 경제활동의 의욕을 고취하는 시장경제 체제에서 인간의 창조성이 더욱 자극되고 개발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신한반도 경제체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안정적인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유로운 시장이 항상 유용한 것만은 아니며 시장경제 또한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남북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국가의 적절한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 공동소유와 적정소유의 균형을 강조하는 공생주의는 자본주의가 가진 미덕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자유 시장이 야기하는 부작용, 즉 자본가들의 과도한 부의 독점, 소득의 불평등, 약육강식의 경쟁에 의한 공동체적 삶의 파괴를 강하게 경계한다. 하나님은 풍요를 원하지만 이때의 풍요는 어디까지나 만인을 위한 풍요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이룩된 생산력의 증대와 기술개발은 전체사회의 번영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에 공생주의는 자유시장의 논리만을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통합정책이 아닌 시장이 본질적인 기능을 맡고, 국가가 정의의 관점에서 시장의 여러 결함들을 수정해 나가는 제3의 관점에서 신한반도의 경제 정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즉 시장과 정부가 유연성을 가지고 적절하게 역할을 조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체제전환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참고해야 할 체제가 바로 자유와 계획을 조화한 ‘제3의 체제’로 불리는 사회적 시장경제이다. 통일독일의 경제체제 단일화 정책이었던 사회적 시장경제는 한마디로 약자들을 돌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장경제로 풀이될 수 있다. 개인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조화라는 목표아래 자유 시장의 기능을 보장하면서도 시장이 결정하는 구조가 사회전체의 이익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 체제의 핵심이다.³³⁾ 먼저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이 주는 효율성을 인정하고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다. 개인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사적소유의 인정, 시장을 통한 가격제도, 개인 간의 자유계약을 적극 시행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이 독점이나 소외계층의 궁핍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할 때에만 해당된다. 만약 시장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시장을 규제하여 질서를 세워 나간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에 테두리 질서가 부여될 때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이익이 훨씬 잘 보장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와는 구분된다.³⁴⁾ 물론 사회적 시장경제가

33) 윤덕룡,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만남」, 『기독교사상』 52 (2008), 72.

34)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7), 396.

동독에 적용될 때 고임금정책에 따른 실업이나 경기침체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사회적 시장경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비합리적인 정책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며, 독일이 통일 이후 동독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간 데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조화시킨 사회적 시장경제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³⁵⁾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통일한국의 사회적 상황에 맞게 모색해 나가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남북의 경제단일화 방향을 경제성장의 시각에서 뿐 아니라 사회 복지적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작업이 요청된다. 통일이란 반세기 이상 철저히 격리된 채 지극히 이질적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이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 것으로 북한의 체제전환을 전제로 한다. 통일이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이행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라는 두 가지 관점의 균형 잡힌 조합이 요구된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에 익숙한 한국의 경우 통일한반도의 경제 문제를 지나치게 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³⁶⁾ 물론 통일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후생과 편익을 분석하고 남측의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며, 빠른 시일 내에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통합 이후 필연적으로 야기될 수밖에 없는 소득의 불균형, 실업, 빈곤,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 등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남북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대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경쟁에서 배제된 약자들을 돕는 복지 정책은 성공적인 경제 체제 전환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의 틀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가진 부와 소득을 하나님이 주신 공유자산으로 보며 이웃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기꺼이 베풀고 자하는 성숙한 공적 의식이 요구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생주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창조신학을 바탕으로 사적소유의 절대화를 부정한다. 개인이 누리는 부가 온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획득된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부모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며 이를 약자들을 위해 책임 있게 사용하고자 한다. 개인이 갖는 사적 소유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특유의 개성과 창조성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랑을 중심

35) 김영윤·신현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독일통일」, 『한국정책학회보』 10(2001), 264.

36) 이용하 외,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6), 16.

으로 창조된 심정의 지향성에 따라 이웃에게 위타적(爲他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 바뀌어 말하면 사적 소유는 인간의 기본적 개성과 인권을 보장하고 타인을 돌보는 사랑의 행위를 수반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배와 독점보다는 나눔과 배려에서 소유의 기본 원리를 찾는 공생주의의 시각은 통일이후 북한 주민들을 한 가족으로 품고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열어준다. 이러한 따뜻한 경제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생주의는 통일한국의 경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경제 시스템에서 소외된 약자들이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복지적 관점이 더욱 강화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소수 특권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낮은 수준의 평균적 생활을 영위해온 북한주민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경제적 소외는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이 조성되어야 한다. 통일한국이 진정으로 하나의 조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는 남북의 경제통합 원칙이 성장과 복지라는 두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때 가능할 것이다.

VI. 나가며

공동소유와 계획경제를 통해 평등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과 창의력을 억압한 오류로 인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효율성과 경쟁에 기초한 시장경제가 사람들의 필요를 더 채워주고, 재화의 생산을 증대시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한국은 개인의 창조성과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 경제로 경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 또한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체제임을 고려해 볼 때 우리에게는 자유시장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윤리적 시각이 요청된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각을 가정연합의 이상경제론인 공생주의를 중심으로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공동소유와 적정소유, 개인의 창조성의 발휘와 전체 사회의 복지를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공생주의는 남북의 평화로운 경제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공생주의에 기초하여 향후 통일한국의 경제 통합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의 경제는 통일이후 자본주의적 시

장경제 체제로 단일화를 이루어야 하나 이를 전적으로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서는 안 되며, 시장과 정부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의 경제단일화 방향을 성장의 시각에서 뿐 아니라 복지적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작업이 요청된다. 경쟁에서 소외된 약자들을 보듬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을 때 북한 주민들도 시장경제를 보다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나아가 북한의 경제체제 전환으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들을 완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진·정태용. 『경제체제 전환과 북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 김명용 외. 『하나님의 경제Ⅱ』. 서울: 킹덤북스, 2014.
- 김영윤·신현기.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독일통일」. 『한국정책학회보』 10. 2001.
- 김병연. 「비교경제체제론의 최근 동향」. 『경제논집』 52. 2013.
- 김효정. “통일연구원 북한 전역서 시장 404개 운영·110만 명 종사.” 『데일리한국』. 2016.12.9.
- 마르크스·엔겔스. 『공산당 선언』. 서석연 옮김. 서울: 범우사, 1997.
- 문선명선생말씀편찬위원회. 『문선명선생말씀선집』 제271권. 서울: 성화출판사, 1999.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2012.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서울: 성화출판사, 2013.
- 윤덕룡. 「자본주의와 기독교의 만남」. 『기독교사상』 52. 2008.
- 이내영. 『북한경제의 현황과 2019년 전망』 이슈와 논점 1545호.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9.
- 이상헌. 『새 공산주의 비판』. 서울: 성화출판사, 2017.
- 이상헌. 『공산주의의 종언』. 서울: 도서출판 일념, 1987.
- 이선목. “세계상위 1% 부자, 글로벌 부 ‘절반’ 소유.” 『조선비즈』. 2017.11.15.
- 이용하 외.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16.
- 이종원. 『통일에 대비한 경제정책』. 서울: 해남, 2011.
- 존 로크. 『통치론』. 강정인·문지영 옮김.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6.
- 조성돈. 「독일 사회시장경제와 교회의 역할」. 『신학과 실천』 41. 2014.
-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 서울: 성화출판사, 1994.
-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이데올로기』. 김대웅 옮김. 서울: 두레, 2016.
- 페터 울리히.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윤리』. 이혁배 옮김. 서울: 바이북스, 2010.
- 하이에크. 『치명적 자만』. 신중섭 옮김.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1996.
- 한국비교경제학회. 『비교경제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7.
- 황진수. 「천일국 공생공영공의주의 국가론에 관한 연구」. 『통일사상연구』 2018.
- Smith, Adam.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Alfred A. Knopf, 1991.

Friedman, Milton. *Capitalism and Freedom*.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Hayek, F. A. *The Fatal Conceit: The Errors of Socialism*. Routledg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천도교의 통일운동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에 대한 토론문



이재봉 (원광대학교)

임형진 교수의 논문을 통해 천도교의 통일운동에 관해 많이 공부했다. 북한 및 통일문제를 공부하며 동학에 관해 글도 써본 터라 큰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읽었다.

북한은 동학농민운동/전쟁을 오래 전부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종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민족종교인 천도교는 우대해왔다. 이른바 ‘일당독재’ 국가에서 천도교청우당은 세 개의 정당 가운데 하나다. 북한에서 천도교의 교세와 영향력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어떤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남한에서는 교세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남북 천도교의 교류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다.

이 논문은 한반도 분단 전후부터 시작된 남북 천도교의 통일운동 및 상호교류에 관해 잘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천도교가 북한에서 정당까지 지니면서 다른 종교들보다 훨씬 큰 교세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배경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쉽다. 논문 끝에 부록처럼 덧붙인 ‘참조: 북한 천도교의 현황과 역할’의 내용이 북한사회와 남북 천도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임 교수는 “천도교는 북한의 최대 종교이다..... 북한 천도교는 ‘천도교 청우당’이라는 공식 정당을 통해 활동하는데 23명의 천도교인이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우리의 국회의원)으로 임명되어 정치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다.

여기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전체 숫자까지 밝히면 ‘23명’이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와 영향력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임 교수는 “비종교국가인 북한에서 이처럼 천도교가 나름대로의 상당한 권력과 교인 등 전국적인 분포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손병희를 중심으로 한 동학의 지도자들은 북부 지방에 포덕(선교활동)을 집중했다..... 혁명의 중심지였던 남부지방보다 훨씬 탄압과 관의 감시가 적었던 북부지방은 이때부터 동학이 전파되어 일제시대와 해방 직후에는 천도교세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작금의 북한 종교인에서 천도교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과거의 동학, 천도교 교세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단 전후에 천도교인만 북쪽에 많았던 게 아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도 남쪽보다 북쪽에 훨씬 많았다. 해방 이전부터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나 ‘조선의 예루살렘 평양’이란 말이 떠돌 정도였다. 북쪽에서 과거의 동학/천도교 교세가 현재의 교세와 무관치 않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 다음과 같은 두 번째 이유가 더 결정적이라 생각한다.

셋째, 임 교수는 “북한에서 천도교가 위세를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김일성과 천도교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16세의 김일성이 만주로 건너와서 첫 번째 입학한 학교가 화성의숙이었는데 당시 교장선생이 최동오였다. 후일 임시정부의 법무부장을 지낸 최동오는 독실한 천도교인으로 그 시절 어린 김일성에게 동학과 천도교를 가르쳤다..... 과거 청우당 위원장이었던 최덕신과 류미영 등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김일성과 천도교의 개인적 인연이 “북한에서 천도교가 위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크고 결정적 이유 아닐까. 천도교인 최동오는 김일성의 스승이기에 앞서 아버지 김형직과 항일독립운동 동지였다. 김일성이 1926년 독립군 간부 양성을 위한 군사정치학교인 화성의숙에 들어간 것은 그해 사망한 아버지의 유언과 아버지 동지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고, 화성의숙의 교장이 아버지의 친구인 천도교도 최동오였던 것이다.

북녘의 김일성과 남쪽의 최동오는 1948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협상회의에서 다시 만났고,

1950년 한국전쟁 중 서울을 점령한 북녘 인민군들은 김규식, 안재홍, 조소앙 등과 함께 최동오를 북녘으로 모셔갔다. 소위 ‘남북’했다.

그리고 임 교수가 아무런 설명 없이 “최덕신과 류미영 등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했는데, 최동오의 아들 최덕신과 류미영 부부가 1986년 북녘으로 망명했다. 최덕신은 남쪽에서 육군사관학교장을 지내다, 한국전쟁 중 사단장으로 북녘 인민군과 싸웠고, 휴전회담 때는 한국군대표를 맡았으며, 군단장을 지내다 중장으로 예편했다. 그 뒤로는 베트남대사, 외무부장관, 서독주재대사로 일하다 1967년 천도교 교령 자리에 올라 한국종교협의회회장을 맡았다. 이런 사람이 1976년 미국에 건너가 살다 1986년부터 평양에 정착한 것이다. 김일성 집안과의 인연 때문이 아니겠는가. 김형직과 최동오의 동지애에서 시작된 두 집안의 특별한 인연이 북녘에서 천도교가 가장 세력이 큰 종교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 배경이나 이유이리라는 말이다.

넷째, 임 교수는 생략하고 있는데 1997년 남쪽의 오익제 천도교 교령이 월북했다. 그리고 2019년엔 최덕신·류미영 부부의 아들 최인국이 북녘으로 올라갔다. 최동오-최덕신-최인국으로 이어진 3대째 월북이다.

이러한 남쪽 천도교 지도자들의 월북이 남쪽 천도교의 통일운동을 촉진시킬지 위축시킬지 궁금하다. 그리고 남북 천도교의 교류협력에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임 교수의 견해를 듣고 싶다.



『공생주의로 본 남북의 경제체제 통합 방향』에 대한 토론문

남광규 (고려대학교)

우리 헌법은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통일의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권 담당자와 교섭하여야 하며 결국 남북한 양측 당국의 평화적 합의에 의한 통일만이 합헌적이라는 논리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합의에 의한 점진적 통일이든 급변사태에 의한 급진적 통일이든 통일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북한의 정권 담당자와 교섭해야 하는 점에서 모든 통일은 형식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면 남북한의 헌법 통합은 그 모델을 남한 헌법이나 북한 헌법에 두는 것이 모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현행 헌법에 따른 통일헌법의 가능한 규범적 한계로는 우선 우리 헌법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하는 헌법에서는 남북 당국의 합의에 의한 ‘평화적 통일’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면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제4조)을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합의통일을 하되 독일식 흡수통일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합의통일의 방향성과 규범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제한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경제제도로는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서로를 지지해 주는 버팀목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과도한 물질적 욕심과 비뚤어진 이기심으로 시장을 악용함으로써 경제위기가 발생하고 시장경제가 불안정해 집니다. 이것은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인간의 잘못된 심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 세계가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강화명교수님의 발표문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내용을 공생적 관점

에서 바라보면서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과 생각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경제체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이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치경제적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 및 사회정의의 실현을 강조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국민들 간의 지나친 부의 편중을 국가가 일정하게 개입하여 소득 분배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정신은 극단적인 자유시장경제의 폐해로 인한 경제적 부정의와 계층화의 심화가 결국 통일국가 건설의 정치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며 사회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민간경제 활동 주체에게 가능한 한 최대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일통일의 법적 기본이 되었던 <독일기본법>의 경제적 기본질서도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주의를 표방했는데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제재의 생산과 분배가 자유경쟁체제의 원칙에 의해 행해지되,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한 권리일 뿐 아니라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국가의 의무로 인정되어 있는 경제헌법체제를 말합니다. 또한 <독일기본법>은 제28조에서 사회적 법치국가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복지국가성과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치이념입니다. 사회문화적 기본질서에서도 ‘사회복지주의’에 두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인간의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이념으로 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혼란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적 대안들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화명교수님이 발표한 공생주의는 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분과발표2

평화분과

발 표 오기성 (경인교육대학교)
통일한국에서의 사회통합 연구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토 론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한혜진 (동아대학교)

통일한국에서의 사회통합 연구

오기성 (경인교육대학교)

목 차

- I. 서 론
- II. 사회통합의 의미와 유형
- III. 통일한국의 갈등 양상
- IV. 사회통합의 철학적·가치론적 지향
- V. 결론: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의 과제

I. 서 론

통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통일 당시의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이 상호 이질성을 완화하고 공존의 틀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이다. 반면 통일이 급속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통일 이후 내적 통합과정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공동체의 통합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적 갈등의 해소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¹⁾ 남북의 진정한 통합은 체계통합과 생활세계 통합을 포함하는 사회통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교육은 통일의 시작점이자 최종점이다.

주지하듯이 1990년 10월 3일 독일은 정치적·제도적으로 통일을 달성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는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아직도 '분리' 상태이다. 통일 이후 30여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동서독 시민들 사이의 '내적 통합'은 미결 과제로 남아 있다.²⁾ 내적 통합

1) 박종철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5.
2) Trommsdorff, Gisela und Hans-Joachim Kornadt, "Innere Einheit im vereinigten Deutschland?" *Die Transformation*

은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다. 인간의 의식은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통합은 어려운 문제일수밖에 없다. 독일이 통일을 이룬지 7년차에 독일 정신분석 치료 및 심층 심리학회 회장인 한스 요하임 마츠(Hans-Joachim Maaz)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내적 통합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질성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물론 세대를 거쳐 완화될지 모르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매년 10만여 명의 동독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독으로 이주한다. 동독 지역은 완전히 사람이 없어진 실패한 지역이다. 일자리는 없고 실업률은 높다...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통일의 승리자와 실패자, 더 나아가 돈 많은 자와 가난한 자, 그런 사회적 격차가 커지는 것이다.³⁾

그런데 이러한 내적 갈등은 두 집단간의 심리적 이질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며, 헌신하는 태도로서 내적 갈등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일까? 분명한 점은 사회적 불평등, 편견, 차별 등의 문제가 개인의 의식변화에 의해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사고 자체가 비현실적 이라는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위의 독일의 사례에서 일자리와 실업률이라는 문제가 보여주듯이, 경제적 격차, 소득불균형,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는 ‘분배적 정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선한 본성에 의지하여 사회통합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경우에도 이러한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는 동서독 통일당시 경제규모와 남북의 상황이 더 이상 비교이 대상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한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북한의 국민총소득(GNI, 명목)은 36조 6,310억 원으로 남한 1,730조 4,614억 원 대비 1/47의 수준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 원으로 남한 3,364만 원 대비 1/23 수준임. 2017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명목)은 36조 3,818억 원으로 남한 1,569조 416억 원 대비 1/43의 수준으로 나타났다.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북의 사회통합 문제를 온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접근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생활기회의 형평성 또는 기본권의 보장을 실현하는 제도와 정책적 준비, 둘째, 상이한 사고방식과 태도, 가치관을 포함하는 문화적 갈등을 완화할

Ostdeutschlands (Opladen: Leske und Budrich, 2001), pp.367-368; 윤철기, “독일 ‘내적 통합’이 남북한 ‘마음의 통합’에 주는 교훈,” 현대북한연구, 17권 2호 (2014), pp.17-18 재인용, pp.9-43.

3) 한겨레 21, 제657호 (2007. 4. 26).

4) 통계청, 통계로 보는 북한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8), p.6.

수 있는 평화문화 역량과 교육, 셋째, 이 두 가지의 근본적 토대가 되는 철학적·가치론적 지향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접근을 기본 맥락으로 하여 통일한국에서의 원활한 사회통합을 한 추구하기 위해 첫째, 사회통합의 의미와 유형을 이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둘째,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 양상을 고찰해 보며, 셋째, 갈등을 완화하고 보다 나은 인간답고 평화로운 삶을 일구기 위한 철학적·가치론적 측면을 성찰해 보며, 끝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보다 원활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사회통합의 의미와 유형

1. 제도통합과 사회통합

남북의 통합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나 체제, 제도 등의 통일이라는 의미를 넘어선다. 통합은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및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의 모든 분야에 걸쳐 단절적이고 대립적인 분단체제를 총체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위하여 분단체제를 특징짓는 대립적 측면의 이념, 정치체제와 권력구조 등을 통합하고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이질화된 상징과 생활양식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

따라서 통합은 제도적 통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개될 민족공동체의 삶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정치적·제도적 통일은 체계 차원의 구조적 통일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우리는 이질화된 두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의식과 사고방식의 이질화에서 오는 다양한 사회적 균열의 완화와 치유를 통해 내적·의식적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통합의 유형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가통합과 사회통합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국가통합은 국가형성을 위한 제도적 절차와 정치적·법적 절차의 마련, 국제법적 절차 및 국제적 지지 등을 의미한다. 사회통합은 통합에 따른 각종 갈등을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해소하고, 가치관과 규범, 생활양식 등에서 절차와 규칙이 내재화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⁵⁾ 사회통합의 이러한 측면은, 바꾸어 말하면, 체계통합(system integration)과 생활세계통합(life-world integr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체계통합은

5) 이상신외,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25.

사회적 불평등 완화, 복지 증대 등과 관련한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 주로 관심을 갖는다. 이는 외형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통합의 내적 측면으로서 생활세계통합은 통합된 양 집단 구성원의 가치와 의식, 문화면에서 이질성을 해소하고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한반도에서의 통합은 단순한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통한 봉합이 아니며, 정치 및 경제체제와 사회체제간의 통일일 뿐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의식과 가치관을 포함하는 생활세계의 통합이다. 통합의 하위 범주인 사회통합은 제도적 통합과 생활세계통합을 포함한다. 통합의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경우 우리는 사회통합에 주목하면서도 사회통합이 갖는 체계통합으로서 구조적 통합과 미시적 통합으로서 생활세계통합 개념에 유념하게 된다.

사회통합의 구조적 차원은 남북한 사이에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이질화, 분리, 차별, 불평등 상태를 국가나 사회의 적극적인 제도와 정책 추진을 통해 극복함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통일사회 구성원들의 생활기회의 형평성을 증대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사회가치와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강제력을 가진 법적, 제도적 접근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이러한 구조적 통합과 달리 미시적 차원의 생활세계 통합은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적 자율성과 의존의 관계를 구성해내는 통합의 방식이다.⁶⁾ 하버마스에 의하면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으로 행위가 언제나 이루어지는 영역이다.⁷⁾ 사회에 편입되는 개인이 배제되지 않고 통합되기 위한 생활세계통합은 구조적 통합을 통해 촉진되거나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세계통합은 사회 질서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 공감, 사회적 배제 집단의 포용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의미에서 생활세계통합은 한편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단일 생활권 내에서 생활하면서 동류의식을 형성하고 상호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완화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면서도, 다른 한편 개인의 획일적 사회규범 수용이라는 부정적 의미보다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다양성 유지와 조화의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여 보다 격상된 평화로운 삶을 일구어나가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통합의 하위 부분으로서 문화통합은 가치관, 사회적 상징, 예술적-미학적 표현 및 일상생활문화의 통합을 포함한다. 문화적 측면은 그 변화과정에 있어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다른 생활영역에 있어서는 통일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급함을 필요로 하지만 문화에 있어서

6) 양민석 송태수, “독일 통일 20년-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4호 (2010), p.4.
7) Ju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I ; *Life World and System*, trans. by McCarthy (Boston : Beacon Press, 1987), pp.153-156.

만은 성급함이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생활세계는 일시에 통합되거나 일시에 붕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하버마스에 의하면 생활세계는 의사소통적으로 행위가 언제나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생활세계의 통합은 과거 지향의 관점에서 동질성에만 집착하는 사고에서 벗어난다. 이 생활세계는 한반도 미래의 기획의 차원에서 남북의 구성원들이 개방적인 소통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 가는 세계이다. 남북의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삶을 영위해 오면서 다른 문화를 이룩해 왔다. 바로 이러한 생활세계의 ‘다름’의 측면이 공존하고 소통하면서 보다 질적으로 발전된 공통성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생활세계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움의 연속적 과정은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이 추구해야 하고 찾아야 하는 통합의 비전이다. 계량적 수치에 기반한 총량적 증대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평화문화에 기반한 질적으로 제고된 소통과 이를 통한 새로움의 창조 과정 속에서 비로소 통합의 기쁨을 서로 공유하고 더 나은 생활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2. 생활세계통합 과정과 적응 유형

이질적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할 경우 사회문화적 갈등은 필연적이다. 사회문화적 갈등은 부분적 또는 전체적 파괴에 이를 수 있는 문화적 행위유형 사이의 비교적 안정된 부정적 상호작용이다. 문화갈등의 수준은, 첫째로, 기본적인 행위유형들 사이의 갈등인 미시적 수준, 둘째로, 삶의 방식, 이데올로기, 종교의 갈등인 중간적 수준, 셋째로, 문화들 사이의 갈등인 거시적 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문화적 갈등에는 상당 부분이 ‘문화적 문제’라는 개념으로 파악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화적 문제들은 사회적·심리적 문제들과 혼합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사회·문화적(socio-cultural) 문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서로 다른 사회체제에서 살면서 상이한 의식과 사고, 생활관, 생활감각이 형성된 사람이 서로 만날 경우, 이들이 만나는 장면에서는 상호 간에 낯선 것들이 충돌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바로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다. 흔히 동양인이 서양에 가서, 혹은 반대로 서양인이 동양에 와서 낯선 언어와 관습, 행동방식과 음식에 시달리는 것을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분단국가가 통합될 때에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처럼 낯선 문화와의 만남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현상들을 캘베로 오버그(Kalvero Oberg)는 1960년에 ‘문화

적 충격'(Cultural Shock)이라고 지칭하면서, 문화적 충격은 “모든 사회적 접촉에서의 익숙한 기호()들과 상징들을 잃어버리는 것”⁸⁾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1995년 미국에서 발간된 『문화적 충격의 다섯 단계』에서 피더슨(Paul Pederson)은 문화적 충격을 “어느 한 사람이 낯설고, 과거에 습득한 과정들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사회체제에 자신을 적응시키는 것이 강요된 상황”으로 정의하였다.⁹⁾ 피더슨에 의하면, 문화충격의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서 기대되는 것과 그들이 자신들 주변 사람들로 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에서 더 이상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통당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낯선 사회체제와의 갑작스런 만남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충격과 이때의 문제들은 바로 동독인이 최근에, 그리고 미래의 북한 주민들도 경험하는 될 문제의 양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적으로 일어나는 문화적 충격 현상들이 개인의 의식 속에서 변화되는 과정을 볼프 바그너(Wolf Wagner)는 다음과 같은 U자형의 5단계 도식으로 표시했다. 볼프 바그너 교수의 도표는 문화적 충격에 부딪친 개인이 낯선 요소, 갈등을 인지하고, 다른 문화도 이해하고 익숙하게 되면서 극복하는 과정을 말해 준다.

* 문화적 충격의 U 커브 진행

1) 출발점 ‘환희’

자기 문화 내에 존재하는 단계
외래문화와의 접촉에서 관찰자의 시각

2) 하강 ‘소외’

외래문화를 다소 충격적으로 접함
문화적 대응 능력 상실, 자기 회의
자신의 문화에 책임전가

8) Oberg, Kalvergo,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men”, *Practical Anthropology*, Vol.7 (1960); 이상면, “통합과정에서의 문화적 충격과 사회·문화적 문제들”, 문화방송사 편 남북한의 사회·문화·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 (서울: 문화방송, 1997), p.201 재인용.

9) Pederson, Paul, *The Five Stage of Cultural Shock—Critical Incidents around the World* (Conneticut/London, 1996); 오기성, 통일사회로의 발돋움, 그 성공을 위하여 (서울: 양서원, 2007), pp.29-33.

3) 추락 ‘확장’

외래문화 거부-자기 문화의 옹호, 미화(美化)
 향수병이 최고조에 달함

4) 상승 ‘오해의 인식’

상호 이해의 어려움이 문화적 차이에 기인함을 인식
 문화적 대응 능력 상승

5) 종점 ‘상호 이해’

낮선 문화의 기준들 이해, 습득
 양 문화의 규칙들에 있어서 다시 문화적 대응 능력 획득

언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통합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변화는 적응을 요구한다. 구성원들은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결국 적응이 안 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북이 국가 통합을 이루었을 때, 그전에 양측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소통을 했다고 해도 갈등은 필연적이다. 통일한국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갈등과 혼란은 북쪽 구성원만이 경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구성원 모두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70여년간 살아온 사람들이 경험해야 하는 갈등과 혼란이 상대적으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른바 생활세계통합 과정에서 정체되거나 고립되는가 하면, 배타적 내지 적대적 감정으로 생활세계통합 과정에 저항하는 한편, 오히려 과거 분단 사회에 대한 향수로 회귀할 수도 있다.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통일은 기쁨이자 희망일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으며, 분단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아비투스 등에 대한 치유의 길을 걷게 되고, 기존의 두 배가 되는 풍요로운 공동체를 이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축복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 북쪽 구성원들은 통일 한국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국가적 비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풍요롭고 세계화된 문화향수를 누리고 있는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과 기대감을

가지고 남쪽 구성원들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통일을 기쁨과 환희로 맞이할 수 있다. U 커브에서 환희의 단계에 해당한다. 문화 적응 유형에서 보면, 이러한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나 규칙을 무시하고 상대 사회의 것만을 인정하는 문화적 흡수자 유형 또는 문화동화형(assimilation)에 속한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낯선 이념과 체제에 일방적으로 적응해 나가야 하며, 생존경쟁의 삶에서 살아 남아야 한다는 사실, 아름답고 건전한 문화가 아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문화와 현실에서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다른 한편 이러한 낯선 체제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 그리고 과거 삶의 장(場)과 그곳의 문화의 낙후성에 대한 비관이 병존함을 생생하게 겪게 되는 단계에 접어든다. 이것이 곧 U 커브에서 소외의 단계에 해당한다. 문화 적응 유형에서 보면, 이러한 단계의 사람들은 아직 문화적 흡수자의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단계이다.

부적응과 갈등, 혼란 속에서 고통을 경험하는 한편, 이전에 동경해왔던 남쪽의 문화가 지닌 부정적 측면이 파악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확장되면서 모두 부정적으로만 보여지는, 이른바 ‘준거 없이 무엇이든 미운’ 대상으로서 남한의 사회문화와 사람들이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부정적 양상이 없었던 곳으로서 과거 삶의 터전이나 양식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삶을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연 통일은 잘 한 것일까?”하는 회의감과 함께 사회적 이탈 현상이 증대된다. 다른 한편 남쪽 사람들 뿐 아니라 북쪽 사람들이었지만 적응하려 노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된다. U 커브에서 추락의 ‘확장’ 단계에 해당한다. 문화 적응 유형에서 보면, 이러한 단계의 사람들은 사회문화적 적응의 실패과정 속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나 관습만을 인정하고 상대사회가 지닌 것들은 배척하는 문화적 고립자의 유형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남북 문화권 어느 쪽에도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주변적 위치에서만 맴돌게 될 수 있다. 즉, 남북의 어느 문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과거의 문화가치에 향수를 느끼거나 현재의 문화가치를 부정하면서 허무주의 및 쾌락에 빠지기 쉽다. 이른바 문화주변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갈등과 혼란, 적응의 어려움 속에서도, 접하고 있는 두 형태의 문화에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싹트기 시작한다. 예컨대, 탈북민의 남한 사회 적응과정을 통해 보면, 초기에는 남한의 삶의 양식과 문화에 대해 동경을 지니지만, 실제 그 생활에 접하면서 과거에 긍정적으로 보아왔던 개인주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대하여 전적으로 찬동하지는 않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 나아가 그들은 개인주의 가치관의 부정적인 현상으로서 치열한 생존 경쟁, 타인에 대한 무시, 예의범절의 등한시, 도덕적인 퇴폐 성향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물질적 풍요를 기대했지만, 물질주의, 이기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이에 따라 남북의 문화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보게 된다. 물질적으로 어렵지만 인정과 소박한 북한에서의 삶을 재평가하게 된다. U 커브에서 상호 ‘오해의 인식’ 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

오해의 인식은 자신이 과거의 터전이었던 사회와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사회의 이질적 문화 구조 사이에서 두 문화의 상호작용 영역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아가는 태도로 발전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북쪽 출신 구성원들은 두 사회 사이에서 사회·문화적 유동성을 성취하면서 경제적·정치적 장애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극복한다. 이 단계는 U 커브에서 중점으로 규정하는 ‘상호이해’, 즉 진정한 통합의 단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구성원들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낯선 문화의 기준들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마저도 무작정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세로 수용하기도 하고, 거리를 두기도 한다. 자신의 문화 또한 ‘낯설게 보기’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노력한다. 그 결과 양 문화의 규칙들에 있어서 다시 문화적 대응 능력을 획득한다. 문화적 적응 유형에서 보면, 오해 인식의 단계와 상호이해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문화적 상호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북한지역 출신 구성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헌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한국인들, 새롭고 낯선 삶의 양식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 부적응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보아주면서 기다리는 남한 지역 출신 구성원의 역할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남쪽 출신 구성원들은 북쪽 출신 구성원들의 삶의 과정을 거울로 삼아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북쪽 지역과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오해 등을 인식하고 이것의 오류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시각과 태도의 수정, 적극적인 배려적 실천을 통해 긍정적이고 발전적 상황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 디딤돌은 곧 교육의 역할이 될 것이다.

Ⅲ. 통일한국의 갈등 양상¹⁰⁾

북한은 집단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주의라는 체제를 삶의 형식으로 하고 있으며, 남한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삶의 형식으로 하고 있다. 삶의 형식이란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삶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삶의 형식일 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 서로 상극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는 체제이다. 양 사회는 이러한 상극적, 대립적인 이념과 체제를 기초로 자신들 체제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체제경쟁을 지속하여 왔다. 각 사회의 국가체제를 뒷받침하고 국가활동을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 경쟁은 양 사회의 기본 구조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해방이후 미군과 소련군에 분할 점령되면서 남한에서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사회와 문화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문화가 정상문화로 자리 잡았다. 지속적인 분단 상황의 고착화와 함께 남북의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과 문화정책은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 다른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남한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요시하며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문화정책이지만, 북한은 문화정책이 국가 계획 체계의 하위개념으로 기능하면서 국가정책을 선전 선동하는 국민선도 정책이라는 면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적 조건들이 남과 북의 문화성과 체제 상황을 더욱 이질화시킨 요인들이다. 그럼 이러한 상이한 이념과 체제 속에서 다른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형성해온 두 사회가 통합될 경우 주목해야 하는 갈등양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1.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사회 갈등

가. 불평등 확대

통일 이후 남북간 비대칭성의 증대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갈등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10) 이 내용은 주로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김병로,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 이념,” 허태회 외, 사회통합위원회,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2011); 전우택, 통일한국의 사회갈등 예측 및 해결방안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홍기준,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 국제정치논총, 39(3) (2000); 신은희, “세계화와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해석,” 이태연구, 16(1) (2009); 오기성, 북한사회의 이질화 및 갈등 분석 (서울: 국방대학교, 2000); 오기성, 통일사회로의 발돋움, 그 성공을 위하여 (서울: 양성원, 2007); 김동규 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2); 박영자 외,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서울: 통일연구원, 2015); 김수암 외(2011),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무엇보다 남북간 경제력의 극심한 격차는 통일한국에서는 자산 및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생활수준의 격차는 남북한 주민들간에 거리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서 빈부의 격차를 크게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남한 사람들이 비교의 준거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로 인해 직면하게 될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열등감과 좌절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동체 형성을 저해할 것이다(김병로, 2011: 248).

현재의 경제 상태로 놓고 보더라도 통일이 되었을 경우, 북한 사람들은 계층서열에 있어서 분명히 급격한 하향이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경제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거의 붕괴되었다. 박영자(2015)와 김수암(2011)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후 상층은 10~15%, 중층이 20~30%, 하층이 60~70%라고 평가하고 있다.¹¹⁾ 하류층은 각종 질병과 영양실조 등으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생활수준의 격차는 남북한 주민들 간의 괴리를 더욱 크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다. 열등감 혹은 좌절감은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남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북한 사람들을 ‘이등 국민’으로 취급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경제적 차이에서 비롯된 불평등으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나. 실업과 복지

통일이 되면, 북한지역에서 높은 실업률, 물가폭등, 기업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서독의 경우 실업률은 40%(320만 명)에 이르렀다. 박종철은(2013)은 북한에 1100만의 경제활동인구 중 30%인 330만 명, 혹은 약 100만 명의 도시노동자가 실업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전우택(2014)은 과거 북한 체제 내에서 군, 경찰, 정보, 사상 등을 다룬 공무원, 교수, 전문가들은 그들의 경력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상 교육제도와 의료보장, 연금제도, 각종 보조금 제도 등 사회복지제도의 골격을 갖추고 있었다. 물론 북한 사회주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11) 박영자 외,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41-42; 김수암 외(2011),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241-242.

실질적으로 복지제도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관념상 사회주의체제의 복지제도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듯 대량의 실업사태와 인구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혼란과 북한지역 노동력의 공동화, 복지에 대한 불만, 주택, 의료 등의 사회문제로 인한 복지욕구가 팽창할 것이다. 홍기준(2000)의 지적과 같이, 이것은 곧 사회갈등으로 이어져 사회통합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다. 역차별 의식: 세금증가와 저소득층 혜택 감소로 인한 불만

통일이 되면서 남한 내에서 있게 될 대표적 사회갈등은 통일비용으로 인한 세금 증가가 될 것이다. 세금은 더 많이 내게 되는데, 자신들의 수입이나 복지 혜택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남한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저소득층들의 불만이다. 북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아무래도 남한에 지출되는 사회복지비용은 정채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만일 남북한 지역의 인구이동이 부분적으로라도 허용되어 일부 북한 노동인력이 남한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들은 대부분 남한에서 단순 노무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남한의 저소득층과 일자리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것이 남한의 저소득층들의 불만을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

2. 문화적 충격으로 인한 갈등

가. 이등국민으로서의 소외감

남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도록 훈련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북한 사람들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살아오면서 좀 더 집단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도록 훈련되어졌다. 이러한 두 집단이 만나 양측 간 존재하는 과제나 문제들을 해결하여 할 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그 해결 방식에 대한 기대, 갈등 감정의 표현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게 되고, 그것이 어려움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경제 격차와 실업의 증가, 상대적 박탈감과 무기력 속에서 북한 지역 사람들의 소외감을 갖게 될 것이다. 이들은 통일한국이란 국가에서 자신들이 일종의 외국인, 타자, 이방인, 주변인, 이등 국민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자신들이 주인이고 주체라는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특히

북한지역에서 살지 않고 남한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게 될 사람들의 경우, 현재의 남한 내 탈북자들이 겪는 심리적 소외감을 느낄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북한 지역에서 산다 할지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주요 직책 등을 남한 출신 사람들이 독점할 경우, 이런 감정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 문화양극화와 상업화

남북한 문화가 만났을 때 직면하게 될 심리적 문제점으로는 근대적 가치와 전통적 가치의 만남으로써 파생되는 문화적 충격을 들 수 있다. ‘한국’의 현대적, 상업적 대중문화와 ‘조선’의 전통적, 폐쇄적 주체문화가 충돌함으로써 일종의 문화충격(culture shock)을 유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인한 남북문화 사이에서 융합되지 못하는 ‘문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 문화나 북한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이등문화(second culture)’ 혹은 제3세계 등급으로 취급하는 문화편파주의의 조장 현상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 문화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문화에 대한 ‘문화 상업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는 북한문화를 다원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배우려는 시민단체의 통일운동과 같은 성격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염두 해 두는 사업가들에 의한 문화점유 현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문학예술 작품 가운데 정치현실을 풍자하거나 문제점을 폭로하는 작품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자론, 수령형상화를 표현하는 예술은 경쟁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단기간내 폐기될 것이다.

다. 주체사상 해체와 정체성 갈등

통일이후 북한 지역은 지속적인 문화교류 사업의 결과로 다양한 문화의 유입과 다인종 사회의 세계화 추세와 호응하며 일정 정도 문화적 다원주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북의 주체사상으로 표현되는 정신세계는 다채로운 문화양식들과 공존하는 이중문화성의 양식으로 남아 있다가 하나의 ‘오래된 전통’으로 역사 속에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 이러한 현상은 북한 지역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통합과정에서 정체성의 위기는 남한지역 주민들보다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 이후 남북한 인적 문화적 교류가 시작될 경우 북한지역 주민들은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반세기 이상에 걸친 분단의 피할 수 없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체성의 위기는 곧 통일한국을 구성하는 각 사회집단들간에 비교 혹은 차별화 과정을 통해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라. 남북한 사람들의 탈법적 행동에 대한 갈등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이 되면, 대량인구이동과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이로 인한 사회혼란과 범죄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과거 북한은 법에 의하여 통치된 국가라기 보다는 권력자의 권력에 의하여 통치된 국가였다. 따라서 일반 주민들은 법을 두려워 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다 보니, 법은 약하고 모자란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폭력을 쓰더라도 다 제 살길 자기가 찾고 만든다는 의식이 강하게 되었다. 이것은 통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즉 통일 이후에도 법과 규정 보다는, 개인의 사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좋을 대로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뇌물도 쓰면서 행동하는 것에 그리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특징은 남한도 가지고 있는 것이나 상대적으로 북한 출신 사람들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들은 북한지역 구성원들의 법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헌법이나 법률은 김일성의 교시나 김정일의 방침 아래에 존재한다. 북한주민들은 법보다 당의 규범이나 정책을 가까이 하며, 중요시 여긴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검찰소, 재판소 등 법을 집행하는 이른바 법 기관 사람들의 말이 곧 법이 되며 현행법보다 더한 위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법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편이다.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면 법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마약 거래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폭력은 분쟁을 해결하는 일상적인 문제해결방식이며,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폭행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사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회이다.¹²⁾

12) 이에 대해서는 최봉대,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새로운 법제도 적응 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서울: 통일부, 2011); 최영신, 김윤나, 김용성,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마. 성문화 변화와 상품화

북한에서는 여타 사회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에 비해 여성의 사회 참여도가 높으며 사회 활동에서 남녀 차별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가부장제문화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가부장제가 강한 북한 지역 구성원들의 경우 여성의 권리신장에 따른 성문화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1946년 7월 30일, 북한에서는 “남녀평등권보호법령”을 제정하여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선언하였지만 실제 북한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의 폭력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본인 역시 폭력에 대항하거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던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 이혼을 하려하는 경우에도 북한의 법정은 남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¹³⁾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친선물결’ 영향과 함께 사회구성원들의 의식변화가 일고 있다. 혁명세대의 퇴조와 함께 전후세대의 등장은 기존의 가부장적인 질서를 허물고 약화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의 새로운 가치관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신문화풍토는 지속적인 세계문화의 유입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인권기준의 여파로 남성중심으로 만들어진 의사결정구조에 여성의 권리가 부재될 수 없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북한사회에서도 여성의 정치사회참여와 진출과 함께 병행하는 양성평등적인 가정의 미풍양속이 중심문화로 자리 잡을 것이며 결혼가 전통적인 여성의 성역할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조선식 여성주의’ 문화 현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통일한국에서는 남한 지역의 개방적인 성문화, 영리추구의 성문화가 북한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 때 적극적인 사회적 노력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하에서 여성의 성이 상품화되는 문화가 통일한국의 경우 확산·심화될 것이다. 기존의 사회주의권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확산된 경우와 많은 저개발 제3세계 국가에서 보여지고 있는 바와 같이, 매춘과 같은 비공식적인 부문에서의 여성들이 겪었던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사회바탕 위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기본적으로 위협하는 결과가 파생될 것이다. 또한 퇴폐적 향락주의 문화가 만연할 경우 한 국가 내에서 여성 간의 계층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사회통합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다.

및 효과 평가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최영신 외,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장준오·고성호,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참조. 13) 최영신 외,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p.94.

IV. 사회통합의 철학적·가치론적 지향

어느 날 대한민국의 국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가 극적으로 통일 조약을 맺는다. 광화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할 것 없이 제2의 광복을 맞이하듯 축제를 즐긴다. 개천문 광장에서도 노동자, 지식인, 사로청 청년들, 학생들이 모여 야회를 통해 조국의 통일을 맞이한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의 환희 물결을 한반도기가 수놓는다.

지구촌 역사에서 분단국이 평화롭게 합의에 의한 통일을 우리 한민족처럼 한 국가가 있었던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전쟁과 정복을 통한 통일의 역사는 있어 왔지만, 적대감과 불신을 극복하고, 공존공영을 추구하면서 삶을 영위하다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살기를 결정하고 즐거워 한 사례가 있을까?

그런데 한반도 기로 수놓아졌던 통일의 환희가 서서히 식어가고, 한쪽은 상대를 아노미적 개인주의라고 비판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을 맹목적 집단주의라고 비난하게 된다면? 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 형제에게 왜 더 베풀지 않느냐고 불만을 털어놓는 반면, 도대체 얼마나 더 주어야 하느냐고 꾸짖는다면? 한쪽은 상대에게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하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무능하냐고 서로를 비난한다면? 결국 이상적인 통일의 청사진은 색이 바래지고,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태도가 다툼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이 정말 잘한 일일까를 반문하게 된다면? 통일 사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애태우며 추구한 통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게 소원이라고 목놓아 외치던 통일한국을 달성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일까? 3장에서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갈등 양상을 살펴 보았다. 현실적 측면에서 보면, 무엇보다 남북이 함께 더불어 사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부각되는 것은 경제적 격차일 것이다. 초기에 경제적으로 앞서 있는 남쪽 사회는 그 지역 구성원들의 열렬한 지지와 함께 북쪽 사회에 대한 대대적 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이루려 할 것이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북쪽 사회 구성원들은 애초 기대와는 달리 소득격차와 실업, 생활능력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북쪽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을 분배의 실패 내지 분배의 불공정성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분단이후 형성된 서로 다른 삶의 양식과 가치관, 의식구조간의 괴리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통일 한국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 개선을 고려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기에 정책이나 제도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보다 인간다운 통일한국, 보다 풍성한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한반도에 대한 변함없는 노력을 지탱해 주는 것은 통일 또는 사회통합을 위한 확고한 철학적·가치론적 지향이다. 정책이나 제도 개선이 없는 철학은 무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철학없는 정책이나 제도는 상황에 따라, 시류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가야할 정도를 잃기 쉽다. 그저 요란한 빈 수레와 구호와 깃발만 나부낄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나 정책의 기반이 되는 철학적 지향은 무엇일까. 이 글은 남쪽 주도의 통일이 이룩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첫째, 북한 지역의 경제 회생과 이에 따른 생활격차의 극복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철학적 바탕은 결핍상태 극복과 형평성에 대한 만족감을 위해 분배적 공정성으로 실질적 정의를 이루는 ‘정의의 윤리(justice ethics)’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리라고 본다. 아울러 북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접근과 함께 필요한 것은 관계에 기반한 배려와 나눔의 소통이라고 본다. 통일은 남과 북의 관계의 회복을 넘어 새로운 관계의 맺음이다. 여기서 관계란 서로가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이해관계를 고려함이 없이, 순수한 두 존재가 그대로 만나는 관계이다. 이렇게 하여 생긴 유대관계에서는 서로서로 북돋아주고 서로서로 자라게 해주는 일이 가능해진다. 즉 남과 북이 이해타산을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배려와 나눔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통일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기반한 배려와 나눔의 소통을 이 글은 ‘배려의 윤리(care ethics)’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두 가지 가치론적 지향, 즉 정의의 윤리와 배려의 윤리, 그리고 이에 기반한 남북의 소통의 철학에 대해 고찰해 보자.

1. 정의의 윤리와 배려의 윤리, 그리고 조화

정의윤리에서 의미하는 ‘정의’는 개인의 행위나 제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기준이나 원리에 의해 판단 또는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같은 경우에는 같게,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라는 ‘형식적 평등의 원리’ 또는 ‘형식적 정의의 원리’가 그것이다.¹⁴⁾ 이렇게 보면 정의는 희소한 자원이라는 현실적 조건하에서 응분의 몫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응분의 몫은 재화나 기회 또는 권리일 수도 있고 배상이나 처벌일 수도 있다. 노력이나 능력,

14) 조성민, “정의윤리와 배려윤리 교육의 통합적 접근,” 윤리철학교육, 제14집 (2010), pp.19-20

업적, 필요(need)에 따라 응분의 재화나 기회, 권리 등을 분배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사회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따라 응분의 배상이나 형사적 처벌 등으로 교정할 수 있다. 전자가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라면, 후자는 교정적 정의(corrective justice)이다. 어느 경우이건 같은 경우에는 같게, 다른 경우에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형식적 정의의 원리를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범위의 측면에서 보면, 정의윤리에서의 ‘정의’는 ‘평등’이나 ‘공정성’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권리와 그에 수반하는 의무, 더 넓게는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까지 포함한다. 자유권, 생명권, 재산권 등은 정의윤리와 잘 어울리는 개념들이다. 따라서 정의윤리와 자유주의 철학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는다. 자유주의가 자율성, 권리, 보편성,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을 강조하듯이, 정의윤리도 이러한 개념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율성, 개인의 권리, 평등,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강조하는 정의의 윤리의 기반에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아관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정의윤리에서는 타인과 자신의 이해관계의 갈등에서 누구의 권리를 우선할 것인가 하는 권리의 문제가 바로 윤리적 문제이고, 상호성과 공평한 규칙이나 원리 등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자 한다.¹⁵⁾ 여기서 해결이란 곧 공정성을 기준으로 한 인지적 판단(cognitive judgement)이다. 판단은 어떤 기준(criterion)에 입각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나아가 판단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비판적(critical) 사고와 관련된다.¹⁶⁾

반면 배려윤리에서는 도덕적 문제를 관계나 응답의 문제 즉, 타인들의 특수한 관점에서 어떻게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 주느냐 하는 책임의 문제로 본다. 타인들의 상황적 특수성이나 맥락을 고려하면서 그들과의 관계와 연결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두고 배려의 활동을 통해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점에서 배려윤리는 공감, 배려, 연민, 사랑과 같은 도덕성의 정의적 측면(affective aspects)의 역할을 중시한다. 배려하는 사람은 도덕적 결정을 규칙이나 원리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 정서, 자연적 충동에 근거하여 내린다.¹⁷⁾

배려윤리 교육을 주장한 나딩스(Nel Noddings)는 배려(care)의 의미를 정신적 고통의 상태 또는 전념(engrossment)의 상태로 정의한다. 배려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부담을 갖는 상태로써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크게

15) 오기성, “배려 수업 모형과 사례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19(2) (2006), p.16.

16) 조성민, “정의윤리와 배려윤리 교육의 통합적 접근,” *윤리철학교육*, 제14집 (2010), p.18.

17) 박병춘,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상호 관련성 연구,” *윤리연구*, 93 (2013), p.168.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¹⁸⁾ 첫째, 배려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초조해하고, 걱정을 하는 것이다. 둘째, 배려한다는 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강한 욕구와 성향을 느끼고, 그의 입장과 관심을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 배려한다는 것은 나이 많은 친척의 복지와 건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이다.

그러나 배려는 그 자체가 의무나 옳은 행위는 아니며, 일반적인 정서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 배려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도덕 감정(moral sentiment)이며 정서적인 태도(emotional attitude)이다. 배려는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정의적인(affective)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고난을 겪을 때 걱정해주지 않는다면, 즉 공감(feel with, sympathy)하지 않는다면 그를 진정으로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배려는 또한 인지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필요, 복지, 상황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려윤리는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특수한 맥락이나 상황을 중요시한다. 배려윤리는 배려하는 자신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일반적인 규칙에 의존하여 결정하지 않는다.¹⁹⁾ 그러나 배려윤리는 개인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보편화가능성의 원리를 무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보편적이라고 인정되는 규칙을 초월한 사고를 지향한다. 즉 규칙을 존중하면서도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특수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넘어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이들에게 배려의 손길을 선의로 때로는 헌신적으로 내미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배려의 윤리와 정의의 윤리의 양립가능성, 조화, 통합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고스(A. Gheaus)는 배려윤리적 관점에서 두 윤리의 상호의존성을 주장하였다. 고스는 두 윤리는 서로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된다는 관점에서 두 윤리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보여주었다.²⁰⁾ 고스는 먼저 정의윤리는 배려윤리를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는 관점에서 두 윤리의 상호의존성을 지지해주는 두 가지 근거

18) Nel Noddings, “Learning to Engage in Moral Dialogue,” *Humanistic Review*, 7(2) (1994), pp.7-14; 박병준, 보살핌 윤리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p.9.

19) 조성민, 정의윤리와 배려윤리 교육의 통합적 접근, *윤리철학교육*, 제14집 (2010), pp.23-24.

20) Gheaus A., “Care and Justice: Why They can not go together all the way”, Ph.D. Dissertation, Philosophy Department, Central European University(2005), pp.138-184; 박병준,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상호 관련성 연구,” *윤리연구*, 93 (2013), pp.178-179.

를 제시하였다. 첫째, 배려자가 훌륭한 배려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려의 위험과 과도함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배려자가 정의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정의감이 결여된 배려는 편협해질 수 있고, 강제적, 억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려자는 자녀를 양육하거나 친밀한 사람을 배려할 때 과도한 통제와 방임 간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훌륭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는 배려윤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을 잘 배려해 주기 위해서는 배려자에게 고통스러운 선택을 강요하거나 배려자를 착취하지 않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적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가 요청된다.

또한 그녀는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정의윤리를 위해서는 배려윤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배려는 정의에 필수적이다. 배려가 없이는 인간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존속 자체도 불가능하다. 둘째, 배려는 시민들의 생존과 함께 정서적 애착과 삶의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의윤리의 요구와 일치하는 시민들의 인격형성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의윤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도덕성의 토대가 되는 정의감과 같은 시민적 덕은 부모와 자식 간의 배려관계를 통해서 형성되고 발달하기 때문이다.

덕목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듯 배려윤리와 정의윤리가 통합된다는 것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공정성 지향, 평등, 민주적 절차, 준법 등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의의 윤리와, 타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 봉사, 사랑, 관용, 동정심, 관심, 공감, 상대방에 대한 헌신 등의 가치는 배려의 윤리²¹⁾가 조화, 통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에서 이러한 정의의 윤리와 배려의 윤리가 철학적·가치론적 지향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이 장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심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으로 뒤쳐진 북한지역의 구성원들은 경제적 차원의 박탈감, 복지차원의 소외감, 분배의 극한적 불균형에 따른 통일에 대한 회의감, 생활능력에 대한 상실감을 크게 체험할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 격차가 심한 지역에 정의의 윤리 실현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통일정부는 낙후된 경제력을 지닌 지역에 대한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통일한국의 시계가 흐를수록 현 수준보다 발전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보다는 지체되고 정체되는 가운

21) 강윤경, 김희용,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에 비추어 본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분석,” 교사교육연구 47권2호 (2008), p.164.

데 낙후된 지역의 구성원들의 불만과 비판이 증대할 수 있다. 한편, 경제력이 앞선 지역의 구성원들은 언제까지 재원을 퍼부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다.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감소되어 복지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느니, 북쪽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대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느니, 이제 일본을 앞설 것이라느니 등의 행복한 꿈은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이제 부유한 쪽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구성원들의 삶의 양식, 태도의 후진성을 비판적으로 거론하고 비난에 앞설 것이다. 정의의 윤리에 따라 세금이나 기부 등을 통해 북쪽의 경제와 산업발전, 사회복지 등을 노력했지만, 혜택을 받은 측은 지속적으로 도움만 기다린다는 비난 속에 지원에 대한 열정과 실천은 한계에 다다르게 된다.

여기에 배려의 윤리가 정의의 윤리와 조화 내지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권리나 그에 따른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동안 남쪽과는 다른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영위해온 구성원들에 대해 공정성만의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는다. 이제 공정성을 넘어 비평화적 상태인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씨가 발동된다. 경제력이 앞선 지역의 구성원들은 나쁜 세금, 기부 등을 통해 낮은 경제력의 구성원들을 도우려 할 것이다. 아울러 형제애로서, 동포애로서 아낌없는 나눔과 배려를 위해 헌신적인 태도로 다가갈 것이다. 배려의 윤리 관점에서는, 덜 고통받는 사회는 더 고통받는 사회를 지원할 정치적·도덕적 의무가 있다. 즉 남은 복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이로서 존중과 배려가 호혜적으로 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대가 배려를 수용하고 고마워하고 자신을 돌보고 있는 사람을 믿게 될 때, 비로소 신뢰와 돌봄의 호혜적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²²⁾ 그리고 그것은 신뢰에 기반한 유연하면서도 진실한 소통, 상대방으로 목적으로 다루는 소통의 디딤돌이 된다.

2. 소통의 철학: 관계 기반의 화이부동(和而不同)

실존주의에 계열의 관계철학자인 부버(Martin Buber)에 따르면, 공존의 가능성은 나와 너의 만남에 기초하고 만남은 나와 너에 대한 신뢰와 개방에 기초해 있다. 사실 한 인간의 타자에 대한 무지와 불신은 타자의 존재에 대한 부정일 수 있으며, 이것은 공존의 가능성을 위협하는 적신호이다. 이렇게 볼 때 상호무지와 불신은 공존의 상대 개념이며, 동시에 공존의 가능성을

22) N. Noddings, "Care and moral education", In W. Kohli(ed.), *Critical conversations in Philosophy of Education* (N.Y: Routledge, 1993), pp.137-138.

보장하는 개방과 신뢰의 상대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갈등 당사자가 공존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대화로서 위장된 독백(monologue)에서 벗어나야 한다. 독백의 상황에서는 각자 타인에게 진실로 말을 걸지 않은 채 이야기한다. 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는 실제로 타자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 즉 각자는 단지 그 자신에게 말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자 그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자신에게 말하기 위해 타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독백이며, 거짓 대화이다. 말하자면 귀머거리들의 대화(dialogue of the deaf)인 셈이다.

진정한 만남과 평화의 전제조건은 남북의 진정한 협력과 실존적 삶의 방식의 변화이다. 그런데 부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삶의 방식은 인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존재론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구성원간의 골이 깊게 형성된 상호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이 불신을 해소하고 평화공존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를 위한 진정한 대화(genuine dialogue)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각자가 타자에게 진실로 책임을 진다. 각자는 정체성을 지닌 채 담화에 참여하며, 책임 있는 신념으로 응답한다. 이때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타자에게 몰두한다.²³⁾ 각자는 타자의 현존재를 인정하고, 상호관계를 확립한다. 그리고 타자의 삶과 실존에 대해 보다 차원 높은 관심을 지닌다.

대화는 타자와의 직면으로부터 이루어진다. 대화란 타자와의 동일시가 아니라, 때로는 타자의 감정과 사상을 부정하면서도 그를 타자로서 수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화는 심리적 관계나 인식론적 관계가 아니라 존재론적 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대화란 타자와의 동일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직면하고 타자를 타자로서 관계할 때 일어난다.

부버가 말하는 대화의 본질은 나와 네가 서로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같은 것 사이에서 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부버에 의하면 진실한 대화는 대화 상대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곳에서 관계는 성립하는 것이다. 같음에서 관계맺음 내지 만남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간은 열려있는 존재여야만 한다. 다시 말해 다름을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게끔 자신을 열어놓아야 한다. 이

23) 강선보, “남북한 민족간의 실존적 불신 해소를 위한 평화교육의 한 방안,” 통일원, '93 북한 통일연구논문집(1), p.533.

열어 놓음의 관계는 다름을 나의 관점으로 변형시킨다거나 억지로 관계로 끌어오거나 하지 않는다. 열어놓음은 타자의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만남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만남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나는 나대로 그리고 너는 너대로 자신의 고유성을 잃지 않고 관계맺음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²⁴⁾ 언뜻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자유와 관계가 나와 너 사이에 성립하는 것이다. 자유와 관계의 양립성, 이것이 부버 대화의 핵심원리이다. 대화는 나와 너의 고유성을 지켜 주고 동시에 함께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즉 자유와 관계가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고유성과 관련하여 남북한의 관계맺음과 대화에 있어 주목해야 할 개념은 타자성이다. 즉 북한에 대한 온전한 이해, 남북한의 만남과 소통과 관련하여 중요시해야 할 개념이 바로 타자의 타자성(the otherness of other)이다. 이는 최근 통일인문학이나 평화인문학 분야에서도 중요시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타자의 다름의 인정과 존중은 남북의 관계맺음과 대화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과거 우리가 강조해 온 “남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제고, 확장시켜야 한다”는 논리로부터 벗어나게 주는 한편, 남북간의 소통의 지평을 확대해 준다. 바꾸어 말하면 타자의 타자성을 전제한 소통은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차이와 공통성’이라는 프레임으로의 발전을 가져온다. 아울러 소통은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통으로 발전된다.

일방적 관계에서 진정성이 있는 소통은 어렵다. 어느 특정한 일방에 기반을 두는 삶의 양식에는 자기 또는 타자 지향의 절대주의가 만연한다. 이것은 소통이라기보다 일종의 일방적인 독백이다. 이러한 소통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사람다운 삶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담는 인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상호성에 기반한 소통이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소통의 출발점이다. 여기에서 나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우리는 타자와의 소통을 위해 종전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타자의 타자성을 이해해야만 한다. 따라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타자성’이 배제된 시각에서 벗어나 서로 가르쳐 주고 배우는 과정속에서 새로운 규칙을 창출해가는 미래지향의 소통이 되어야 한다.²⁵⁾

반면 타자성을 무시하고 자신의 것으로 상대방을 동화, 정복, 흡수하려는 시각은 동이불화(同而不和) 형태의 소통관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타자성보다 동일성의 측면을 서로 발견하고 이를 소통하려는 것은 이른바 구동존이(求同存異), 바꾸어 말하면 소극적 화이부동(和而不同)

24) 윤석빈, “마틴 부버의 대화원리,” 동서철학연구, 42, (2006), pp.271-294.

25) 오기성, “부버(Martin Buber)의 관계철학의 관점에서 본 통일교육,” 교육논총, 39(2), (2019), pp.16-17.

형태의 소통관계라 하겠다. 이에 비해 양자의 동질성 회복론에 근거하여 동일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서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통해 미래적 기획으로서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적극적 화이부동 방식의 소통으로서 이중구동(異中求同)의 형식이 있을 수 있다.²⁶⁾ 타자의 다름에 대한 존중과 수용의 소통은 바로 이중구동의 소통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이전과 초기의 통일한국에서는 구존동이의 소통이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될 것이다. 통일이전의 상황에서는 남북이 하나였다는 관점, 사회변화에도 불구하고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통일을 위해 동질성은 촉매제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소통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통일사회를 이루었을 때 남과 북지역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동질성을 확인하는 한편, 통일의 성취에 대한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질성에 기반한 하나됨의 기쁨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경제적 격차의 지속과 이에 따른 소득격차와 박탈감, 상대방에 대한 비난 등이 싹트고 확대되면서 동질성을 매개로 한 동포이자 형제에 담론에 기초한 구존동이의 소통은 의미를 잃어갈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의 분단된 삶의 양식속에서 서로 달라진 것을 당연하게 수용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노력을 기울이는 적극적 화이부동의 소통으로서 이중구동(異中求同)의 소통의 형식이 긴요함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깨달음의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통일미래를 위한 발걸음이 더 빠르게 시작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통일의 선택에 따른 환희와 기쁨을 갖게 될 것이다. 같은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가운데 서로를 성찰하는 거울이 되는 한편, 다름 속에서도 긍정적 측면을 찾아내고 이를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반도의 저력을 점진적으로 때로는 과감하게 쌓아나가게 될 것이다.

V. 결론: 사회통합을 위한 우리의 과제

1. 북한 지역 경제 회복

남북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불평등, 편견, 차별 등의 문제는 개개인의 가치관이나 태도 변화에 의해서만 해결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보와 같이 통일한국에서 확인하게

26) 오기성, “남북의 문화적 소통-화이부동의 관점에서-,” 평화학연구, 19(4), (2018), pp.77-97.

될 실질적인 경제·산업·농업 등의 격차, 대응능력 상실과 박탈감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분배적 정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인간의 선한 본성에 의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점에서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통일 이전에 남북한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남북한은 정치·제도적으로도 통일을 이루지 못했다. 분단 70년 동안 남북한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분단 구조에서 남북한 관계의 특성상 정치적 이슈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정치적 격차는 줄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사회경제적 격차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북미합의와 남북합의가 병행되는 상황속에서 경제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남북한은 GDP는 약 1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게다가 북한은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서 공장과 기업소 가운데 온전히 작동하는 공장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공장 가동률을 20~30% 내외로 보지만, 통일이 되어서 가동되는 생산라인 가운데 실제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생산라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였다면 생산효율성이 낮아, 이미 가동이 중단되었을 공장과 설비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이 일부 주요 공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공장들이 실제로 얼마나 가동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곧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탈산업화는 동독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회복이 중요하다. 현재 북한 경제의 수준으로 통일이 진행될 때, 통일 비용은 계산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한국의 경제력은 그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그것을 부담하려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 통합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물론 UN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이나 남북의 협력이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점은 현재 북한의 상황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통일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²⁷⁾ 또한 북미합의와 남북합의가 병행되는 상황속에서만 경제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27) 윤철기, “독일 ‘내적 통합’이 남북한 ‘마음의 통합’에 주는 교훈,” 현대북한연구, 17권 2호 (2014), pp.37-38.

2. 평화문화 형성 역량 신장

이동기, 송영훈(2014)는, 평화문화를 “개별 인간과 집단 및 민족 간 평화 촉진에 기여하”는 “가치와 태도 및 행동양식과 삶의 형식”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²⁸⁾ 조민(2000) 또한 평화문화를 성찰적 태도, 감정이입과 역지사지의 사고, 대화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는 행동양식이라고 규정하였다.²⁹⁾ 이렇게 볼 때, 평화문화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치를 공유하며 실천하는 한편, 사회 내 비평화적 요소를 평화적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상형으로서 평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현존하는 비평화적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인간의 심성과 사회구조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꽃피울 수 있는 삶의 형식을 이룩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남북의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사회의 평화문화 형성 역량, 즉 한국 사회 일상에서의 평화문화 형성 역량을 신장시키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반평화적 요소가 중층적으로 누적되어 있다. 또한 그것은 무질서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들로는 ① 군사문화의 극복, ② 경제적 세계화와 그에 따른 외채,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해소, ③ 생태계와 환경 보전, ④ 성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인종차별, 장애인차별 등의 해소, ⑤ 관용과 갈등 해결, ⑥ 국가와 개인,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 혹은 종(種)과 종(種) 사이에 나타나는 인권탄압, 인권침해, 혹은 권리침해의 극복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어떤 이상적인 평화를 상정하거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을 제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삶에 초점을 두는 시각이다. 일상의 영역에는 전통, 규범, 습관, 생활양식, 언어 등이 포함된다. 일상엔 ‘문화’라는 이름 하에 총체적인 삶의 양식을 담고 있다. 그 일상 안에는 뿌리 깊은 권력과 억압이라는 사회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일상’에서 평화를 다룬다는 것은 개인의 경험 세계를 섬세하게 들여다 봄으로써, 구조적인 반평화가 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하는가를 분석하고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구조적인 반평화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이러한 평화문화 역량 증대가 중요시되는 것은, 남북한 사회통합이 남과 북의 어느 한편으로의 일방적 수렴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많은 연구자들의 경우 사회통합을 위한 남한사회 자체의 기반형성은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한국사회의 산업화는

28) 이동기, 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p.26.

29) 조민,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서울: 통일연구원, 2000), p.12.

그 자체로서 완결성을 가지지 않으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자본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시장경제체제, 사회복지체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문화적 다원주의 형성의 측면에서 한국사회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분단체제와 냉전문화에 의해 왜곡된 사회문화의 정상화과정이라는 과제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통합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남한사회와 북한사회의 결합이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남과 북 자체내의 일련의 변화를 포함하는 미래적, 과정적 의미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합은 성공한 체제가 실패한 체제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완전하지 못한 상태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북한을 산술적으로 더하는 방식의 사회통합은 갈등의 소지를 지닐 뿐 아니라 근대화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의 박탈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낳을 뿐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사회통합은 왜곡된 근대화의 정상화과정으로서 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성찰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³⁰⁾ 이와 같은 점에서 남북한의 사회통합의 시제는 과거로의 회귀도 아니며 현재도 아니다. 그것은 미래 어느 시점이 되어야 하며, 우리 스스로의 정상화노력을 포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의 개선을 요구하기에 앞서, 우리도 평화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것은 남쪽 지역 구성원들의 평화로운 삶의 증진에도 의미가 있지만,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역량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먼저 온 미래’의 연습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영토상의 통일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 바꾸어 말하면 생활세계의 통합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통일을 먼저 경험하는 시공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현재 탈북민의 한국사회에서의 삶이다. 탈북민의 삶은, 첫째, 통일이 이루어진 후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때 나타나게 될 사회, 심리적 적응문제들—먼저 온 미래의 모습—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의 문제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일종의 ‘예비실험적 성격’을 가지는 의미가 있다. 둘째 탈북민들의 남한사회에의 적응양상은 일반 남한 주민들의 탈북민들에 대한 인상과 태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와 입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 의미가 있다.

물론 탈북민들의 성향이나 생활태도가 북한 주민 전체의 그것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 후 사회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탈북민 적응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많은

30)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제언,” 민족발전연구, 9-10 (2004), pp.57-58.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탈북민들의 부적응 요인의 분석은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내용 설계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탈북민과 남한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맺음, 그것이 곧 사회통합을 위한 예비실험, 즉 먼저 온 미래에서의 삶이라는 점이다.

먼저 온 미래의 연습에서 중요한 두 축은 사회통합의 의미와 유형에서 본 바와 같이 체계통합과 생활세계통합을 위한 노력의 병행이다. 즉 남한사회에서 탈북민들이 문화적 상호주의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상호이해능력과 문화적 대응 능력 획득을 위한 교육적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두 축의 노력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온 미래를 남쪽이 먼저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탈북민들을 왜곡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는 것이다. 탈북민, 즉 탈북민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의 동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남과 북의 통합을 위해 서로의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그 차이의 미학을 발견할 줄 알며, 남과 북의 다름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등 각 지방의 사투리를 사용하거나 듣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함평 나비 축제, 안동탈춤 국제페스티벌, 전주 소리축제 등 각 지방의 독특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향유하는 것처럼 북한사람들의 언어나 문화도 북한지역의 독특하고 소중한 문화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남한 사회 삶의 방식과 문화를 가르쳐주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북한사회의 삶의 방식과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탈북민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양 체제의 주민들은 서로가 공유해야 할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탈북민들과 남한 사회 구성원들이 분단 이후 서로 달라진 모습을 인정하고 서로가 조화로운 삶을 일구어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이해와 서로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은 남한 사회에서 탈북민과의 작은 통일 연습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통은 이때 이루어진다. 즉 먼저 온 미래에서 우리와 탈북민은 타자의 타자성을 상호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소통을 연습하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맺음을 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윤경, 김희용, “정의 윤리와 배려 윤리에 비추어 본 초등학교 도덕교과서 분석,” *교사교육연구* 47권2호 (2008), 155-182.
- 김동규 외,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남북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김병로,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 이념,” 허태희 외, *사회통합위원회, 통일시대 국가이념 및 비전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2011)
- 김수암 외,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박병춘, *보살핌윤리의 도덕교육적 접근 연구*. 서울대학교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박병춘,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상호 관련성 연구,” *윤리연구*, 93권 (2013), 161-186
- 박영자 외, *북한주민의 임파워먼트: 주체의 동력*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박종철 외,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신은희, “세계화와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해석,” *아태연구*, 16(1) (2009).
- 양민석, 송태수, “독일 통일 20년-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제4호 (2010), 3-34.
- 오기성, “배려 수업 모형과 사례 연구,” *교육과정평가연구*, Vol.9 No.2 (2006), p.16.
- 오기성, “부버(Martin Buber)의 관계철학의 관점에서 본 통일교육,” *교육논총* 제39권 2호 (2019)
- 오기성, *북한사회의 이질화 및 갈등 분석* (서울: 국방대학교, 2000)
- 오기성, *통일사회로의 발돋움, 그 성공을 위하여* (서울: 양성원, 2007)
- 윤인진, “남북한 사회통합의 조건과 전망,” *정책과학연구*, 15(1), (2005)
- 윤철기, “독일 ‘내적 통합’이 남북한 ‘마음의 통합’에 주는 교훈,” *현대북한연구*, 17권 2호 (2014), 9-43.
- 이동기, 송영훈, *평화·통일교육 추진전략 연구* (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4)
- 이상면, “통합과정에서의 문화적 충격과 사회·문화적 문제들”, *문화방송사, 남북한의 사회·문화·경제·정치적 통합과 방송* (서울: 문화방송, 1997).
- 이상신 외, *통일 이후 통합방안: 민족주의와 편익을 넘어선 통일담론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이철수 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쟁점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 장준오·고성호,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전우택, 통일한국의 사회갈등 예측 및 해결방안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4)
- 조민,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조성민, “정의윤리와 배려윤리 교육의 통합적 접근,” 윤리철학교육, 14 (2010), 15-36
-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조한범, “남북한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제언,” 민족발전연구, 9-10 (2004)
- 최봉대,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새로운 법제도 적용 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서울: 통일부, 2011)
- 최영신, 김윤나, 김용성,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I): 비행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최영신 외,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실태와 준법의식 제고 방안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통계청, 통계로 보는 북한 2018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8)
- 한겨레 21, 제657호 (2007. 4. 26).
- 홍기준, “통일 후 남북한 사회통합,” 국제정치논총, 39(3) (2000)
- Gheaus A., “Care and Justice: Why They can not go together all the way”, Ph.D. Dissertation, Philosophy Department, Central European University(2005)
- Habermas, Jurge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II ; *Life World and System*, trans. by McCarthy (Boston : Beacon Press, 1987)
- Noddings, N., “Care and moral education”, In W. Kohli(ed.). *Critical conversations in Philosophy of Education* (N.Y: Routledge, 1993)
- Noddings, Nel(1994). Learning to Engage in Moral Dialogue. *Humanistic Review*, 7(2), 7-14
- Oberg, Kalvergo, “Cultural Shock: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men”, *Practical Anthropology*, Vol.7 (1960)
- Pederson, Paul, *The Five Stage of Cultural Shock- Critical Incidents around the World* (Conneticut/London, 1996)
- Trommsdorff, Gisela und Hans-Joachim Kornadt, “Innere Einheit im vereinigten Deutschland?” *Die Transformation Ostdueuschlands* (Opladen: Leske und Budrich, 2001)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독일 통일 분석의 세 가지 차원
- III. 현단계 남북관계 평가
- IV. 독일 통일이 한반도 상황에 주는 시사점
- V. 나가며

I.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세 차례의 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9.19 합의 등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남북협력 사업 등은 군사적 신뢰구축,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사회문화 및 체육교류 등 남북관계를 구성하는 전 분야에 걸쳐 기대감을 상승시켜왔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었더라면 현재 남북관계는 분단 이후 최고 수준의 교류협력 단계로 접어들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9년 8월말 현재,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역시 정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선언의 총 13개항 중 11개항이,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의 총 15개항 중 13개항이 남북관계 차원에서 논의하고 실천해야 할 합의사항들로 채워져 있지만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당국 간 대화는 장기간 단절 상태에 놓여있고 사회문화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5월 이후 북한은 한미 지휘소연습을 문제 삼아 잇따라 단거리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시험에 나서는 등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외무성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이 교대로 나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는가 하면 북미대화 가능성만을 강조할 뿐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합의 위반이 아니다”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남북관계의 이러한 현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의과정이 남북관계 발전의 자율적 공간을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재성찰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주는 교훈을 얻고자하는 시도는 이러한 현실을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양독관계적 차원, 주변국관계적 차원,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II. 독일 통일 분석의 세 가지 차원

독일 통일의 경험이 남북관계 발전, 나아가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주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져 왔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행위자 집단을 구성하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독일 통일 역시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석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남북간의 교류와 점진적 관계 개선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추구해 온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독일 통일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 중 빌리 브란트 정부의 ‘접촉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를 강조해왔다.

이에 반해 분단관리적 차원의 교류협력보다는 통일지향적 목적의식 아래 통일준비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근혜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북한 주민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보다 분명히 했고 후반기 들어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한중정상회담 직후 ‘조속한 통일’을 언급하고 2016년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향해 ‘언제든 남한으로 오라’고 촉구한 것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중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한 장소가 다름 아닌 구동독 지역의 드레스덴이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북한의 정권 담당세력을 대북정

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기 보다는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드레스덴은 1989년 12월, 서독 콜 총리가 모드로우 동독 총리와의 회담을 열기 위해 방문한 자리에서 ‘나의 목표는 통일’이라고 동독 군중들에게 연설하면서 동독 주민들의 통일 열망에 불을 붙였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측면이 아니라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협력 증진과 평화적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주변국 환경 정비, 그리고 대내외적 통일지향성 제고와 같은, 순차적인 동시에 복합적 구상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은 흡사 2인3각의 달리기처럼 조금씩, 그리고 동시에 진전되어 나가야 하는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독일 통일의 경험 역시 양독관계적 차원과 주변국관계적 차원, 그리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 차원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각각 관찰해보고자 한다.

1. 양독관계적 차원

1969년, 20년 만에 집권에 성공한 사회민주당(SPD)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유럽 단절정책을 청산하고 서방통합의 기반 위에서도 동독 및 동유럽 국가들과의 화해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이는 친서방 결속을 통해 서독이 동독에 대해 정치경제적 우월성을 유지하게 되면 자석에 이끌리듯이 동독에 서독에 이끌려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통일정책과의 차별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계 개선을 통한 긴장완화 정책은 동독의 공산주의 체제가 당장 소멸될 수 없는 만큼 동독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접근을 통해 교류와 협력의 수준이 높아지면 동독 역시 개방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또다른 의미에서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은 동독이 주장해 온 ‘1민족 2국가’ 원칙을 서독이 수용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러한 입장 변화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 유엔 동시 가입의 바탕이 되었다.¹⁾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의 결과로 나타났던 동서독 관계 정상화 이후 다양한 분야의 동서독 교류가 이어졌다. 1973년부터 서독 특파원의 동독 상주와 단기 취재여행이 허용되었고 1976년 우편통신 협정 체결 이후에는 연간 서신만 2억 통이 오고갈 정도로 정보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1) 심익성, M. 치벡 공편, “독일연방공화국 60년: 1949~2009 분단국가에서 민주통일국가로,”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9), p.59.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당 교류와 군사 및 안보 분야로까지도 교류가 확대되었다.²⁾

이러한 동서독간 정보 교류의 비약적 증가는 베를린 장벽 붕괴 후 1990년 3월 치러진 인민의 회 선거를 통해 체제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 동독 주민들이 동독을 포기하고 ‘서독연방에의 가입’이라는 방식의 통일을 선호하게 된 중요한 배경을 형성했다. 동독의 마지막 총리였었던 드 메지에르가 통일기념식에서 동독과의 결별을 ‘눈물없는 이별’이라고 표현했듯이 동독 주민들은 서독 TV를 시청하면서 외부 세계의 변화에 눈을 뜨고 서독을 이상향이자 준거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동독 주민들의 자유의사 표현에 따라 동독의 소멸과 동서독 통일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핵심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1990년 선거의 승리자는 서독 기민당의 후원을 받은 ‘독일연대(Allianz für Deutschland)’였었다는 점에서 통일과정에서 사민당(SPD)은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 선거에서 독일연대가 40.8%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데 비해 당초 서독 사민당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승리가 예상되었던 동독 사민당은 절반 수준의 21.9%를 득표하는 데 그쳤고 동독의 집권 사회주의통일당(SED)에서 당명을 바꾸었던 민주사회당(DPS)도 16.4%의 득표율에 머물렀다.³⁾ 베를린 장벽 붕괴 4개월 후에 실시된 인민의회 선거 결과 기본법(Grundgesetz) 23조에 의거한 통일방식이 의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됨으로써 동독 5개주가 서독에 가입하는 결정적 계기를 확보했다. 바로 독일 통일로 가는 분기점이었다.⁴⁾

드 메지에르 총리가 이끌었던 기민련은 이미 1989년말 전당대회에서 시장경제와 민족통일을 천명해놓은 바 있다.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동독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동서독 1대1 방식의 화폐통합 공약 등을 통해 통일 이후 동독 주민들이 서독 주민들과 동등한 복지 수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민당 총리 후보였던 오스카 라퐁텐은 동독 유권자들을 향해 ‘동독에 머물러 있으면서 통일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이익’이라고 조언했다.⁵⁾ 이처럼 사민당의 통일정책은 현상유지 정책을 벗어나지 않았다.

요컨대 독일 통일의 긴 여정에서 튼튼한 철로를 깔은 것은 사민당의 브란트 총리였고 이 철

2)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pp.105~109.

3) 손기웅, “독일 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p.37

4) 기본법 23조는 “기본법은 우선적으로 서독지역에 유효하고 독일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독일에 ‘편입(Beitritt)’한 이후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은 ‘독일의 다른 지역’에 해당하는 동독이 이 조항에 따라 스스로 ‘편입’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사회주의통일당(SED)이 중심이 된 ‘원탁회의’ 측은 “기본법은 새로운 ‘헌법(Verfassung)’ 발표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는 기본법 146조에 근거해 새로운 헌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의회 지지 획득에 실패하고 말았다.

5) 양창석,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독일 통일 주역들의 증언,” (서울: 늘봄플러스, 2011) pp.149~150.

로 위로 통일열차를 달리게 한 것은 기민당의 콜 총리였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철로를 깔지 않고는 기차가 달릴 수 없다는 사실이다.

2. 주변국관계적 차원

선거를 통해 동독 주민들의 통일 의사가 확인된 후 관건은 통일 이후 독일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었다. 통일독일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잔류 여부는 핵심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헬무트 콜 총리와 디트리히트 겐셔 외무장관은 소련이 당초 요구했던 통일독일의 중립화 요구와 NATO 잔류 반대 입장을 철회시키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의 결과 NATO에는 잔류하되 엘베강을 기준으로 하는 동독 지역만큼은 NATO군의 주둔과 작전권 행사가 적용되지 않는 타협안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NATO 잔류에 대한 소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독일의 군사력 축소와 소련과 동유럽에 대한 대규모 차관 제공 등 유인조치가 함께 시행되었다.

독일 통일에 대해 주변 유럽국가들이 가졌던 또 하나의 우려는 독일의 재통일이 유럽통합의 추진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2차대전 이후 전쟁 재발 방지와 평화 구축 노력의 수단으로서 유럽공동체를 일궈온 유럽국가들은 독일의 통일이 유럽통합의 동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공통적 우려를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우려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첫째, 강력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독일 통일이 유럽에서 다시 지배적 국가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 둘째, 독일의 통일 비용 지출이 유럽통합에 대한 독일의 재정적 기여도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점, 셋째, 독일이 통일 이후에도 서방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느냐는 의구심, 넷째,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과연 독일의 외교정책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 등이 그것이다.⁶⁾

독일 통일에 대해 유럽국가들이 가졌던 이와 같은 우려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더욱 증폭되었다. 2차대전의 전승국이자 독일지역 통치기구로서 연합국 관리이사회회의의 구성원이었던 소련, 프랑스, 영국, 미국 등 4대국의 입장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2차대전 당시 2000만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던 소련은 독일 통일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소련의 위성국가로서 동독의 존재를 포기한다는 것은 동서대결에서 소련의 군사적 이해를 일선에서 대변하는 완충지대의 소멸을 의미했기 때문에 소련으로

6) 손기웅, 앞의 책, pp.22-23.

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었다.

프랑스 역시 과거 100년 동안 프로이센 전쟁(1870년)과 1·2차 대전을 포함하여 독일과 세 차례나 전쟁을 치른 경험 때문에 독일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국가였다.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 드골과 독일의 초대 총리 아데나워는 긴밀한 우의와 협력정신을 과시했으나 독일 통일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서독의 콜 총리를 비난하고 나설 정도로 독일 통일에 대한 양국의 이해관계는 크게 엇갈렸다.

나치 독일로부터 공습의 경험을 갖고 있는 영국 역시 독일 통일이 유럽의 안정을 깨고 영국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독일 통일에 반대했다. 마가렛 대처 총리는 가급적 통일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따라서 전승 4개국 중 미국만이 독일 통일에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 서독이 아데나워 초대 총리 이후 일관되게 친서방 정책을 유지해온 데다 콜 총리가 주변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거리 미사일의 서독 배치를 결정함으로써 미소간 중거리 미사일 폐기협정을 성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⁷⁾

유럽통합의 장래와 관련하여 독일 통일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헬무트 콜 총리와 디트리히트 겐서 외무장관은 “우리는 독일적인 유럽이 아니라 유럽적인 독일을 건설하고자 한다” (Wir wollen nicht ein deutsches Europa, sondern ein europäisches Deutschland schaffen)는 점을 반복해 강조했다.

유럽통합 내에서의 독일 통일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헬무트 콜 정부는 유럽경제통화연맹(EMU) 창설에 요구되는 EC 조약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노력도 적극 강조함으로써 유럽 내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또한 독일 통일이 소비 수요를 증가시켜 EC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동독을 통해 동유럽 경제를 개방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통일의 편익에 대한 주변국 설득에 노력했다.⁸⁾

3. 평화통일 기반 조성 차원

독일이 평화적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통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통일을 준비했다기 보다는 분단관리적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냉전 붕괴와 동유럽의

7) 염돈재, 앞의 책, pp.147-155, 양창석, 앞의 책, pp.189-199.

8) 손기웅, 앞의 책, pp.22-24.

변혁으로 인한 기회가 도래했을 때 통일의 모멘텀을 과감하게 포착한 데서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와는 별도로 동유럽 민주화의 원동력을 제공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개혁정책과 같은 국제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관찰해 보면 동독 주민들의 통일 의지와 역량에 초점을 맞춰 관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서독 편입이라는 방식으로 통일을 스스로 결정한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는 1980년대만 해도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84년에 실시되었던 여론조사의 경우 동독 주민들 중 ‘통일을 원한다’는 응답이 76%에 이르렀지만 실제 독일의 통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에 이르고 가능하다는 응답이 4%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⁹⁾

반면, 서독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체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이 발견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예를 들어 1976년 서독의 정치체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자신들의 이념적 선호도에 관계없이 정치질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서독인의 비율이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면에서도 서독은 1980년대에 이미 일본 다음가는 세계 2위의 무역흑자국이 되었다. 체제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은 국내적 통일역량의 원천이 되었고 1990년 이후 통일정책 드라이브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밑거름이 되었다.¹⁰⁾

빌리 브란트 총리의 신동방정책으로 촉발된 동서독간 다방면 교류사업은 서독에 대한 동독 주민들의 인식을 크게 개선시켰고 동유럽 평화혁명이 시작되면서 동독 주민들의 폭발적인 서독 이주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동독 공산정권 붕괴의 도화선 역할을 했다.

동독 내부의 혁명적 변화는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과 동유럽의 개방 물결 등 외부 요인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동독 내부의 평화적 혁명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데는 무엇보다도 브란트 정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분단관리 정책이 크게 작용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브란트의 분단관리 정책은 서독 내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추진됨으로써 동독 내부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서독으로의 편입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양독간 교류 협력의 증대가 동독 주민들의 집단적 통일정체성을 서독 지향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했던 것이다.¹¹⁾

9) 염도재, p.167.

10) 황병덕, 김학성, 신상진 “독일 통일 모형과 한반도 통일 모형의 비교연구 : 독일 통일 모형이 한반도 평화통일 모형 개발에 주는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4), p.191.

Ⅲ. 현단계 남북관계 평가

2019년 8월말 현재 남북한 모두 판문점선언, 9.19 합의의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사실상 남북관계는 냉각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반으로 북미정상 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동시키는 데 성공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남북고위급회담 5회, 남북장성급군사회담 3회 등 총 36차례의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었다. 특히 판문점선언과 9.19 공동선언 합의는 통일방안과 군사적 긴장완화, 경제협력은 물론 그동안 북미 간 협상의제로만 논의되었었던 비핵화 문제에 관한 주요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표1〉 역대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주요 내용

회담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시기	2000.6.15. (취임 3년차)	2007.10.4. (취임 5년차)	2018.4.27. (취임 1년차)	2018.9.19. (취임 2년차)
구성	5조	8조 20항	3조 13항	6조 15항
주요 내용				
통일방안	자주적 해결 연합제/낮은 단계 연방제 공통성	자주적 해결	자주통일	
남북관계 발전		내부문제 불간섭 법률 제도 정비	기준합의 이행	
군사적 긴장완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전쟁반대 및 불기침 서해공동어로수역	적대행위전면중지 확성기/전단 중단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NLL 일대 평화수역, 어로보장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평화체제		3자(4자) 종전선언	연내 종전선언 평화협정 남북미/남북미중 회담 개최	

1) 홍병덕, 앞의 책, p.28.

주요 내용				
비핵화		6차회담 합의 이행	완전한 비핵화	전문가 참관 동창리 시험장 폐기 미 상응조치시 영변핵시설 영구 폐기
경제협력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개성공단 북측 철도/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조성	10.4선언합의이행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동서해선 철도 연내 착공식 개최 조건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
사회문화 교류	교류 활성화	백두산 관광 2008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	국회/정당/지자체/민간단체 공동행사 추진 2018 아시아경기대회 등 공동참여	예술단 서울공연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 3.1운동 100주년 공동기념
인도적 협력	방문단 교환 비전향 장기수 해결	이산가족 상시 상봉 자연재해상호협력	이산가족 상봉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후속 조치	서울 방문 초청 당국간 대화	총리회담 개최	정기적 정상회담 직통전화 공동연락사무소	서울 방문 초청

자료: 필자 작성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이라는 당초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일시 정제된 채 선(先)비핵화 논의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019년 상반기 남북한 당국간 회담은 전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핵심적 요인은 무엇보다도 유엔의 대북 제재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비핵화 공조와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계 확립을 위해 한미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이를 정례화했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은 정제되고 남북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위반 여부가 한미워킹그룹 의제로 다루지면서 2018년 남북합의 이행에 장애물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결과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업,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등 문화교류, 타미플루 지원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지체 또는 불이행되는 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당초 정부가 구상했던 구도는 개성공단 가동,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남북경협 카드를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활용하는 방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

년 9.19 평양정상회담 직후 유럽 5개국 순방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를 경우’를 전제로 유엔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미 간 협의 과정에서 경험 우선 재개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남북관계에서 정책수단은 제약되는 현실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정부의 한미 지휘소 연습, F-35A 스텔스기 구매 결정, 대북제재 유지 등을 비난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최근 들어서는 외무성과 조평통 등을 잇달아 내세워 “남조선 당국 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며 남북관계 정체의 원인을 한국 측에 전가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운영을 시작했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도 북측 인원들이 일방적으로 철수한 후 일부만 복귀함에 따라 남북 간 합의사항이었던 주 1회 소장 회의는 수개월째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반영하듯 북한은 대북 제재와 무관한 인도주의 사업 및 사회문화 교류 등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거나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인도적 협력 분야에서 국제기구 또는 비정부기구(유니세프, 유진벨재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First Steps 등)가 추진해온 복수의 사업들이 대북제재 면제 조치 결정을 기반으로 이행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정부가 추진해온 사업은 ‘올스톱’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 세계식량계획(WFP) 공여 방식을 통한 5만톤 규모의 대북 쌀 지원 계획을 통일부가 발표했지만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등의 이유를 들어 이마저도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를 토대로 북한에 독감 치료용 타미플루 제공을 추진했으나 북한의 무응답으로 사실상 무산되었고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을 위한 장비 반출도 승인 완료되었으나 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역시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1/10~1/20), 남북 태권도 시범단 유럽 합동공연(4/5~4/12),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 초청 아시안 피스킵 남북한+인도네시아, 베트남 4개국 배구대회 참가(6/23~25일) 등 일부 체육교류가 성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 역시 남북 간 교류라기 보다는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공동 참가하는 형태에 국한되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을 위한 장비 반출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했으나 사업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 이전에도 북한은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행사 개최, 도쿄 올림픽 단일팀 협의 등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대규모 경협 사업 재개 이전 사회문화 교류 이행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GP 시범철수 이후 남북 공동 유해 발굴,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및 공동경비 등 합의 이행은 중단 상태에 놓여있다. 국방부는 현재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측지역에 국한해 지뢰 제거 및 유해 수습 등 남북한 공동 유해발굴에 대비한 독자적 준비작업을 해놓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8월20일 한미 지휘소연습이 종료되었음에도 나흘 뒤인 24일 구경 400mm급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의 정체는 장기화하고 북미대화의 재개 또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IV. 독일 통일이 한반도 상황에 주는 시사점

1. 남북관계적 측면의 시사점

남북관계가 정치, 군사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상호 교류 및 협력 구도에 합의한 것은 냉전 소멸 이후인 1990년대라고 할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인해 남북고위급회담의 틀 안에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야별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남북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는 냉전 시기 진영 간 대결의 논리 속에서 남북관계가 지배되던 상황을 뛰어넘어 본격적으로 내적인 자율성을 갖는 남북관계가 출범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탈냉전 시기의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와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가지며 진화를 거듭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독립변수로서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를 이끌어가기 보다는 국제관계의 변화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정도가 우월한 양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¹²⁾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정권의 출범과 개혁개방 정책 추진이라는 국제환경적 요인 속에서 노태우 정권은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노태우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요인을 배경으로 7.7 선언을

12) 황지환, “남북한 관계의 국제정치학”, 『남북한 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서울: 논형, 2012), p.87.

통해 남북간의 인적 교류와 문호개방, 경제협력 및 상호교역 허용 등의 방식으로 남북관계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³⁾

남북관계의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은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탄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서명(1991년 12월) 하면서 북한은 비확산에 관한 국제규범을 수용하여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사찰을 수용하게 되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남북한 사이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에 대한 3개항 25개조의 합의와 3건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남북관계의 신기원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합의서의 운명 또한 국제관계의 영향 속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1993년 1차 핵위기의 발발이 남북관계의 단절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1차 핵위기가 고조되면서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도 급변했다. 1993년 출범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간 북미 고위급 회담을 열어 핵문제 해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협상을 시도했지만 김영삼 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 북미관계만 앞서 나가는 상황을 용인하고 싶지 않았다. 심지어 인도주의적 대북 식량 지원을 김영삼 정부 시절 한미가 공동 제안했던 4자회담 수용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국제관계 차원에 결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¹⁴⁾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이를 통한 남북간 전면적 교류협력 시대의 개막은 남북관계의 70여년 역사에서 주변 국제환경에 대한 수동적 대응이 아닌 한국 정부의 능동적 대북전략이 이뤄낸 최초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¹⁵⁾ 물론 김대중 대통령 역시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체제가 마련되고 북미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관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의 안정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에 대북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진 2차 북핵위기로 인해 김대중 대통령은 북미간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워싱턴과 평

13) 김형기, 『남북관계변천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pp.149-150.

14) Don Oberdor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vised and Updated) (New York, Basic Books, 2001), pp.369-399.

15) Samuel Kim, eds, 『Inter-Korean relations: Problems and Prospect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16)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p.338.

양으로 특사를 보내는 등 중재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¹⁷⁾

2차 북핵위기는 한반도 평화 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결정적으로 강화시켰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 시기 남북관계 활성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로 작용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했던 북핵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북미 양측의 요구조건을 합리적 수준에서 교환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핵문제에 종속시키지 않고 동시에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¹⁸⁾ 이에 따라 북핵위기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는 개성공단이 착공되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북핵위기라는 국제적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해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은 피하고자 했다. 2003년에는 내부적으로 준비해오던 대북특사 파견을 북핵 3자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¹⁹⁾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도 2005년 9.19 공동성명과 2007년 2.13 합의 등 북핵문제가 협상국면으로 접어든 이후 성사되었다.²⁰⁾ 이렇듯 노무현 정부에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는 상호간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진전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선(先)비핵화-후(後) 남북관계 진전의 입장을 분명히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 과정조차도 국제적 차원의 구상과 실천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²¹⁾ 박근혜 정부는 남북협력과 국제공조의 균형을 표방했었지만 남북교류는 단절된 채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 담론을 통한 국내적 분위기 조성에만 집착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는 못했다. 나아가 통일담론을 국제화하려는 의도가 앞서다 보니 주변국의 개별적인 통일 편익 및 우려에 대한 관심을 기반으로 한반도 주변 평화 구축과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었다.

독일의 경우 길게는 분단 40년 동안, 짧게는 브란트와 콜 정부를 거치면서 신동방정책의 기초가 유지되어온 20여년 동안의 기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교류협력의 성과가 잠재력의 형태로 축적된 상태에서 동독 주민들의 통일 요구가 분출됨으로써 통일의 결정적 계기가 형성되었다

17) 임동원, 앞의 책, pp.537-545.

18) 이종석, 『칼날 위의 평화: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안보 비망록』 (서울: 개마고원, 2014) pp.33-37.

19) 이종석, 앞의 책, pp.249-253.

20) 10.4 선언 직후 북한 역시 '9.19 이행국면에서 6.15 실천'을 평가하며 남북관계와 북핵협상의 병행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20017.10.4.

21) 성기영,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 가능성: 북한 행동 변수와 미중관계 전망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통일연구』 제17권 2호 (2013) pp.8-9.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야 교류협력의 제도적 정비작업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본격적인 교류협력 사업 역시 10여년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합의의 이행마저 중단되어 있는 상황을 독일의 사례와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이를 둘러싼 주변 국제여건과 상응하거나 충돌하는 연계성이 점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 서독의 경우 무엇보다도 동서독 관계의 진전에 머무르지 않고 유럽 내 분단구조의 벽을 낮추는 데에 집중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데르-나이세강 국경선 유지를 통한 유럽의 현상 유지, 양독 관계의 현상 유지 등 소련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통일을 목표로 삼는 대동독 정책이 아닌 분단 관리에 오히려 치중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는 우선 동구권 국가들과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 유럽 분단의 벽을 낮춘 다음 동서독 관계 정상화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단순한 ‘접촉을 통한 변화’가 아니었다는 견해도 있다.²²⁾

유럽 전체의 다자 안보협력 시스템을 구축한 헬싱키 협정과 동서독 관계의 진전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던 것을 보더라도 동서독 관계의 국제적 성격에 주목했던 독일의 접근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범유럽 안보협력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는 세계적으로는 미소관계의 개선, 유럽 내에서는 동서독 관계의 진전이라는 배경 속에서 추진되었다.²³⁾ 1972년 체결된 동서독 기본협정은 이듬해 서독 의회를 통해 비준되었고 이를 계기로 다수의 주변국들이 동독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유엔 역시 두 개의 독일을 승인하였다. 1973년 7월, 헬싱키에서 CSCE 1단계 회담이 열릴 당시를 전후하여 서독은 이미 불가리아와 수교했고 체코, 헝가리 등과 수교 협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1975년 8월 CSCE에 참석했던 서독의 헬무트 슈미트 수상은 동독 호네커 서기장과 별도의 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 상호방문 및 결합 문제와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회담 직후 동독은 두 차례에 걸쳐 286명의 정치범을 서독으로 송환하였고 이후 양독 관계의 교류협력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1975년 헬싱키 협정 체결 당시 당사국들이 합의했던 ‘자국의 국경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그리고 합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은 15년 후 독일 통일의 역사적 근거가 되기도 했다.²⁴⁾

22) 황병덕 외, 앞의 책, p.85.

23) 서보혁, “헬싱키 틀의 성립과정과 전략적 삼각관계,” 박경서, 서보혁 외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 (파주: 2012, 한국학술정보), p.28-29.

국내적으로는 서독의 경우 진보정부나 보수정부 모두 유럽의 분단이 완화되어야 독일의 분단도 극복될 수 있다는 인식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남북관계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독일에서는 유럽분단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NATO 잔류, 유럽통합 강조 등의 정책을 표방하였고 이와 동시에 양독관계의 제도화가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⁵⁾

2. 주변국 평화정책 측면의 시사점

독일의 분단이 전범국에 대한 승전국의 분할 통치의 결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분단의 해소, 즉 독일의 재통일에 대해 주변국은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국제정치적 환경에 놓여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의 분단이 평화를 위한 국제정치적 타협의 결과였기 때문에 독일의 재통일이 분단으로 인해 유지되어왔던 평화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는 지극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NATO 잔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나 유럽통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기존의 국제제도와 상충하는 측면 때문에 이해관계국들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통일을 실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동시에 선행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동서독 양국과 주변국 간에는 공통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할 문제들과 개별국가와 양자적 차원에서 이견을 조율해야 할 문제들이 혼재해 있었다. 이는 독일 통일 문제의 외교적 공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서독 정부는 이러한 독일 통일의 외교적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 기민하면서도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헬무트 콜 총리는 소련, 영국, 프랑스 등 이해관계가 상이한 개별 국가와의 회담을 통해 독일 통일의 효과가 일국 차원의 통합과 발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차원의 발전구상에 부합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통일로 인해 확대된 국가 역량을 지역 통합 심화 및 발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전파한 것이다. 콜 수상과 겐서 외무장관은 이를 위해 미국과 소련에 대한 양자외교는 물론 서독-미국-소련의 3자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활발한 통일외교를 전개했다. 독일이 전승 4개국을 포함한 '2+4 협정'을 통해 비로소 완전한 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복잡성을 시사하는 것인 동시에 서독 통일외교의

24) 우평균,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서독관계 변화," 박경서, 서보혁 외, 앞의 책, pp.269-270.

25) 황병덕 외, 앞의 책, p.96.

성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역시 궁극적으로는 냉전 형성기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 형성의 부산물이었던 분단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주변국의 이해와 협조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이 1952년 독일조약에 따라 전승 4개국의 동의 없이 양독간 합의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처럼 한반도 통일이 국제법적 승인에 구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다 남북한 양국이 이미 주권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에 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 합의가 갖는 상대적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문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에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이들 국가들이 남북관계의 독자적 진전과 통일논의를 바라보는 다양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통일 이후 한미동맹의 약화를, 중국은 주한미군의 38선 이북 주둔을, 일본과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상대적 영향력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한반도 상황 변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는 정치안보적 요소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요소까지도 포함하고 있다.²⁶⁾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당초 북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병행 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을 기반으로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비핵화 프로세스의 성과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보장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진전과 비핵화-평화체제를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이 긴장관계에 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통일논의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지나치게 앞서가는 상황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²⁷⁾

3.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주는 시사점

한국의 과거 대북정책은 정권의 교체에 따른 변화의 진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일관성 부재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정책의 비일관성은 남북관계 관리에 있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남북관계의 단기성 과주의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의 첫 번째 요건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과 균형적 발전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대북정책

26) 박종철 외,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27)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업무보고에서 통일부 뿐만 아니라 외교부 (통일시대를 여는 글로벌 신뢰외교)와 국방부 (튼튼한 국방을 통한 평화통일 기본 토대 마련)가 모두 나서 통일논의를 전면화했던 사례가 주변국에 어떻게 투영되었을지는 비판적으로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의 비밀관성은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동독 내부의 정치적 역동성으로부터 발원한 평화적 혁명이 우연한 계기를 바탕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독일 통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데는 서독 정부 내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온 대동독정책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서독 내부의 논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69년 집권한 브란트의 좌파 연립정부에서 1982년 집권한 콜의 우파 연립정부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양극화나 이전 정부의 대동독 정책을 전면 부인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진행되었던 ‘접근을 통한 변화’ 정책이 동독의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동독 주민들이 스스로 통일을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대북정책을 놓고 여야 또는 보수 및 진보세력이 지닌 인식과 정책노선이 양극화하는 상황에서는 평화통일 여건 조성이라는 과제 역시 요원해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평화통일 기반 조성작업을 정부나 국회, 또는 일부 명망 있는 단체들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이 선거 때마다 정파적 이해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주의적 합의를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최소주의적 합의가 마련된다면 이후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여 향후 이행과정을 감독하는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²⁸⁾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통일국민협약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현재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 시민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되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하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통일의 비전과 대북정책 구성요소 등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협약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²⁹⁾

평화통일 논의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접근 방식은 ‘평화’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말 통일부가 발표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에 이러한 인식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³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5개년 계획으로 발표하는 남북관계발전 기

28) 조한범,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29) 통일부, 통일국민협약 (<https://www.unikorea.go.kr/promise>)

30) 지난 2006년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후 정부는 2007년 11월 제1차 기본계획을(2008~2012년), 2013년 11월 제2차 기본계획을(2013~2017년) 각각 수립한 바 있다.

본계획(2018~2023)에서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던 제2차 기본계획과 통일논의 분야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준다. 당시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통일 준비(작은 통일 → 큰 통일)등을 명시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북한 붕괴, 흡수통일 및 인위적 통일 등을 추구하지 않는 ‘3-No’ 기조를 바탕으로 하겠다며 급작스러운 통일이 아닌, 남북 간 상호 공존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³¹⁾

서독 정부 역시 직접적으로 통일을 목표로 표방하는 외교가 아니라 모든 외교 목표를 조화롭게 실현시킴으로써 통일의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통일문제를 외교정책에 앞세우는 형태가 아니라 외교정책의 성과들이 서독의 대외적 통일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이다.³²⁾

특히, 베를린 장벽 설치를 계기로 서독 사회에서는 현실성 없는 당장의 통일 요구보다 분단 상황을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의 조성과 동독 정권이 동독 내부의 자유화를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대동독정책의 일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에 영향을 미친 이러한 인식은 서독 사회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기도 했으나 신동방정책 추진으로 동서독 관계가 활성화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³³⁾

V. 나가며

지금까지 독일 통일의 경험에 대한 재조명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유럽의 분단구조를 완화함으로써 독일의 분단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독의 노력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국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단계에 주는 의미를 검토해보았다.

31) 통일부,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및 2018년 시행계획 (https://www.unikorea.go.kr/unikorea/open/parliament/opCalculate/?boardId=bbs_0000000000000019&mode=view&cntId=54302&category=&pageIdx)

32)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 관리 외교정책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p.17-18.

33) 황병덕 외, 앞의 책, pp.36-37.

2019년 하반기에도 남북관계의 전망은 결코 밝지 않다. 당분간 북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한미공조를 비난하고 대미 직접협상만을 강조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비핵화 협상과 함께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방안을 함께 의제에 포함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비핵화 협상 구도가 다자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 전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경우 북한 체제안전 보장방안에 대해 한미한중간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선제적으로 밝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서독이 대동독정책에서 지속적 교류와 협력을 추구하는 동시에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 내 평화질서를 구축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경험은 한반도에서 비핵화-평화체제 연계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원을 달리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남북한과 동서독은 전쟁의 경험 유무, 교류협력의 기간과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분단과 상호 적대감의 수준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북한체제의 경직성이나 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 또한 과거 민주주의 제도를 경험했던 동독의 상황과는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교류협력의 경험은 외부와의 접촉이 진행될수록 적어도 북한의 변화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암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넘어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와 민간의 노력에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학성, “서독의 분단질서 관리 외교정책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김형기, 『남북관계변천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 박경서, 서보혁 외 『헬싱키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협력』 (파주: 2012, 한국학술정보)
- 박종철 외,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와 편익: 지역 및 주변국 차원,” (서울: 통일연구원, 2012)
- 성기영,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성공 가능성,” 『통일연구』 제17권 2호 (2013).
- 성기영 외,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손기웅, “독일 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 심익섭, M. 치맥 공편, “독일연방공화국 60년: 1949~2009 분단국가에서 민주통일국가로,” (서울: 도서출판 오름, 2009)
- 양창석, “브란덴부르크 비망록: 독일 통일 주역들의 증언,”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염돈재,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 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 이종석, 『갈날 위의 평화: 노무현 시대 통일외교안보 비망록』, (서울: 개마고원, 2014)
- 임동원,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서울: 창비, 2015)
- 조한범, 『지속가능한 통일론의 모색』,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 황병덕, 김학성, 신상진, “독일 통일 모형과 한반도 통일 모형의 비교연구: 독일 통일 모형이 한반도 평화통일 모형 개발에 주는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14)
- 황지환, “남북한관계의 국제정치학,”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이론』, 서울: 논형,
- Don Oberdofer,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Revised and Updated)』 (New York: Basic Books, 2001).
- Samuel S. Kim eds, 『Inter-Korean relations: Problems and Prospect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4).



『통일한국에서의 사회통합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1. 통일과 사회통합

□ 남북한 통일의 완성은 결국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음

- 물리적 통합을 기반으로 하여 사람간의 마음 통합, 그리고 정서적 통합, 본질적인 인간적 가치의 인정을 기반으로 한 통합이야말로 남북한의 실질적 통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본 글은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통합을 논의하고 있기에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음

□ 사회통합은 여러 범주를 내포함

- 문화부분, 생활부분을 포함하여 제도적인 통합이 이를 때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이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제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생활양식과 가치관 부분에서 끊임 없는 갈등과 충돌의 요인을 안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임
- 연구자가 언급한 사회문화적, 생활 부문에서의 통합은 그 무엇보다 통일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2. 갈등, 그리고 통합으로의 승화

□ 통일 한국의 모습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님

- 현재 남한이 겪고 있는 남남갈등과 경제적인 문제, 청년 실업, 저출산 등의 문제는 통일

한국의 이행 과정에서 극복하여야 할 요소임과 동시에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함

- 따라서 반드시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그려 이를 전제한 사회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미래의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해당 상황에서의 정책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됨

□ 복지 및 사회문화적 통합

- 그 중에서도 복지 요소는 사회통합 요소 중 가장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음
- 복지란 사람의 삶을 반영함과 동시에 복지를 통한 사회통합이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바이기도 하기 때문임
- 복지는 인간 삶의 총체적 모습과 경제적 풍요, 노년기의 삶, 웰다잉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또한 갈등의 해소 요소가 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보아야 함

3. 이등국민, 일등국민의 이분법 지양

□ 통일의 과정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분법을 지양하는 것

- 특히 북한 주민을 이등국민으로 대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함

□ 경제의 회복, 문화의 회복

-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정치체제에서 생활한 주민들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적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보임
- 이는 문화예술의 요소, 실질적 경제생활의 보장 등 많은 측면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4. 지자체간 교류의 확장

□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 우선 남북교류에 있어 지자체간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여야 함
- 남북협력기금을 지자체 교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게 유권해석이 바뀐 만큼 지자체간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하고 독일의 통일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통일한국의 마중물 역할을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함
- 더불어 대학간 교류, 북한 지역 학생들과의 교류 등 대학이 지향할 수 있는 통합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가야 할 것임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토론문

한혜진 (동아대학교)

본 연구는 독일 통일이 주는 시사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독일이 펼쳐왔던 통일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양독관계, 주변국 관계, 통일 기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차원별 정책의 특징과 그 교훈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을 논할 시 항시 언급되는 독일 통일의 케이스는 많은 본받을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서독 관계와 남북 관계는 서로 간 처한 근본적 차이점이 존재하는 관계로 그 대입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발제자는 이러한 점을 의식하며 타 연구자의 다른 견해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반도의 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발제자는 이러한 독일 사례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교류의 축적,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 주변 이해관계국들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정치지도자의 리더십이 평화통일에 있어 관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본 발제문의 완성도 제고와 토론자로서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대한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소주의적 합의를 추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미를 추가적으로 여쭙고자 한다.

둘째, 본 발제문에는 독일 통일 이후 발생한 사회적 병폐나 문제점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신나치, 네오나치, 심화되고 있는 동서독 간 사회적 갈등 등 독일 통일을 통해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요구되는지 고견을 구한다.

등재후보학술지 『평화와 종교』 제8호의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평화종교학회 편집위원회에서는 등재후보학술지 『평화와 종교』 제8호 기고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투고마감일 : 2019년 10월 31일(木)까지 원고를 받습니다. (12월 31일 발행예정)
2. 주제 : 『평화와 종교』는 평화사상과 그 일반, 종교사상과 그 일반 등에 관련된 논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3. 논문 투고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aprs.org/Login>)에 투고해 주시고 투고가 어려운 경우 학회메일(kaprs@naver.com)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 원고분량 : 분량은 A4용지 20매 또는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합니다.
5. 심사 및 게재원칙
 - 1) 투고하시는 분은 투고와 동시에 연회비를 학회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공동저자일 경우 게재가로 확정되면 모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3) 심사는 해당전공분야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4) 동일기관 소속논문은 해당 호에 2편까지 게재 가능합니다.
6. 기타 : 투고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aprs.org)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학회 사무국(041-530-888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평화종교학회 편집위원회

2019 한국평화종교학회 임원명단

직책	성명	소속
고문	김동규	고려대
	진성배	선문대
	이재영	선문대
	Thomas W. Selover	선학유피대학원대
학회장	김항제	선문대
부회장	조성윤	제주대
	이찬수	서울대
	이재일	선문대
총무위원장	김민지	선문대
총무이사	박은주	고려대
	최진식	국민대
편집위원장	주재완	선문대
	홍석훈	통일연구원
편집이사	고경민	이어도연구회
	안연희	선문대
	박병철	동아대
	오기성	경인교대
	정시구	선학유피대학원대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지충남	전남대
편집간사	박정현	선문대
기획위원장	강화명	선문대
기획이사	나용우	통일연구원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섭외위원장	주우철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섭외이사	임현진	선학유피대학원대
	오택용	선문대
연구위원장	황진수	선학유피대학원대
연구이사	오영달	충남대
	이은미	연세대
국제협력위원장	김인수	선학유피대학원대
국제협력이사	도현섭	선학유피대학원대
	황원재	테네시대(미)
감사	이강일	세한대
	문선영	선문대

